

**민주적 시민성 연구
결과 보고서**

2020. 1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제 출 문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장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민주적 시민성 연구」에 관한 최종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연구 수행 : (사)마을교육공동체함께배움
책임 연구원 : 심성보(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공동 연구원 : 김영미(사회교육센터 성장과비전 대표)
이다현(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 이사)
곽형모(자원봉사이음 실행위원)

<목차>

I. 연구개요

1. 민주적 시민성 연구의 배경
2. 민주적 시민성 연구의 의의
3. 민주적 시민성 연구의 목적
4. 민주적 시민성 연구내용
5. 민주적 시민성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1. 민주주의의 위기
2.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3. 민주적 시민성의 다양한 갈래
4.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시민성 구성 요소
 -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

III. 민주적 시민성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

1.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
2. 민주적 시민성의 덕목들
 - 경청, 자기성찰, 타자존중, 비판적 사고, 참여/실천, 공동체성
3. 민주적 시민성의 실현을 위한 과제

IV. 일상의 시민성 자기 진단표

1. 시민성 자기 진단표의 의의
2. 시민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3. 시민성과 덕목
4. 시민성 자기 진단표

V. 결론

1.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틈새 전략
2.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지평
3.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 부록 : 인터뷰 질문지

I. 연구개요

1. 민주적 시민성 연구의 배경

2017 촛불혁명의 핵심과제인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검찰, 사법부, 재벌, 언론 등 거대권력 교체뿐만 아니라 사회를 교체해야 한다. 사회교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에너지(사회적 자원)를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 사회적 자원은 권위의 힘을 빌어서 배분해야 하는 것(정치)도 있지만 비권위에 의한 배분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문제의식, 정의감, 참여의지, 인권, 배려, 사회적 신뢰, 연결망, 갈등조정 능력, 생명존중, 상상력, 공감과 연대 등은 분명히 사회를 움직이는 자원이지만 비권위적 배분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사회적 자원을 자기 안으로부터 내오고 배분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시민성이다.

촛불혁명 이후 고조되었던 민주주의 열기, 개혁의 동력이 최근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력에게만 맡기는 개혁은 정권이 바뀌면 물거품이 된다. 그렇다고 촛불만 가지고 개혁을 이룩할 수는 없다. 핵심은 생활-지역-정치를 연결하는 튼튼한 고리이다. 정치를 단지 정당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된다. 생활 속에서 정치를 싹트게 하고 정치에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관점이나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연결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는 매우 훌륭한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민주주의 훈련장은 강의 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편재한다.

한국은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으나 사회적 신뢰, 배려, 성평등지수, 청렴도, 공정성 등 생활민주주의에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신장되었다고 하나 언론에 대한 신뢰는 낮다. 교과서, 강의실이 아닌 가정, 일터, 시장, 거리, 식당, 지하철에서 시민들 스스로 실현가능한 민주주의 원리가 절실하다.

민주화 투쟁,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과정에서는 이념에 대한 의존이 크기 마련이다. 즉, 이념이 민주주의의 지주 역할을 한다. 그러나 투쟁 명분이 열어지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 자질, 역량,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 시민들은 물론 활동가들에게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민주주의적 태도, 소양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현가능한 지표가 필요하다.

87체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더 나은 민주주의의 상,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표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의회민주주의, 공정한 룰 무시, 각 단위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과행을 보이고 있

는 것은 아직 민주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증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훈련,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정치체제를 모니터, 견제할 수 있는 시민의 정치참여, 시민역량이 절실하다.

민주주의에 완성형이란 없다. 민주주의에 평생면역은 없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 언제든 취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민주주의의 면역력은 무수히 다양한 생활 요소가 얽혀있는 복잡계 속에서 형성된다. 시민들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 스스로를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갈고 닦는 주체는 시민이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으로서의 참여중심 교육기법이 많이 도입, 확산되었으나 배움-실천-배움에 이르는 선순환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배움의 결과는 단지 행동(action)이 아니라 실현(realization)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기법 중심 교육의 한계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러나 필수영양소 비타민은 알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 자질은 교육기법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생활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생각, 성찰, 관계 속에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 속 민주주의는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상의 변화가 가장 어렵다. 일상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일상의 습속은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일상은 깊은 바다 속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인류 역사에서 숭한 종교, 도덕, 개혁, 사회운동의 성과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일상이다. 일상의 배후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야 할 잘못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일상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기를 향한 질문, 성찰, 때로는 충격과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민성은 그러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2. 민주적 시민성 연구의 의의

민주주의는 제도와 사람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제도와 사람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1987년 6월항쟁은 소수 군부 독재세력에 의해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시민항쟁이었다. 그러나 87체제의 제도는 권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더구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결과 일어난 것이 2016 촛불항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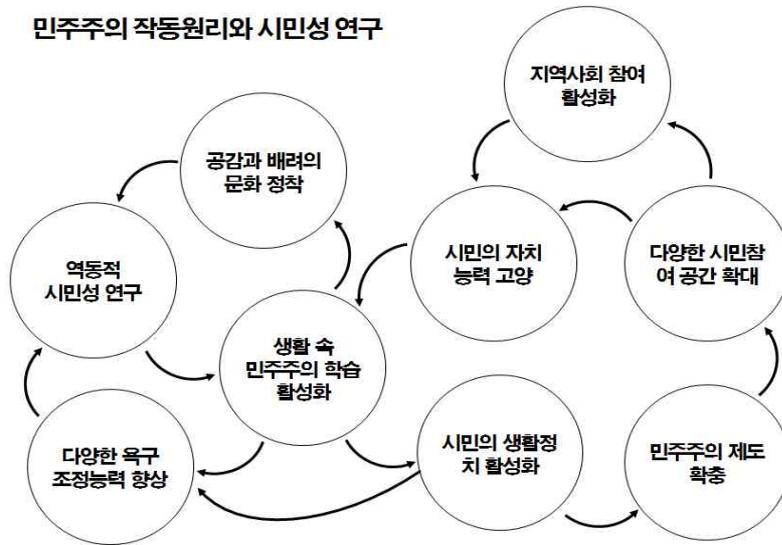
촛불항쟁은 지역간·진영간·세대간 대립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시민들은 다양하지만 하나된 목소리로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프지만 역사는 항상 고통을 딛고, 대가를

치루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촛불항쟁은 비록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드러냈지만 제도와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시민들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민주주의 교육장이었다.

그러나 촛불항쟁 이후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 민주주의 기반에 누적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6월항쟁 이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시민들의 요구가 용솨음 쳤던 상황과 비슷했다. 87체제는 언제까지 억압의 뚜껑을 닫아두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내용은 달랐다.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으나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갑질에 대한 폭로, 미시 폭력, 미투가 여기저기서 잇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혐오, 각자도생, 무기력, 정치적 허무주의에 찌든 우리의 자화상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공감과 배려, 소통, 참여, 협력의 가치를 되살릴 것인가. 그 핵심에 시민성이 있다. 시민성은 제도와 시민을 이어줌으로써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에 해당한다. 제도는 시민들의 공간을 확장시켜준다. 그러다가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다 싶으면 시민들은 다시 일어선다. 그렇게 제도와 사람은 서로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면서 발전한다. 따라서 시민성 연구는 개념, 역량이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 작동원리와 시민성 연구



3. 민주적 시민성 연구의 목적

- 1)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시민성과 덕목을 제시한다.
- 2) 일상에서 시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 3)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진단표를 개발한다.

4. 민주적 시민성 연구내용

1) 민주적 시민성에 대한 조사 연구

- ① 시민성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이론을 조사,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론적 토대 구축한다.
- ② 민주적 시민성의 기본요소를 도출한다.
- ③ 시민들 스스로 일터, 가정, 시장, 지하철, 학교, 식당, 공원, 민원실, 운전, 거리 등 다양한 생활 현장 속에서 시민성을 실현하기 위한 덕목을 제시한다.
- ④ 시민성 실현의 제약 요소, 장애물을 밝혀냄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⑤ 시민성의 실현을 위한 조건, 환경, 방법, 과제를 제시한다.
- ⑥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장의 제안을 담는다.

2) 시민으로서의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및 덕목에 대한 자기진단표 개발

5. 민주적 시민성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 자료 수집 및 분석, 선행연구 검토 : 시민성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연구 성과

2) 인터뷰

① 인터뷰의 목적 및 방향

- 현장의 경험과 콘텐츠를 일상에서 실현 가능한 시민성으로 결집한다.
- 교과서적인 시민성이 아닌 일상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현장의 풍부한 사례 수집한다.

② 인터뷰이 선정의 기준

- 각 활동분야 10년차 이상 활동가, 민주시민교육 강사
- 지식, 태도, 기술, 참여, 행위주체 등의 분야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되 현장의 정련된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인터뷰이

연번	방향	활동분야	초점	활동경력
1	지식	정치교육	사회운영 시스템(헌법, 정치제도 등)에 대한 이해	30년
2		다문화	열린 세계관, 배타성의 극복	15년
3	가치 및 태도	성평등교육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실현	11년
4		인권	인간에 대한 존중과 권리의식	20년
5		노동	주인으로 살기 위한 전략, 시민성에 대한 인식	28년

6	참여	자원봉사	경험을 통한 시민 성장	27년
7		풀뿌리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 성장	27년
8	기술	갈등조정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관계기술	16년
9		토론교육	삶의 기술 터득	10년
10	행위주체	청소년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태도	30년

※ 본문에서 인터뷰이는 각각 활동분야로 표기함

3) FGI

① 조사 목적 : 전문가들로부터 시민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문제의식을 수렴한다.

② 조사 대상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2명, 교육운동가 1명

※ 본문에서는 FGI 1, 2, 3로 표기함

③ 주요 질문

- 교과서적 시민성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시민성이 관념화 되는 것 같다. 시민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와 밀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 민주시민교육은 아직 참여중심 강의 방법론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안되어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까?
- 민주시민교육 영역에서 기획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민성 혹은 역량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민성의 6대 덕목에 대해서는 견해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덕목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가? 그러한 덕목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II. 이론적 배경

1. 민주주의의 위기

플라톤은 『국가론 *The Republic*』에서 민주주의를 “동등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모든 개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그는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까지 몰아간 민주주의를 두고 현자를 무시하고 주변으로 몰아낸 제도라고 질타하였다. 이렇게 민주주의¹⁾의 역사는 종종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주의는 논란이 많은 제도이긴 하지만 인류가 보존해온 규범의 집합으로서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는 이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어떤 제도보다도 민주주의 제도가 인간의 삶에서 있어 필수불가결한 이유는 경험을 하는 규범들을 연계하고 중재하는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해관계와 가치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는 공적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합리적 방법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상이한 규범적 관심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만드는 지침 및 방향을 제시해 왔다(Held, 2015: 492). 동등하게 태어난 사람들 사이의 상호대화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제도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오류가능성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는 변화의 프로그램을 통해 절박한 실제적 이슈들에 대해 숙의·토론·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체제에서보다 더 잘 제공될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는 사회의 정책 및 변화의 가치를 측정하며,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협력이 단지 법, 습성 혹은 강압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민주주의는 미완성의 제도로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성공할 수 있다.

헌법 제 1조가 명시하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결합한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공화국이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및 간접 선거에 의해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로 나라의 주권이 군주나 특정한 통치자나 소수의 귀족들이 아닌 일반 시민 다수에게 있는 정치체제인 공화정을 도입한 나라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공화국 중 주권(主權)이 국민 전체에 있는 국가를 말한다. 결국 ‘민주공화국’이란 정치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자유와 평등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 권리들을 보장하고, 우리와 우리 학습자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며 번영토록 우리가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나라이다. 민주(民主)는 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공화국(republic)은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res publica)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욱 민주공화국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꽃피우려면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공유와 나눔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²⁾를 **재구성**

1) 민(demos/everyone/whole people)이 다스리는 정치인 민주주의(democracy)의 유형은 크게 직접 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대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시민사회 민주주의 등으로 나누어진다.

2)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국가의 상관 개념으로써 국가의 바깥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총체로서 국가 및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율적인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국가의 민주적 운영이나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 실천은 더디기만 하다. 민주주의를 국가권력의 부정의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개념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민주주의를 정당과 투표 등 선거제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토론수업만 하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가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드물지 않다. 점점 더 고도로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너무도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일이라 여기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부 기득권자들은 민주주의를 기존 질서를 흔드는 이념으로 생각하여 불편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리하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실천을 소홀히 하는 모습도 보인다. 민주주의가 ‘삶의 양식’이 아니라 정치 또는 제도로만 좁게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우리의 현대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김정인, 2015)의 여정을 밝히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오랜 여정 속에서 민주주의 제도는 끊임없이 굴절되어 왔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누가 시민이고, 시민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해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민주주의 결손’(democratic deficit) 경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놀랄 만한 압축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를 이뤄냈는데도 아직 성숙한 시민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시민이 형성될 수 있는 물질적 성과는 달성하였었지만, 시민계층은 오직 경제적, 사회적 상승욕구에 가득 차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를 이끌 행동양식과 정신적 자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러하기에 오늘날 민주주의가 뿌리조차 흔들리는 조짐을 보인다. 민주주의 위기는 곧 시민성의 위기이고 주체³⁾의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이 다시 호명되고 있다. 이것이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시대적 과제이다.

2.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시민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민주적 삶의 방식과 행동에 밀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민성의 요소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근저에는 민주

3) ‘주체’의 어원인 ‘sub-jectum’(subject)에는 이중적 의미-아래에 던져진 것이자 주체-가 깃들여 있다(이정우, 2009). 이중체로서 자기를 스스로 구축하고 설립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Foucault, 2001: 13). 푸코는 자기를 가꾸는 자기 삶의 예술가를 ‘주체’라고 하였다. 예측화를 극복하는 주체의 주체성은 재해석되고 복원되고 재-기입될 수 있다. 주체는 스스로 알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수동적으로 앞을 열고 행동하는 ‘객체’와 다르다. 일찍이 헤겔이 심오하게 분석해 주었던, 타자성(otherness) 없이는 주체성(subjectivity)도 없다. 스스로를 의식하는 개체, 즉 ‘주체’(subject)는 자기와 타자를 가름으로써 주체가 된다. 나를 나 ‘이다’라고 긍정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아닌 타자를 내가 ‘아닌’ 존재로서 나로부터 구분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아님’을 매개해서 나 ‘임’으로 되돌아올 때에만 인간 고유의 자기의식이 가능하다(이정우, 2009: 18). 이런 가름과 되돌아옴으로부터 자기의식이 탄생한다. 이 자기의식은 그 의식의 주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주체는 자기의식을 가짐으로써 고도의 역능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행복하며, 타자와의 불연속이라는 근원적인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불행하다. 자기의식을 갖춘 존재는 그 자기의식에 집착하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한 불연속을 메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모순된 존재 또는 이율배반적인 존재이다. 수많은 주체들은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며, 그리고 이 계열의 사이에 다양한 방식의 이어짐, 끊어짐, 갈라짐, 합해짐, 엇갈림이 성립한다(이정우, 2009: 91).

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성이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시민은 개별적 인간이지만, 모든 개인이 시민은 아니다. 시민은 국민국가에서 살며, 국가에 대한 권리와 권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있다. ‘시티즌십’(citizenship: 시민권/시민성)⁴⁾은 개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지역 사회 또는 국가와의 관계를 말한다. 시티즌십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국가나 어떤 종류의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이 되는 참여,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나 자격의 체제이며, 그리고 그 성원이 지녀야 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민성이란 시민들로 하여금 공적 삶에서의 갈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감과 상호존중을 촉진하는 것이며(Barber, 1984: 190, 223), 선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며(Walzer, 1974: 603), 시민들이 서로를 평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 금지 원칙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Kymlicka, 2005: 298-300). 따라서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 기능이 활성화되고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티즌십’이다. 시티즌십은 사람의 형식적 법적, 정치적 지위, 그리고 소속감이며, 또한 사람의 잘살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관련된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포괄한다(Sant, Davies, Pashby & Shultz, 2018: 5). 시민권/시민성을 지닌 시민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태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참여의식을 가지고, 보다 나은 집합적 결정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시민권/시민성이 구현되는 시민사회는 대화의 장이며, 시민적 대화가 진행되는 영역이다. 시민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킴으로써 담론의 시민권/시민성을 복원하고, 시민의 정치적, 사적 대화를 보다 공적이며, 의미 있게 만들어내감으로써 시민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⁵⁾

시민권을 포괄하는 시민성 개념은 공동체와 국가의 본질이 무엇이나, 포용이나 배제나,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것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를 구성요소로 한다(Cogan & Derricott, 2000: 2-7; Davies, I. 2012).

- 권리/지위: 권리(rights) 또는 지위(status)는 시티즌십의 가장 본질적 요소이다. 시민의 권리는 사람의 보편적 인권이다. 국가의 구성원이 어떤 권리나 자격(지위의 평등, 투표권, 결사와 표현의 자유 등)을 갖는 것이다(이 경우 ‘시민권’으로 주로 번역됨).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집단 구성원이 부여하는 이익을 향유할 자격, 즉 획득권한(entitlements)을 갖는 것을 말한다. 획득권한은 공민적·법적 권리(나라 밖을 여행할 때 국가의 보호를 받을 법적 권리와 자격 등), 정치적 권리(민주적 참여, 대의권,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인하 등 투표할 권리, 공공 문제에 참여할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학교를 다닐 권리, 사회적 안정을 보장받을 권리)로 구체화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시민의 지위는 억압적 정치권력과의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법률적 의미에서 권리는 갈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권한

4) ‘citizenship’의 어원은 그리스어 ‘*politeia*’, ‘*politike*’, ‘*politicon*’, ‘*polis*(city-state)’, 라틴어 ‘*civitas*(citoyenne)’, 독일어 ‘*Burgh*(fortress: 성/요새, town)’, 터키어 ‘*Vatandas*(citizen)’, 아랍어 ‘*Vatan*(homeland)’에서 유래하였다. ‘citizenship’은 ‘시민성’(civic virtue/civicness/civility) 또는 ‘시민권’(civic rights/entitlement)으로 번역한다. 시티즌십을 ‘시민성’으로 번역할 경우 ‘시민으로서의 태도나 행동’로, 시민권으로 번역할 경우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말한다. 오늘날 시민성은 인권 등 시민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5) ‘시민성’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타인을 고려하고 비-독단적인 관용을 베푼다는 의미를 함축한다(Barber, 2006: 172).

을 부여한다. 따라서 시민권은 자의적인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시티즌십은 권리(rights)와 의무(duties) 사이에서 긴장이 일어난다. 지위(status)로서의 법적 권리로 구성된 시민권(법적 본질)과 규범적 의미의 의무로 구성된 시민성(도덕적 본질)은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의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양자는 서로에게 무게 중심을 달리하고 있다. 한 사람의 ‘좋은’ ‘효능적’ 시티즌십은 공민적 권리⁶⁾와 정치적 권리⁷⁾는 물론이고, 충분한 사회적 권리⁸⁾를 행사하는 것(Marshall, 2013)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민적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⁹⁾

- 의무/책임: 시티즌십은 권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이 경우 ‘시민성’으로 주로 번역됨). 법적 지위와 어떤 집단에 대한 헌신과 관련하여 시민은 권리와 책임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갖기를 바란다. 책임은 권리로 부터 나온다. 시민성은 권리의 요소와 더불어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권리는 자격을 요구하고, 지위는 책임을 수반한다. 개별적 권리의 지나친 추구가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⁰⁾ 개인적 수준에서의 책임은 권리행사에 따른 자기¹¹⁾ 책임성을 의미하며, 정치사회의 수준에서 민주적 책임성은 권력에 대한 상호견제와 감시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의미한다. 즉, 권력 기구 간에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며, 또한 대표가 시민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시민은 대표의 권한행사에 대해 감시하고 심판하

6) 공민적 권리(civil rights)는 ‘지위상의 자유’와 결부된다. 신체의 자유, 언론·사상·신앙의 자유, 재산 소유하고 유효한 계약을 맺을 권리, 그리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개인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다른 권리들보다 더 우선적인 위상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기 때문이다.

7) 정치적 권리/정치권은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구성원 또는 그러한 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있다. 19세기까지 정치적 선거권은 한정된 경제적 계급의 특권이었다.

8) 사회적 권리/사회권은 약간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부터 사회적 유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누릴 권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는 교육체계와 사회서비스이다.

9) 마셜은 시민권의 세 가지 요소인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구분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20세기에 사회권의 중요성이 증가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자유시장, 탈규제,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한 국사회의 대한 비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분리는 자유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의 분리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10) ‘책임’(responsibility)과 ‘의무’(duty) 사이에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의무’를 갖는다고 할 때 도덕 규칙은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한다. 예를 들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처럼 말이다. 그러나 ‘책임’은 의무적인 반면에 그것이 요청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개방적이다. 당신은 특수한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할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의무를 행할 때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갖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른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한 권한은 책임을 가진 행위자에게 있다.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구조적 부정의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Young, 2018: 244-245). 모든 책임은 어떤 면에서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 행위자들이 나쁜 의도 없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일을 했는데도 부정의가 발생할 경우, 그 부정의를 만드는 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빈곤의 발생 원인으로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구조) 둘 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1) 자기는 실체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가 맺는 관계들의 총체이다. 자기는 윤리를 특징짓는 다양한 실천과 기술 등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다(Foucault, 2016: 33-34). 자기라는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 발전된 기술들의 상관물이나 다름없다.

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기구나 대표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 참여/실천: 모든 시민(구성원)은 의견개진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공적(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예 발언권, 선호의 결정권, 참정권 등). 또한 모든 시민은 결사체(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결사의 자유). 시민성 형성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양식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탄생은 민주적 삶의 누적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 없는 시민성은 허상이다. 실천이 쌓여야 시민성은 형성된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영역이지만, 제도의 주체¹³⁾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매일의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문화이자 교육의 영역이다. 시민성은 특정의 민족 국가 구성원으로서 뒤따르는 권리와 의무의 수행에 대한 지위로서의 시민성뿐 아니라 논의, 행동 그리고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실천’으로서의 시민성을 요구한다. 참여하는 시민성은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공공적 삶과 지역공동체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시민은 비판¹⁴⁾을 통해 참여를 해야 한다. 비판은 일하면서 싸운다. 비판은 한편으로는 권위,

12)인간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진 채 공정성을 잃지 않는 ‘정의’(justice)의 개념은 몫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을 각자에게 지불하는 것”라고 역설하였다. 롤스는 『정의론』(1999)에서 사회정의의 주제를 “주요한 사회제도가 근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 협력에서 나오는 이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롤스는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 기본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기본 구조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전망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므로 정의의 원칙은 개별적인 거래보다는 배경 조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awls, 1999: 6-7). 정의는 “사회의 모든 성원이 동료로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Olson, 2016: 133). 국가의 재분배 조치는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개인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 분배 정의의 첫 번째 요건은 공유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기반 시설, 즉 우리의 사적 생활의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그것에 어떤 일정한 형태를 부여하는 공공 부문이다. 분배 정의의 두 번째 요건은 공공 공급의 체계다. 기반 시설은 능력을 부여하지만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병든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과 실업자 등을 돌봐야 한다. 분배적 정의의 세 번째 요건은 기회의 평등이다. 기회의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도 정치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고 항상 일련의 구체적 문화 가치와 사회 인식과 관련해서 결정되어야 한다(Walzer, 2009: 151-161). 부정의(injustice)는 누군가 부당하게 불운을 겪고 있다고 말할 때보다 더 강하고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Young, 2018: 75, 80). 우리는 취약한 사람들이 머무는 환경 안에서 그 환경에 속한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된 특정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부정의는 사람들이 자기 운명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 그 이상을 뜻한다. 부정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도적 규칙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사람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가에 관심을 둔다. 우리는 제도적 규칙, 사회적 관행, 구조적 관계가 개혁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구조가 생산하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3)주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으로 되어간다. 주체는 시간의 지평 위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경험이란 ‘겪음’이다. 주체는 살아가는 한, 끝없이 겪음에 처한다. ‘처/處’ 함은 어딘가에 놓임이고, 어떤 상황의 닦쳐움이다. 사물들에 대한 지각, 타인들과의 만남, 특정한 사건들과의 부딪힘, 어떤 일에서의 성공과 실패, 특정한 사회와 시대에 태어남, 인간으로는 태어남, 이 모두는 겪음이고, 처함이고, 닦쳐움이다. 시간과 장소, 타자들과 시간들이라는 근본 구조/생성하는 구조에서 겪어감이 살아감이다. 산다는 것은 곧 겪는다는 것이고, 겪는다는 것은 시간의 지평 위에서 끝없이 생성하는 차이들을 겪는 것이다. 주체는 시간들의 총체-열린 총체-를 가로지르면서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누군가가 ‘산다’는 것을 뜻한다(이정우, 2009: 37)

14)‘비판’은 진실과 권력이 결합해 발생하는 효과들의 총체이며, 진실이 유발하는 권력 효과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주체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다(Foucault, 2016: 48). 비판은 인간

전통, 권력의 남용과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보충물인 관성, 맹목, 환상, 비굴함과 싸운다. 비판은 민주적 정치체제 및 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자원이다. 민주주의는 순종하는 시민이 아니라 성찰¹⁵⁾ 하는 시민을 필요로 한다.

- 정체성/소속감: 정체성은 존재보다 성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장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타인의 신뢰와 존중은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식을 통해 얻게 된다. 여기에서 비롯된 시민성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은 지역공동체에서 공동체 내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며 시민성을 경험한다. 시민성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정체성’¹⁶⁾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시민성은 집단적 정체성의 원천임은 물론이고 소속감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소속감과 결부된 유대감을 공유함으로써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이고 변동적이고 중복적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낯선 사람의 배제는 경계(liminality; 사이에 낀 공간)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차적으로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체성은 소속/포용과 배제/소외의 경계를 만든다.¹⁷⁾ 정체

들의 통치/통치성을 문제 삼는 태도이며, 개인의 결정에 의거해 전체의 구원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하는 투쟁의 형태로 수행된다. 자발적 불복종의 기술, 숙고된 불순종의 기술인 비판은 한마디로 진실을 둘러싼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 속에서 탈-예속화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갖는 것이다(Foucault, 2016: 47-49). 비판의 기능은 새로운 인식들을 습득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악습들, 군중과 나쁜 스승 그리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온 모든 그릇된 의견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배운 것을 버리는 것은 자기의 발전(자기수양)에 중요한 과업이다(Foucault, 2016: 115). 또한 자기수양은 투쟁의 기능도 갖고 있다. 자기 실천은 이제 항상적인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에게 평생 동안 싸울 수 있는 무기와 용기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자기수양은 치료의 기능도 갖고 있다.

- 15) ‘省察(성찰/reflection)’이란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찰한다고 하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한다. ‘성찰’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을 반성하며 살피기’라는 뜻이고, ‘자아성찰’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 반성하고 살피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찰과 자아성찰의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성찰’이 마음과 행동 모두를 아울러 반성하며 살피는 것이라면, ‘자아성찰’은 주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춘 사고/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인데,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돌아보면 나 스스로 분석하는 것이다. 성찰을 통해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데 동물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성찰은 듀이는 ‘반성적 사고’라고 이해한다. 합리성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념을 확립하려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성찰은 우리의 사고나 신념체계가 가지고 있는 왜곡을 수정하고 발전적 학습으로 지행하 가기 위한 동인의 역할을 한다. 성찰은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성찰’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자신의 경험과 학습한 내용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특정 집단에 속해 팀원들과 토론 및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을 의미한다.

- 16) 정체성(identity)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idem*(‘같은’)에서 유래되었다. ‘정체성’(identity)과 ‘동일시’(identification)는 어원이 같다.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간의 차이를 구성한다. 인간의 정체성은 자아의 정체성이며, 자아는 인식 대상으로 이해된다. 자아의 존재는 자기인식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은 자기인식의 문제이다(Taylor, 2015: 110). 나는 대화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만 자아이다. 자아는 대화의 망 안에서만 존재한다. 자아의 중심에 이루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의해 준다. 정체성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하는 역할, 사물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하는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체성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곧 철폐한 형태의 방향 감각 상실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Taylor, 2015: 66-70).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또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불-확신으로도 볼 수 있다. 그들은 틀이나 지평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물들은 안정된 의미를 취할 수 없고, 어떤 삶의 가능성들이 좋은 것, 의미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삶의 가능성들이 나쁜 것, 하찮은 것인지 분별될 수가 없다.

- 17) 민주주의 역사는 포함(inclusion)의 역사일 뿐 아니라 배제(exclusion)의 역사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 배제는 민주주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예를 들어 공동체는 통제, 길들이기, 강압, 조종될 억압적일

성의 내용은 한 집단이 공유하는 견해와 이데올로기 등 특정문화의 더 큰 서사에서 나온 규범과 가치가 다소간 서로 연관된 전체이다. 시민성을 형성하는 정체성에는 국가나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다르게 느끼는 감정,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¹⁸⁾, 순화된 애국심, 다양성/다름의 인정 등이 포함된다. 이들 가치는 국가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도 기여한다. 한 사람의 시민적 정체성은 그의 계급, 국가, 세계시민적 정체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 집단의 연속선은 경계선을 유지하는 능력, 즉 소속된 사람들과 경계선 안에 사람들 그리고 외부인, 외국인, 이방인 사이의 구분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불안한 사회에서는 바우만이 역설한 대로 흔들리는 정체성, 즉 ‘유동적 정체성’(liquid identity)이 형성된다.¹⁹⁾ 시민성은 집단적 정체성의 원천임은 물론이고 소속감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소속감과 결부된 유대감을 공유함으로써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느끼는 소속의 충동은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적 이해관계를 희생하도록 자극한다. 또한 이 충동은 개인에게 공동체의 규칙과 가치를 따르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차이/다름(difference)의 공동체보다 동질성/같음(sameness/uniformity)의 공동체를 강조할 경우 패배성과 전체성을 떨 가능성이 있다.²⁰⁾ 공동체의식(동화,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되려는 마음)과 같은 정체성 발달은 개인주의(분리, 자율의 추구)와의 긴장 지대를 형성한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이주와 기술 및 경제 관계의 변화는 국가의 일치된 통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세계화의 과정은 초국가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외에도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 수준에서 종종 정치적 활동이 수행되는 등 지역사회에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이데올로기나 폭력적 억압이 덜해 문제가 안 된 국가-최초의 도시국가(polis)로부터 시작하여 국민국가(nation-state)에 이르기까지-로부터 발전되었다. 국민국가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시민성의 한 요소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애국심’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²¹⁾ 이는 세계적 시민성과 마찰이 일어난다. 그런데 세계적 시민성은 민족의 정체성이나 국가적 시민성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나라에 대한 사랑과 같은 최소한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²²⁾

가능성이 있기에 민주적일 필요가 있다. 즉, 민주주의, 의사결정, 소통, 돌봄 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한 극단은 공동체의 보수적이고 향수적인 관점에 더해 본질적으로 위계적이고, 사회적으로 억압적인 정적인 인간관계 모델을 선택한 반면, 또 다른 극단은 진보적이고 해방적이고 역동적인 모델을 선택한다.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위계적이고, 사회적으로 억압적이고 그리고 정적인 모델, 그리고 진보적이고, 해방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인 모델 간의 비판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지점에서 서 있다(Martin, 1987: 12). 따라서 차이/다름의 정치를 위해 인정의 철학과 윤리를 요청한다.

18)공동체(communitas)는 라틴어 ‘communitas’, ‘communio’에서 파생된 뜻이 갖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도시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유사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관심을 공유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또한 상호 관심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Simpson, 1982: 121). ‘공동체’의 개념은 인간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뜻을 포함한다.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친밀감, 소속감, 의미감, 연대감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소속감, 연속성, 타인과의 연대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중요하게 만드는 사상과 가치에 대한 연대감과 같은 욕구들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 물리적 이웃, 또는 공동의 이익(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민족적)과 관련된 사람들의 집단과 관련이 있다.

19)흔들리는/불안한 정체성은 정해진 경계를 넘어 경계성 인격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0)정체성은 일차적으로 사회정치적 정체성을 가리키며, 이는 국민적 정체성이나 계급적 정체성, 인종적 정체성 또는 성적 정체성의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21)애국심 양양은 고취되고 있는 집단적 가치와 감지되고 있는 위협뿐 아니라, 누가 ‘포함’ 되고, 누가 ‘배제’ 되느냐를 규정한다.

22)폐쇄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애국심 고양도 위험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세계시민교육은 국적 없는 시민을 길러낼 뿐이다. 따라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은 다문화와 공존하면서 ‘순화’

시민권/시민성은 시민을 국민국가와 이어주는 권리, 의무, 그리고 정체성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Banks, 2014: 274). 일반적으로 시민성 이론은 자유주의적 시민성, 공동체주의적 시민성, 그리고 시민공화주의적 시민성으로 분류한다. ‘자유적 시민성’은 독립적 자기이익을 가진 개인, 평등한 권리, 법의 규칙 등을, ‘공동체적 시민성’은 소속의식, 집단의 정체성 및 권리, 공동선의 추구를, ‘시민적 공화주의’는 책임과 시민적 덕성, 공적인 문제에 참여를 강조한다.

이론적 접근	주요한 특징	강조점
자유주의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성은 각 개인에게 법에 부여된 동일한 형식적 권리를 누릴 지위이다. • 정치적 영역의 기능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화하는 것이다. • 시민성은 민족국가의 수준에서 개념화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자기-이익적 개인 • 평등한 권리 • 법의 규칙
공동체주의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성은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의식과 공동체와 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일어난다. • 시민성은 사회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의식 • 집단 정체성과 집단의 권리 • 개별 이익의 추구보다는 공동선의 추구
시민-공화주의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성은 공동의 공적 문화-개별적 집단 정체성보다 강한-와 특정의 민족국가에 대한 소속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포괄적 시민적 정체성이다. • 시민성은 실천으로서 시민성의 이념으로 이끄는 권리와 책임에 의해 정의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시민적 덕성 •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

Jochum, et al., 2005

자유주의자들(liberals)은 평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시민적 공화주의자들(civic republicans)은 실천으로서 시민성의 이념으로 이끄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다.²³⁾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들(communitarians)²⁴⁾은 개별 이익의 추구보다는 공동선의 추구, 자율성보다는 소속감, 개인주의보다

된 애국심'(purified patriotism), 즉, 사려 깊은 성찰적 애국심을 요청한다. 누스바움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기르는 감정교육을 중시하면서도 비판정신과 자유를 지지함으로써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부드러운 애국심은 맹목적 애국심을 비판적으로 보며, 파시즘의 등장을 위협스럽게 본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정신을 바칠 것을 맹세한다.”는 통일된 단합 정신에서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몸과 정신을 바칠 것을 맹세한다.”는 것으로 바뀐 것은 ‘비판적 애국심’의 전형을 보여준다.

23) 자유주의자가 자유를 강압의 부재로 이해하는 경향을 확고하게 거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며, 시민의 정치활동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칭송한다. 공화주의는 ‘덕성을 갖춘 시민들의 자치(self-governing)’로 이해한다. 여기서 덕성이란 개인적 차원에서의 훌륭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역량의 함양을 위해 정치교육을 요청한다. 공화주의는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에서 말한 대로 정치현실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반대가 건강한 정치를 창조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 시민적 공화주의 등 현대 공화주의자들은 또한 자본주의 경제가 조장하는 개인주의와 소비자 사회를 비판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지닌 한계를 강조한다.

24) 1960년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집단주의’였다면, 1980년대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주의’가 지배적이 되어갔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가 부활하였다. 이것은 지나친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 등 세기말적 위기를 구출하려는 이념으로서 ‘공동체’의

는 집단의 연대²⁵⁾를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시민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에서는 존재론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고, 개인 자체를 정치적 공동체와 연계한다. 그래서 비-성원들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권리의 보장을 통해 공동체의 성원과 친밀한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통합되며, 이런 특징을 갖는 시민성의 권리 요소는 법적 지위로서 역사적으로 로마적 시민성 개념에서 도출되었다. 시민성의 시민-공화주의 전통은 인간사회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공공 문제에 대한 참여를 강조한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전통은 개인의 정체성이 시민성은 사회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3. 민주적 시민성의 다양한 갈래

생활 속 권리와 책임 행사, 작은 실천, 국가와 사회의 변화가 이론적으로는 잘 연결될 수 있지만, 막상 현실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시티즌십’은 딜레마와 역설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경합적 개념이다. 시민성은 그 개념적 복잡성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만들어낸다. 시민성 개념에 대한 이슈를 둘러싸고 서로 간에 더 많은 긴장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성은 사적 덕목인가? 아니면 공적 덕목인가? 시민성은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즉 예의나 예절인가? 아니면 정치적 태도와 행동인가? 시민성은 불평등과 현상유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보수성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민주적이고 비판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인가? 시민성의 가치는 시민성의 고유한 도덕적 중요성에 있는가? 아니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기능적 효과에 있는가?

시민성은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공익적 지향이기도 하다. 시민성은 복잡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가치, 노력, 그리고 제도적 실천이다. 경합적 개념인 시민성 개념은 일반적으로 권리/자격+의무/책임+참여/실천+정체성/소속감을 구성요소로 한다. 어느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달라진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시민성+교육의 종합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개념 결합과 이에 따른 지향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지형으로 나타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민성의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것의 근본을 구성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원자주의가 초래한 도덕적 공백 사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공동체의 현대적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자본주의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5) ‘연대’(連帶/solidarity)는 특정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행동을 같이 하거나 뜻을 함께하는 행위이다. ‘연대’는 입장을 함께하기로 한 개별적이고 비슷하지 않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다. 연대감은 소속감, 함께 함, 타인과 하나가 됨, 협력, 동반자의식을 말한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 구성원들 간의 연대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 시작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신뢰했을 때 구성원들 간의 연대가 강화된다. 연대는 늘 구축과 재구축 과정에 있다. 2005년 12월 22일 유엔총회에서는 21세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연대를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 가치 중 하나로 인식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년 12월 20일을 국제 인간 연대의 날로 제정하였다. 작은 공동체부터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적 연대는 평화, 다양성, 빈곤 완화,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본다.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연대의 가치와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목적/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세계관이 발현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관점을 가진 사람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시민성은 한 정치체제에서 개인 성원을 규정하는 실천의 집합(문화적, 상징적, 경제적)인 동시에 권리와 의무의 묶음(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이다. 시민성은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성원, 그 성원과 연계된 집단적 이익과 권리들, 그리고 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구성요소로 한다(Bellamy, 2008: 12). 이것들은 시민적 평등의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함께 연동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국가 중심의 시민성 논의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글로벌 시민성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역동성은 민족국가로 하여금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적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민주적 시민성의 구성요소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민주적 시민성의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그래서 경합적이다. 민주적 시민 또는 민주적 시민성은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결합이다. 시민성의 민주주의 성격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민주적 시민성’은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국가정책의 의제로 채택되고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일수록 저항적 또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주창된다. ‘민주적 시민성’은 시민들 사이의 평등성과 상호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민주적 시민성은 힘이 행사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태도를 서로 통제한다. 민주적 시민성은 지배하기도 지배받는 것이기도 하기에 평등한 관심과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치지도자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동료 시민을 통제하기도 한다. 민주적 시민성은 국민국가의 다양한 집단들이 인권과 정의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확보가 가능하다. 민주적 시민성의 요청은 곧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민주화 요구로서 견고한 사회정의(빈곤 해결과 재분배 등)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회협약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는 아이들이 보다 개방적인 성찰적 사회에 살도록 하는 비판정신의 함양을 위한 시민성 교육의 요청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시민적 민주주의로 설정하고, 그것의 당위적 규범으로 시민성(citizenship/civiness/civility)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을 더욱 필요로 한다. 민주적 시민성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사소통의 진보를 위한 참여민주주의로 이동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적 시민사회에 가장 부합하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리스 영과 데이비드 헬드는 민주적 시민성으로서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강조한다. 숙의 민주주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숙의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다. 숙의 과정을 통해 사적인 선호를 공적인 조사나 검증에 견딜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적 숙의는 이해관계의 언어를 이성의 언어로 바꿀 수 있고, 집단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숙의는 정보의 공동 이용이나 견해의 교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주장들을 검증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Held, 2015: 451). 숙의는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형식이다. 숙의는 시민과 대표 사이에 민주적 대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으로 동기화된 합의를 목표로 한다. 그것은 그러한 의사결정 체제에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의나 또는 그와 충분히 가까운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다수결이 사용된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민주적 생활의 질을 발전시키고 민주적 결실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숙의적 요소를 포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시민성의 중심적 개념인 ‘숙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숙의는 당사자가 직접 대화와 토론·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화, 토론, 그리고 숙의를 통한 시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당성이 높다. 숙의는 주의 깊은 사고와 성찰,²⁶⁾ 대안의 고려뿐 아니라 집단적 판단을 내리는 공론화²⁷⁾ 과정을 필요로 한다. 숙의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잠재력은 바로 ‘시민성’ 함양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공간으로서의 공적 영역은 시민성 발현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근대성(modernity)은 개인성의 발현 공간으로서의 ‘사적 영역’의 진화에 공헌했던 만큼, 이와 동시에 시민성의 성립에 바탕을 둔 ‘공적 영역’의 태동을 촉진시켰다. 숙의 민주주의는 사회성원들의 개별성과 시민성의 수준에 상호 의존하면서 인간성의 두 차원을 개발·고양시킨다.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목표는 생물학적으로 새로 탄생한 인간을 ‘개인’과 ‘시민’으로 계몽·형성·변형시키는 재탄생 과정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적 삶은 소비자라는 이미지를 가진 인간들의 탈정치적인 삶이 되어버렸다. 민주주의는 재력에 기초한 권력 앞에, 그리고 이 권력과 협력하거나 또는 그것에 도전하는 세습적 권력 앞에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Rancière, 2011: 75, 153).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란 과두제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위계와 지배의 수직적 질서 기능을 하는 치안화, 즉 ‘경찰(police)’ 기능을 사회질서의 수평적 기능, 즉 민주적 질서 기능을 하는 ‘정치(politics/the political)’²⁸⁾로 치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Biesta, 2014: 87-96). 민주적 정치의 주체화 과정에서 정치란 치안질서의 순조로운 흐름, 즉 예속화/복종에 도전하고 그것에 파열음을 내는 주체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Chamber, 2019: 121). 이러한 정치를 위해 ‘비판적²⁹⁾ 시민성’(critical

26) ‘성찰’은 곧 ‘자기 실천’을 의미한다(Foucault, 2016: 217). 행동의 축을 형성하려면 반성/성찰이 필요하고, 반성한 결과에 따라 다시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천은 행동→성찰→행동→성찰의 궤를 거치게 된다. 실천은 행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내포한다(Freire, 2002). 자기 실천을 통해 구축된 주체를, 인식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발전해가는 변증적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론적 실천 또는 실천적 이론을 필요로 한다.

27) 참여/숙의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협치는 공론화의 과정을 요구한다. 관과 민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공론의 장(public sphere/space)이 필요하다. 공론의 장이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시민의 삶을 지속해나갈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가치이다.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논쟁, 토론, 설득 등의 방법과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성을 찾아내고 공중의 지위를 발견해내는 민주주의적 실천이 필요하다. 공론장의 활성화는 결국 참여와 심의로서의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었을 때 가능하다(Abowitz, 2013: 65-86). 공론의 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수의 사람과 두루 연관된 문제라면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공공성(publicity)의 기본 이념이다. 공공성이란 바로 주변부에 저항하며 공적으로 재창출하는 공론의 장, 즉 ‘대항적 공공 영역(counter-public sphere)’에서 확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errard, 2015; Giroux, 2005).

28) ‘정치’는 설득의 장이다. 따라서 정치의 훈련은 설득의 과정에 대한 존중을 담아야 하며, 수사학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하며, 공공의 문제에 대해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29) ‘비판적’(critical)의 라틴어 어원인 ‘krinein’은 ‘무엇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고는 합당한 이유들의 입증하는 힘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관심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이다. 사고가 비판적이라는 의미는 적절한 타당성의 표준이나 기준을 충족시켜 충분히 ‘좋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citizenship)이 요구된다. 비판적 시민성은 최소한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바람직하다. 시민이 권위와 기존의 정치구조에 순응하는 것과 대안적으로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도록 격려하는 범위 사이의 긴장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질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확고한 충성심을 심어주는 순응주의적 접근은 국가주의적 시민성교육과 결합되어 있다. 순응주의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보고 시민사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등장하였다. 공공 정책의 문제에 대한 공적 담론에 참여하며 권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아마도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시민(citizen)’과 권위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는 ‘신민(subject)’을 구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중시하는 가장 독특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Kymlicka, 1999).

정치의 본질을 합의가 아니라 불일치라고 정의한 랑시에르는 “정치적 불일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놓고 대결하고 말하는 인간 사이의 토론이 아니다. 정치적 불일치는 말하는 자와 말하지 못하는 자에 관한 갈등이며, 고통의 목소리로서 들려야 하는 자와 정의에 관한 논증으로 들려야 하는 자에 관한 갈등”이라고 말했다. 정치는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두고 다투는 갈등이나 타협이 아니라, ‘몹 없는 자들의 몹’과 ‘셈해지지 않는 것을 셈하는 것’을 전면화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이들의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고통을 가시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몹 없는 이들의 몹’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가 말하는 몹이란 재분배적인 차원에서의 평등은 물론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 및 권리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지만, 기존의 틀 짜기 질서, 즉 치안 질서의 해체와 전위를 함축한다. 무정부주의적 민주주의³⁰⁾를 주창하는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능/의지의 평등을 강조한다. 평등은 지능의 평등(equality of intelligence)이자 누구나 또는 모두를 위한 평등의 정치이어야 한다(Chamber, 2019: 88).

무페는 급진적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를 매우 강조한다. 민주주의적 의미의 시민권이란 “일반적 이해관계에 대한 특정한 생각에 따라 정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우리’의 일부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시민권/시민성이 법을 준수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장에서 갈등과 적대는 불가피하며 그것들의 표출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의 규칙조차 부정하는 극단적 형태의 근본주의나 파시즘이 발흥하거나 강화·보호되어야 할 법과 제도 인권을 위협을 당한다. 그 형식이 촛불집회든 공개청원이든 토론이든 적대적 투쟁이든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는 자리잡고 꽃피운다. 이것이 무페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역설이고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출발점이다. 평등의 이념, 사회정의의 이념, 그리고 주권재민의 이념이 민주적인 사회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근본적 가치이다.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그런 근본 가치에 의해 정치적으로 구축되고 사회화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한 가치를 박탈당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저항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많은 ‘민주적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³¹⁾ 건전한 민주주

30)랑시에르는 민주주의를 통치를 위해 모든 자격을 배제하는 무정부적 체제로 본다(Rancie're, 2011: 96).

31)민주적 요구들은 외국인혐오의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무페는 우리는 ‘문제는 이민자들 때문이야’라고 주장하는 우파의 포퓰리즘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며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즉 진보적인 방향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의 과정은 정치적 입장들 사이의 왕성한 충돌과 개방적인 이익 다툼을 요청한다. 이것이 간과된다면 건전한 민주주의 과정은 협상 불가능한 도덕적 가치들과 본질주의적인 정체성들 사이의 대결로 매우 쉽게 대체될 수 있다(Mouffe, 2007).³²⁾

무페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민주사회를 튼튼하게 하려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제도적 형태를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급진화하는 실천이다. 우리가 가진 불만과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도와 원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다시 비판받고 변형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 갈등과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 갈등과 모순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균열은 불가피하다. 갈등과 모순은 흔히 적대로 경험된다. 그리고 그러한 적대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한 필요가 사람들에게 의해 자각되는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상적 원리이다.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경합적 토론 없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무페는 적과 반대자는 구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적’이라는 범주는 민주주의적 게임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Mouffe, 2007: 15). 그래서 무페는 적의(敵意, antagonism)를 넘어 쟁의(爭議, agonism)³³⁾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iesta, 2014가: 92-94). 쟁의적/경합적 토론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경청’(mindful listening)³⁴⁾의 기술이 요구된다. 경청은 시민성의 특별한 가치이고 포용성의 강력한

32) 무페는 민주주의의 갈등적이고 투쟁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그 불확정적인 긴장 속에서 경제적 평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사회주의’ 혹은 ‘자유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해관계가 상이한 계급·계층 집단들이 존재하는 사회에 갈등과 적대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적’과 ‘친구’의 관계로 전환될 때 정치적 적대는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무페는 이것을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라 부르며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을 구성하는 제거 불가능한 차원으로 본다. 무페는 합리적 합의를 통해 적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진영이 오히려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물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법치 인권의 보장 및 개인적 자유의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 전통’과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 통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시 인민주권 등의 사상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 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전통 사이에는 필연적 연관 없이 우연적이고 역사적인 접합만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접합되어 구성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한다는 얘기다.

33) 대등한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 사이의 전략적 갈등관계, 즉 푸코가 ‘경합’(agon)이라고 부른 관계는 역사적 형성과정 자체가 상이하며, 권력관계에서도 불평등할 뿐 아니라 각자가 수행하는 계급투쟁의 방식도 상이하다. 따라서 너무 외견상의 합의만 강조하면 무관심을 부르게 마련이며, 그럴 경우 문명화된 사회의 토대 자체를 허무는 폭발적 적으로 분출될지도 있다. 그러기에 쟁점이 되는 논란 주제들에 직면할 경우 의견과 신념의 상충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내어 공론화하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논쟁 수업은 상대를 이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듣거나 읽은 것을 모든 측면에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해주는 서로 동의할 만한 핵심을 발견하는데 있다.

34) 대화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청(傾聽)이다. ‘경청’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다.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내면에 깔려 있는 의미를 파악하여 듣는 것을 말한다. 경청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서 잘 듣고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 준다. 경청은 상대가 하는 말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고 때로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진정한 경청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는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며 신뢰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이해를 하는 것 모두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경청은 스스로를 각성시키는 힘이 된다. 타자의 입장과 상대의 형편을 읽어내는 힘은 경청에서 생겨나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거나 검증하는 기회도 경청에서 얻을 수 있다. 경청은 때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기도 하고, 삶의 유연함과 관계의 풍성한 질감을 돋우기도 한다.

수호자이다(Barber, 2006: 179). 적의가 아닌 쟁의적 갈등이 결합하는 것이 민주주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Carter, 2006: 422). 기본적으로 정치는 갈등을 처리하는 행위로서 적의를 쟁의로 바꾸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Wildemeersch, 2014: 22).³⁵⁾ 이것은 민주적 공론장의 활성화에서 이견과 부동의 그리고 권력에 대한 투쟁에 중심을 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Ruitenbergh, 2011). 이는 민주적 시민성 교육과 관련된 접근으로 체제 중심적 기능주의 관점으로부터 퇴각하여 시민의 실천적 행위자 관점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적의를 쟁의로 바꾸는 방식인 ‘보이텔스바흐 합의’³⁶⁾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을 교실에서 논쟁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논쟁 수업은 학생들이 논쟁적 이슈와 갈등하는 가치를 논의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딩스는 공화국이란 국민들이 선택한 통치 집단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조직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Noddings, 2018). 가장 유덕한 시민들에게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공화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모든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필요한 덕목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능력은 학교에서 길러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학교의 수업에서 논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시민은 필요하다면 법의 중재를 통해, 또는 어떤 경우라도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진보했음에도 현재의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이들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돌봄 책임을 민주주의의 과제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토론토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돌봄 책임을 민주주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아직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한다(Tronto, 2014: 7). 그러기에 돌봄(caring)³⁷⁾을 잘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관계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한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의 도처에서 좋은 삶을 기획하고 증진하기 위한 삶의 기본 방식이며,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술이다. 돌봄은 자신의 돌봄(care of self)으로 시작된다.³⁸⁾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돌봄 제공자는 결국 타인을 선뜻 돌볼 수

35)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시민적 공화주의자 사이에 벌어지는 주류적 논쟁에 도전하는 쟁의민주주의는 서로 연관되는 세력과 서로 갈등하는 세력 사이의 경합적 존중(agonistic respect)을 강조하고, 모든 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상반되는 정체성과 대화해야 한다(Carter, 2006: 423).

36)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강압적인 교화나 주입을 금지한다는 ‘강제성의 금지’,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인 것으로 다룬다는 ‘논쟁성의 유지’,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라는 세 가지 원칙은 독일 번영과 통합의 근간이 됐다. 독일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일 뿐 아니라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정치교육이라는 필수 교과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지금 독일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치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민주주의 교육(Demokratiepädagogik)’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일 정치교육에서 근본 준거로서의 힘을 잃지 않았다.

37)돌봄은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돌봄은 직접적으로 긴요한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타인을 돕거나, 타고난 역량을 발달 혹은 유지하도록 돕거나, 불필요한 고통이나 고충을 경감하도록 타인을 배려하고 응답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돕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돌봄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기초 혹은 내재적 역량을 발달·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돌봄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가능한 많이 돌볼 수 있으며 좋은 삶의 개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존, 발달, 사회적 기능을 다하도록 사람들을 조력하는 것이다.

38)아리스토텔레스는 돌봄을 우정과 사랑으로, 마르틴 부버는 돌봄을 나-그것(I-It)이 아닌 나-너(I-You)

없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스스로를 착취와 혹사에 무방비하게 만든다. 성숙한 돌봄 윤리는 자기 돌봄의 중요한 위상을 포함한다. 돌봄의 일차적 미덕은 배려(attentiveness)이다. 돌봄의 도덕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 배려의 특징은 도덕적 응답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Engster, 2017: 65). ‘자연적 배려’(natural caring)라고 할 수 있다(Noddings, 2018: 32). 이러한 배려가 없다면 돌봄이 필요한 타인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이나 부분적으로만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돌봄은 늘 제한적이거나 비효율적 수 있다. 돌봄의 두 번째 미덕은 ‘존중’(respect)이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비하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의미이다(Engster, 2017: 66).³⁹⁾ 사람들은 우리의 배려와 응답의 가치가 있다는 점,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덜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돌봄은 배려, 응답, 존중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긴요한 필요를 충족하고, 사람들의 내재적 역량을 발달·유지시키며,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고통을 완화하도록 그들을 우리가 돕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아가 윤리적 돌봄(ethical caring)은 개인적 차원의 돌봄을 넘어선다.⁴⁰⁾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서 타자의 응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윤리적 돌봄은 우리의 최선의 자아 및 관계를 표상하는 윤리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caring)은 기본적으로 관계 속의 실천이자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은 또한 사회의 법, 제도, 정책의 근간이 되는 규범적 원리이다. 돌봄은 정의(justice)⁴¹⁾를 지향한다. 돌봄이 정의의 심장이고 사랑의 노동이라고 여기는 돌봄 국가의 지향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보다 견고한 돌봄의 공적 책임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는 돌봄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민주적 준거가 중요하다. 돌봄의 관계적 관점은 ‘민주적 돌봄(democratic care)’을 필요로 하고, 민주사회에서는 돌봄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민주적 기준이 중요하다(Tronto, 2014: 264).

관계로, 존 듀이는 돌봄을 ‘동정적 이해’로 보았다(Thayer-Bacon, 2011). 돌봄을 개별적 성장과 자아실현으로 본 메이로프는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1982)와 닐 나딩스의 『돌봄』(1984)보다 10년 앞서 『돌봄론』(1971)을 출판하였다. 돌봄은 또한 전문적 직업 행위를 위한 사회적 실천 현장에서 의학, 간호학, 사회사업, 상담학, 교육학 등의 인간관계 속에서 돌봄을 탐구하는 실천 학문의 핵심 주제이며 과제이기도 하다.

39) 의견이 다른 동료 시민을 ‘존중’하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존중의 방법은 각자가 수용하는 ‘존중’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자유주의적 개념에서 동료 시민들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들을 소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유보해두거나 초연해 있거나 모른 척 도외시하는 것이다. 상대를 자극하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다 능사는 아니다. 이와 다른 개념의 존중도 있다.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상호존중은 동료 시민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존중을 중시한다. 때로는 반박하기도 경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청하고 배우기도 하는 존중이다. 심사숙고하고 관여하는 존중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더 적절하고 잘 어울리는 이념일 것이다.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이념이 인간의 선에 대한 궁극적 다원성의 반영인 이상, 우리의 도덕적 참여의 정치는 서로 다른 우리의 삶이 표출해낸 독특하고 다양한 선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andel, 406-407).

40) 길리건(Gilligan, 1982)과 나딩스(Noddings, 1984)는 모두 돌봄을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돌봄 윤리를 정의 윤리와 분명하게 대비시키고자 했다. 두 페미니스트는 도덕교육의 영역 안에서 함께 여성주의자의 관점을 취했지만, 길리건이 심리학자로서 도덕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나딩스는 교육철학자로서 도덕적 지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41) 정의의 실현은 항상 구체적인 선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선의 개입은 또한 항상 자신 이외의 공동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더 많이 ‘돌보는 시민성’(caring citizenry)이란 씨앗을 심는 기관이기도 하다(Engster, 2017: 374).

민주적 성격의 형성은 사랑, 존중, 연대와 같은 유형의 자기 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Biesta, 2007). 인정투쟁을 제창하는 악셀 호네트⁴²⁾는 인정(신뢰, 존중, 연대)이라는 민주적 인성(democratic personality)의 형성을 통해 인격,⁴³⁾ 공동체,⁴⁴⁾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한다(Huttunen, 2009: 13-15). 사회적 관계는 자기믿음/자신감(→우정, 사랑), 자기존중/자존감(→권리), 자기가치부여/자기금지/자기존엄(→연대)의 가치로 진화한다. 상호인정의 관계는 첫째, ‘사랑’(Liebe/love)이라는 형태 속에 있다. 자기믿음(self-confidence/Selbstvertrauen)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확립되고 재생산된다. 사랑을 통해 그 당사자들은 정서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인정되며, 사랑을 통해 이 욕구 또한 충족된다. 원초적 관계인 사랑(우정을 포함한)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당사자들은 정서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인정되며, 사랑을 통해 이 욕구 또한 충족된다. 서로의 정서적 지지와 감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부모의 가정양육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다.

둘째, 상호인정의 관계는 동등한 ‘권리’(Recht/right)의 인정을 통해 형성된다. 자기존중(self-respect/Selbstachtung)⁴⁵⁾은 권리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격체로서 인정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은 자주적이고 도덕적 판단능력(도덕적 자율성의 보편적 성질)이 있는 존재로 인정된다. 각 개인은 합리적 존중을 하고, 합리적 요구를 하고, 일(직업)을 통해 임금을 받으며 만족하면 살아간다. 자유롭고 평등한 법적 주체인 시민은 적극적·민주적 시민성과 정의로운 사회⁴⁶⁾를 추구한다. 인정을 주고-받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

42)호네트는 사회의 공극적 조정 영역을 정부, 형식적 정치, 법의 생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 입헌국가가 민주국가로서 민주적 공적 영역의 보호를 통해 질서를 잡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입헌국가의 정당성은 민주적 공적 영역과 헌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공적 영역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인 ‘공동체성’(we)에 의해 도달하는 합의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Zurn, 2015: 183).

43)우리의 人格(character)은 식별조차 불가능한 태아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생에 걸쳐 여러 단계를 느릿느릿 거치며 발달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다(Jung, 2016: 227-229). 살아 있는 존재가 타고난 특질을 최대한 구현하는 인격은 생물학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일생에 걸쳐 발달한다. 인격이란 사람됨됨이를 갖춘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품성이다. 인간의 됴됨이를 보여주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동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정직한 믿음을 주는 마음은 인격에서 나온다. 불행과 절망, 눈물과 비극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 또는 마음의 크기가 바로 인격이다. 인격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격이란 모든 구체적인 구성과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사람 전체를 말한다. 확고함, 전체성, 그리고 성숙이 없는 인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Jung, 2016: 227).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국민의 인격이다. 오늘날 인간은 기계와 같이 인격이 점점 없어져 가며 냉정하고 차갑게 나타난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등 기계는 서로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인격이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물화(物化) 현상을 극복하려는 인간 이후(post-human)의 ‘주체화된 시민성’(subjectified citizenship)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시민성의 개인주의화, 도덕주의화, 사유화, 탈정치화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iesta, 2011: 6-10).

44)공동체의 개념은 ‘위험사회’의 도래로 개별화의 증대, 다양성과 다원성의 강조, 그리고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해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Chitty, 2002: 3).

45)‘자율성’은 우리가 ‘존중’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위치를 가진다. 고등 문명사에서 근대 서구에 특유한 것은 존중의 원칙이 무엇보다 권리의 관점에서 정식화되었다는 것이다. ‘주체적 권리’(subjective rights)는 서구의 법 전통에서 행위자의 의사 소유물로 간주되는 법률적 특권이라는 개념이다(Taylor, 2015: 35). 일반적으로 ‘존중’이라는 말은 나는 지금 누군가 또는 무엇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태도적’ 의미 또는, 나는 지금 침해하지 않는다는 권리 존중의 ‘행위적’ 의미를 갖고 있다(Taylor, 2015: 42).

46)‘정의로운 사회’는 본질적인 생존 방식이 구성원들의 공동 이해를 충실히 따르는 사회다.

을 통해 길러진다.

셋째, 상호인정의 관계는 사회적 ‘연대’(Solidarit/solidarity)이다. 연대감은 인정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과 성인교육 등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참여민주주의와 적극성 시민성이 발휘될 때 연대감은 잘 형성된다. 상호인정 관계는 최고의 인정 형태로서 스스로 자기가치를 부여하는 자존(self-esteem/Selbstschätzung)⁴⁷⁾과 명예(honor)를 지키면서 타인과의 존중과 연대를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다. 여기서 각 개인은 자기만의 특수한 속성을 지닌 존재(개인의 독특한 자질, 능력, 성취, 개체성, 자아실현)로 인정된다. 동시에 함께 하는 존재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상호지지의 사회적 관계를 추구한다. 여기서 각 개인은 자기만의 특수한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된다(Honneth, 2014).

이러한 세 가지 인정 과정을 통해 타인의 이목과 시선, 물화와 소외, 그리고 교화와 사회화를 넘어서면서 각 개인은 비로소 한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어간다.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경험의 핵심은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믿는 자신들의 인간적 정체성의 인정에 대한 요구들이 무시되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무시의 경험은 사회적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Kamp um Anerkennung)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문법을 규정하는데, 바로 그러한 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사랑’, ‘권리’, 그리고 ‘연대’라는 모든 인간적 정체성과 관련한 세 수준의 형식적-인간학적 인정에 대한 요구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현되고 제도화된 것이 가족과 근대의 민주적 평등주의적 법체계 및 복지제도이다(Honneth, 2014).⁴⁸⁾

개인의 정체성은 ‘인정관계’ 속에서도 형성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한 되고 싶은지는 사회적 인정관계 속에서 대답되고 상상된다. 인정을 위한 개인의 투쟁과 사회의 투쟁을 동시에 요구한다.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에는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으며, 이러한 물음은 사회적 인정관계를 동반한다. 정체성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므로, 어떤 분명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속에서의 존재감은 인간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게 된다. 정체성의 형성은 성원인식, 인정, 연대에 의해 결정된다.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인간적 번영의 주요한 요인은 ‘훼손되지 않은 정체성’이다. 따라

47) ‘존엄성’이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또는 없다고) 여기게 하는 어떤 특성을 의미한다(Taylor, 2015: 42).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품행과 아주 많이 결부되어 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몸짓하고 말하는 방식은 가장 어릴 때부터 우리가 타인들 앞에 있다는 의식, 우리가 공적 공간에서 거동하는 방식, 그리고 이 공간은 잠재적으로 존중 아니면 경멸, 사랑 아니면 수치의 공간이라는 의식에 의해 형성된다. 존엄 의식의 부재는 파국적일 수 있고, 나의 자기 가치감을 완전히 허물어 버림으로써 내 존엄 의식을 파괴할 수 있다.

48) ‘분배’(Umverteilung/retribution)와 ‘인정’(recognition)이라는 용어는 철학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오늘날 시민사회에 내에서 벌어지는 제반 투쟁들을 지시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대중적 패러다임을 말한다. 낸시 프레이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상호주관적 조건의 확보를 사회정의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문화적 인정 확대를 사회변혁의 규범적 목표로 설정한다. 이에 반해 악셀 호네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등성과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사회적 포함의 범위가 확대되고 개성의 신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 사회의 도덕적 진보로 규정한다(Fraser & Honneth, 2014). 물론 이러한 진보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한 사람들의 인정투쟁을 통해 추동된다. ‘인정’은 기저에 놓여 있는 틀들은 변화시키지 않고 결과적인 인정 상태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접근들과 함께 기저의 틀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변혁적’ 접근을 포함한다(Fraser & Honneth, 2014: 34). 우리는 분배와 인정을 서로를 배제하는 대안으로 견해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주의와 문화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사회정의의 두 차원 모두를 포괄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 모든 진정한 정의 요구는 ‘훼손되지 않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정 요구이다(Fraser & Honneth, 2014: 334-335). 사회정의란 주체가 인정관계, 즉 사랑, 권리, 연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이것들은 자기민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은 법적 권리의 상호적 성격을 잘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는 능력)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민주사회는 일의 상호인식을 요구하며, 또 다시 좋은 사람만을 필요로 한다. 자긍심의 수준은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인식할 수 있다. 만약 관심과 자신감을 원래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와 교육의 산물을 존중한다면,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 그것은 성인들 사이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의 일부로서 달성될 수도 있지만 성인교육의 성취가 자긍심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자신감의 고양, 자존감 및 어쩌면 자긍심의 향상, 이 모든 것이 기능하는 민주주의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인정 투쟁은 일 국가 내에 머물지 않고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아와의 실천적 관계가 자기 신뢰(성숙한 인간상: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에서 자기존중(정의로운 인간상: “자신의 권리를 무엇인지 알아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으로, 나아가 자기존엄성(품위 있는 인간상: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것이다”)으로 발전한다. 호네프의 인정투쟁은 사회를 도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적 상황들이 양산해내는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의 훼손 등 ‘무시’(disrespect)⁴⁹⁾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다(Honneth, 2007).⁵⁰⁾ 개체화와 사회화⁵¹⁾는 연동되어 있다(Honneth, 2012: 204-208). 개인의 성숙된 주체화는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⁵²⁾

누수바움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일련의 제도로만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 토대를 두어야 함을 역설한다(Nussbaum, 2004). 인간의 취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토대는 사랑, 연민, 공감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기에 혐오, 질투, 수치심 등은 이를 저해한다(Nussbaum, 2019). 완벽함이라는 허구를 버리고, 나 또한 많은 불완전함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우리에게 고귀함과 연약함이 공존하는 그 자체로서의 인간을 바라보게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도 언젠가 또는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으며, 사회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의 처지가 곧 나와 내가 아끼는 사람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누수바움이 생각하는 ‘품위 있는 사회’⁵³⁾란 인간성을 부정하지 않고 개인이 지닌 역량이 발현될

49) ‘무시’는 실제로 사회의 온전한 성원 이하의 범주로 개인들을 구성하는 많은 법률, 정부 정책, 행정 규제, 전문 지식 그리고 사회 관습의 세계 속에서 제도화된다.

50) 호네프의 3단계 인정 이론은 비에스타가 분류한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과 연관되며, 영국의 크릭보고서처럼 도덕적·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참여 그리고 정치적 문해력과 연결된다.

51) 개체화는 개인주의의 위험이 있고, 사회화는 길들이는 예측화의 위험이 있다. 푸코와 랑시에르는 탈-예측화 과정이 주체화의 과정이고, 수직적 위계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치안 또는 경찰 기능을 파열시키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라고 주장한다(Chambers, 2019). 사회질서의 수평적 차원은 정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5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시작은 사랑을 통한 긍정적 자기 확신→교육의 과정은 권리 인정을 위한 반성적 사고→교육의 지향은 인간다움/시민다움을 향한 연대로 이어진다(조나영, 2019).

수 있도록 촉진적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Nussbaum, 2015). 그리고 누스바움은 오늘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인문학의 숨결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시민정신의 근본 기초가 흔들려 행복한 사회와 멀어질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다. 시민이 되는 일은 비판적 사고 능력,⁵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타인과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세계화된 시대에 자신의 행위 선택에 책임을 지는 이로서의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다(Nussbaum, 2016). 누스바움의 ‘시민교육’은 아이들의 첫 번째 감정,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중시한다. 이 감정에서 나오는 두 번째 감정은 자기에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중시한다(Nussbaum, 2016). 타자의 가능한 입장에서 공감하고,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를 상상하는 마음, 이를 위해 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으로서 감수성이 중요하다. 내가 타자의 입장이라면 느끼게 될 감정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즉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서사적 상상력이 개인의 감정에 머문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스바움은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 참여를 덧붙인다.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타자에 공감한 사람이 정의로운 방식으로 그 사태에 참여하고 행도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상황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사태를 발견하며, 그 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진전한다.

누스바움은 이성과 창의성, 자유와 평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 역량들(human capabilities)⁵⁵⁾을 중시한다. 인간적 역량을 개개인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틀로 삼아 인간다운 삶이 무엇이며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과정은 사회정의를 모색하는 일환이기도 하고, 인간성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Nussbaum, 2018

53) ‘품위 있는 사회’(decent society)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그가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정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된다. ‘품위 있는 사회’는 한 사회의 제도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다(장은주, 2007: 242-251). ‘품위 있는 사회’는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함축하고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모욕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자신의 품위 문제를 단순히 어떤 ‘주권’이나 ‘시민권’ 같은 것을 가진 성인들에게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just society)는 반드시 ‘품위 있는 사회’여야 한다. 사회정의의 이념은 품위 있는 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다. ‘정의로운 사회’가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서로 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재화나 영예/명예(honor)의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와 관련이 있다면, ‘품위 있는 사회’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영예/명예의 훼손이 없는 사회이다.

54)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란 "무엇을 믿고 행하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정당한 성찰적 사고"이다(Bailin & Siegel, 2009: 190).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란 믿을 것 혹은 행동할 것을 정할 때 전념하는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다(Ennis, 1992: 21-37). 옳고 그름을 밝히는 행위인 비판적 사고는 열린 생각, 공정한 생각, 독립적 생각, 탐구적 태도,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을 포함한다(Bailin & Siegel, 2009: 192).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행동, 기술, 태도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공하기 위해 진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한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일상생활의 문제에 유용해야 하고, 성향이나 덕을 포함해야 하며, 성찰적 사고를 포함해야 한다.

55) 기본적 생존, 건강과 신체의 안전, 정서적·지적·사회적 역량(놀이, 관계성, 정치적 참여) 등 인간의 역량들의 목록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사회가 사람의 기본적 품위나 존엄성, 또는 정의를 지켜주는지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간의 역량은 한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인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을 의미한다(Nussbaum, 2015). 우리가 흔히 역량을 능력이나 재능과 구분 없이 쓰며 개인의 내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는 데 비해, 누스바움은 인간의 역량을 개인과 사회 제반 환경들이 접합된 상태를 뜻하는 개념으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56) 누스바움은 인간적 역량 개념을 인간 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에 초점을 맞춰 이해한다. 행위의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인간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여겨지므로 법적·제도적으로 동등한 존중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평가된다. 그는 주로 인간 존엄성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유의 영역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 누스바움은 감정을 배제한 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각각의 감정이 담고 있는 인지적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 이것이 법적 근거로 적합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녀는 혐오가 형법에서 형량을 결정하거나 범죄에 대한 항변이나 법적 규제의 근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사례를 파고들면서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혐오(hatred)는 인간이 지닌 동물성과 유한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신체 분비물)을 대면했을 때 생기며, 오염물이 자신의 몸 안으로 삼투된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그래서 혐오는 혐오스러운 것을 자신에게 멀리 떨어뜨리고, 구별하려는 태도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끔찍한 살인자나 아동 성 범죄자를 ‘인간 쓰레기’나 ‘더러운 벌레’처럼 여긴다. 흉악 범죄가 일어나면 자신이 지닌 인간적 약함을 숨기기 위해 범죄자의 이른바 ‘비정상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범죄자의 잘못에 대해 ‘분노’해야지, 이들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혐오는 상대방도 평등한 시민적 지위를 갖는 존재라는 사고를 수반하지 않으며, 자신 안의 약함과 문제를 반성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혐오 반응은 어떠한 사람이 실제로 저지른 위해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혐오가 어떠한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일차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형법에서 가중시키거나 경감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Nussbaum, 2015).⁵⁷⁾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이길 바라는지 끊임없이 ‘캐물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현실의 사회 구조를 바뀌어나가야 한다. 시민적 예의⁵⁸⁾를 함양시키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학습자들에게 자기반성을 위한 기회와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성찰적 삶’(examined life)을 제공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식 검토, 즉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Nussbaum, 2004).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성찰적 삶’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와 가치에 대해 숙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지

56) 누스바움은 역사적으로 인문학은 늘 교육의 중심에 있었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역설한다. 오늘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인문학의 숨결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시민정신의 근본 기초가 흔들려 행복한 사회와 멀어질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57)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혐오’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기계처럼 끊임없이 혐오를 필요로 했다. 70년대 이후에는 ‘전라도’와 ‘빨갱이’(북한의 변주)가 박정희 및 전두환 독재정권의 존속을 위해 혐오되어야 했고, 90년대 이후 현재는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동남아 노동자, 동성애자 등으로 혐오의 대상이 확장되어 가는 중이다. 분단과 냉전 체제는 북한을, 독재체제는 전라도와 빨갱이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취약하거나 소수인 주체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요청한다. 가상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가리는 방식, 핵심은 혐오의 대상이 사실은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데 있다기보다, 혐오를 요청하는 구조적 메커니즘, 즉 시스템을 살피는데 있다. 하지만 오직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 아는 맹목적 자본주의는 시스템의 문제를 사적 문제로 뒤바꾼다. 무한경쟁 속의 생존이 삶이라는 무대의 유일한 장치가 되었고, 이 무대 위에서의 승패는 모조리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58) 진정한 시민적 예의는 마치 억압받는 집단들이 그들의 억압자에게 친절히 대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당신에 나쁘게 구는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도 동등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타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민적 예의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공적인 삶에서 평등의 규범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필수적인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지지한다. 그런데 오늘날 예의의 정치적 의미가 약화되고 개인 차원의 예절로 한정되는 의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난 일을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해명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일단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걸 충분히 그리고 훌륭히 검토해 보기 전에는 소크라테스가 보내지 않는다.”(Plato, 『라케스』). 여기에서 푸코는 민주정치 자체가 가진 결함으로 인해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파레시아’(parrhesia; ‘모든 것을 말하기’→‘진실을 말하는 용기’,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 ‘비판적 태도’)를 주창한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반드시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판적 실천이 사라진다면 민주적 정치체제 자체가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파레시아와 민주주의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이렇듯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로서의 파레시아를 행하는 자, 즉 페레시아스트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Foucault, 2017: 370). 파레시아는 정치적, 철학적, 윤리적 행위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울어진 권력관계의 아래에서 위로, 위험을 감수하는 유형의 말하기 실천이다(Foucault, 2017: 368). 파레시아는 이중적인 조건을 지닌 것이다. 첫째,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함을 함축하는 것이며, 둘째 나이나 사회적 위계, 서열 등의 차이를 무릅쓰고 상대방에 대해 솔직하게 발언하는 것을 뜻한다(Foucault, 2017). 특히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파레시아는 의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발언자의 윤리적 결단을 택하는 것을 함축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하여 일정한 입장을 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파레시아는 정치적 행위에는 항상 이미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윤리적 행위가 함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파레시아는 ‘시민다움’(civilitéé/civility)의 푸코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진태원, 2019: 346).

성찰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성찰하는 삶으로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자기인식’(gnōthi seauton)은 ‘자기 돌봄’(epimeleia heautou)⁵⁹이라는 목표를 향한 단계 또는 수단이기도 하다(Foucault, 2016: 183-184, 242-243). 삶의 한 형식으로서 자기 돌봄은 도시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 젊은 시절 잠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지속적인 작업이다. 한 순간의 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참과 거짓을 지속적으로 분별해내고 거짓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맞서며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Foucault, 2016: 24-26). 푸코가 강조하는 자기는 실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체로서 구축하는 방식으로서 자기와 맺는 관계들의 총체이다(Foucault, 2007: 13). 지금의 나는 누구이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무엇이며, 내 삶은 어디를 향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자기 각성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때, 이 시대 자기 인식은 언제나 자기 돌봄과 결부되어 있다(김세희, 2019: 180).

플레이리는 시민성의 정치적 의미를 더욱 사회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실천이라는 의미로 재규정하였다(Apple, 2014: 209). 그는 문해력, 시민성, 대화적 실천,⁶⁰ 민주적 참여를 통한 비판적/혁신적 교육을 주창하였다. ‘실천’(praxis)은 생각/의식에 바탕을 둔 행위(action)이다(Freire, 2002: 55-56). 앎과 행동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우리의 앎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의 성격은 앎의 성격과 일치한다. 앎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실천을 숙고하게 한다. 실천을 숙고함으로써 더 잘 생

59)푸코는 επιμέλεια εαυτού/epimeleia heautou/self-care을 그리스어 παιδεία/paideia/education와 괴테의 독일어 Selbstbildung/self-formation과 연결시키고 있다(Foucault, 2007: 83).

60)대화(dialogue)가 인간적 현상인 동시에 만남의 행위이다. 성찰과 행동이 결합된 대화는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 변혁적 대화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고 억압의 현실을 변혁시키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각하고 더 잘 실천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론을 실제화하려는 노력인 ‘praxis(이론적 실천: 어원적으로는 doing, acting의 뜻)’란 말은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하는 데 일정한 축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행동의 축을 형성하려면 반성이 필요하고, 반성한 결과에 따라 다시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천은 행동→성찰→행동→성찰의 변증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프레이리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반사가 아니라 성찰을 통해 실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이해한다고 본다(Elias, 2014: 121). 실천은 행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내포하며, 이론과 행위의 결합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회의 변혁으로 나아가게 하는 ‘실천’이란 이론 없는 행위로 협소화하는 것을 막고, 성찰과 이론이 부재한 행위와 차별화하기 위해 ‘이론적 실천’의 의미를 갖는다. 이론적 맥락/비판은 구체적 실천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론은 보편적이고 맥락-자유적인 경향이 있고, 실천은 구체적 맥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론은 추상적 이념을 주로 다루고, 실천은 주로 구체적 현실을 다룬다. 이론은 시간의 압박을 받고, 실천은 상황의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단순히 행동하는 것은 노예의 기능이나 다름없다. ‘실천적 성찰’이나 ‘성찰적 실천’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말과 실천이 일치되는 사고와 행동의 총합인 실천(praxis)를 지향한다. 사고의 포기는 성찰이 배제된 무조건 따르는 맹목적 행동주의(activism) 경향을 보이고, 행동의 포기는 입만 살아있는 말잔치(verbalism) 경향을 보인다(Elias, 2014: 136). 실천이 없는 단순한 지식은 정치체제에 대해 무력하다. 진정한 실천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 행동과 성찰의 통일이 요청된다. 그리고 비판적 의식을 알거나 비판적 의식에 도달하는 특별한 방법은 사람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내포된 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Elias, 2014: 132). 대화적 실천은 곧 사회변혁으로 이어진다.

프레이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평화와 정의를 촉진하는데 있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Freire, 2002). 세계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정치활동의 부속물이 아니라 정치활동의 핵심 요소다. 교육이 ‘비판적 의식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언어가 갖고 있는 변혁적 힘에 의존한다. 급진적 문해교육 이론은 침묵의 문화를 생산하는 사회적·도덕적 규제를 폭로해야 한다. 비판적 문해력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총체적 맥락에서 구체적 일상의 사회적 법칙을 알아가는 일이다. 문해교육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통해 단순히 교실에서의 교사 대 학생의 관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널리 인간과 사회에서 실천될 인간화와 해방을 지향하는 대화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대화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읽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문맹퇴치(illiteracy)/문맹자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읽고, 쓰고 셈하는 길들이는 문해력-은행 저축 방식(banking)의 교육이 중시하는-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문해력을 지향한다. 세계를 비판적으로 읽고, 사실의 이면에 놓인 이유와 관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문해력이다(Roberts, 2013: 63). 억압적 현실과 이를 자각하게 하는 의식화,⁶¹⁾ 의식화의 한 방법으로 써 비판적 성찰과 질문하기, 강요가 아닌 문제제기, 대화와 토론, 그리고 그것을 거친 이후 행동과 참여로 이어지게 하는 실천을 중심으로 한 ‘문해교육’은 체제 속에 머무는 교육이 아니라, 세계를 명명하고 변혁시키는 교육이다. 따라서 문해교육은 삶의 교육인 동시에 세계의 정치적 본질을 이

61)인간화와 결합된 비판적 의식의 고양을 통한 ‘의식화’와 크릭의 ‘정치적 문해력’은 시민성에 대한 시민공화주의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생각이다(McCowan, 2009: 46-66). 비판적 의식화는 공공적인 삶, 해방적 공동체, 개인 및 사회적 기여와 도덕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야 한다.

해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바버는 국가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한다(Barber, 1995). 시민성의 정치사상적 원천을 ‘강한 민주주의’에 두고 있는 바버는 약한 민주주의에 터한 소극적 시민성(자원봉사활동 등)을 넘어 강한 민주주의에 터한 적극적 시민성(정의와 결합된 봉사학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시민성 구현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자원봉사는 개별적 인성의 형성, 박애, 또는 상류층의 도덕적 의무를 통해서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Barber, 2006: 70). ‘자원봉사’와 ‘봉사학습’은 모두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소극적 시민성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는 ‘자선’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고, 적극적 시민성의 실현을 위한 ‘봉사학습’이나 ‘정치학습’은 ‘정의’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McCowan, 2011: 184). 만일 우리가 무주택자들에게 관심을 쏟는다면 ‘자선’의 관점이 추구하는 바는 필요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유하고 헌신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의 자원을 동원시키는 것이다. 반면 ‘정의’의 관점을 볼 때 그것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현행 법률이나 강령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사람들은 자원봉사 활동(노인가정 돕기, 지역의 자연보존 등)이나 정치활동(캠페인, 편지 보내기, 저항 운동, 공개 토론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 두 가지 활동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자선 기관에서는 정치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시민다움은 정의상 순수한 자선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인 면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시민성의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접근은 ‘소극적 시민성’과 ‘능동적 시민성’으로 나뉠 수 있다. 시민성의 소극적 요소가 국가의 정체성, 애국심과 충성심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성의 적극적 요소는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여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정치적 활동을 촉구한다.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적극적/능동적 시민성은 국민국가의 굴레를 넘어서고자 한다. 오늘날 시민-공화주의자들은 참여민주주의와 숙고민주주의와 노선을 함께 하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민주적 시민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선진국가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시민성’은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국가정책의 의제로 채택되고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일수록 저항적 또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주창된다. ‘민주적 시민성’은 시민들 사이의 평등성과 상호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 시민성 구성요소 -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시민성

듀이는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행정을 중시하는 국가체제 하에서 정해진 규범이나 중립적 절차뿐만 아니라, 신뢰와 관계적 망과 상호작용적 결사체로부터 출현하는 과정 및 실천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Ueno, 2016: 9).⁶²⁾ ‘민주주의’를 무엇보다도 ‘함께 결합하여 사는 삶’(associated life)이라

62) 듀이는 1937년 미국 학교 행정가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민주적 원칙이야말로 교육기관의 본질과 목적에 핵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파시즘으로 위협받는 시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당시 반동적 힘에 직면해 의회나 선거 그리고 정당과 같은 민주적 제도의 취약성을 목도한 후, 듀이는 민주주의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깊이 스며들 때에만 비로소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주장했다. “만약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고 이해하는 존 듀이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첫째, 사회성원이 공유하는 공동 관심사의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관심사의 인정을 사회통제의 방법으로서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여러 사회집단-상호간의 단절을 의도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사이의 보다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습관이 변화한다는 것-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빚어지는 새로운 사태에 맞게 끊임없이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Dewey, 1993: 136). 민주주의는 제도의 차원을 넘어 민주적 삶의 양식을 내면화한 교양시민인 공중(publics)을 배출해야 실현된다. 듀이는 <공공성과 그것의 문제들>(1927)에서 현대사회의 공공성/공론장 쇠퇴를 우려하였다.⁶³⁾

푸코는 민주적 삶의 양식의 창출을 ‘대항품행’(contre-conduite/counter-conduct)⁶⁴⁾으로 제안한다. 푸코가 정의하는 ‘삶의 양식’은 나이와 직업, 사회적 활동이 다른 개인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이다. 삶의 양식으로서 새로운 대항품행은 제도화된 관계를 닳지 않은 강력한 관계를 산출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푸코가 강조하는 대항품행은 ‘봉기적 시민성’이다. 윤리적 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서 통치성의 인도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성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식을 행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진태원, 2019: 339-346).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능력이 최대화된다고 하여 자율성을 갖거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 의해 권력이 원하는 방식대로 통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듀이가 거의 100년 전에 주장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은 교육의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깊이 이해하도록 교육받은 교사들이 있을 때에만 민주적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는 토론 속에서 넓은 공동체와 관련을 맺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것은 교육에서 민주적 변화와 사회의 민주적 변화 사이에 상호적 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교육 이론의 핵심 과업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루지 않고서는 민주적인 체제를 발전시킬 수 없고,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민주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육 개념을 정연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사회학자 번스타인(Berstein, 2000)은 효과적 민주주의를 구성원들이 호혜적 참여의 식을 가져야 하며 정치제도가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해당한다. 그는 시장의존성의 심화와 탈-인간주의적-인간의 내면적 지향과 분리-지식의 위기 속에서 학교들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을 권장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통해 학교들을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번스타인은 학교가 학생에게 세 가지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한다고 제안한다. 교육의 민주적 권리로서 자신감(confidence), 공동체성(communitas), 그리고 정치적 실천(political practice)을 위한 향상의 권리, 포용/통합의 권리 그리고 참여의 권리라는 조건을 제시한다.⁶⁵⁾

습관이 사람들 성정의 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불안정하다. 민주주의는 홀로 설 수 없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민주적 방식이 현존할 때에만 민주주의는 지탱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산업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도 교육기관에서 길러야 하는 민주적 관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Dewey, 1987: 225)

63) ‘public’은 당대의 중대한 현안들에 관한 공적 심의를 뒷받침한 사회적·정치적 삶을 공유하는 공공성을 가리킨다. ‘public’은 ‘공공성’, ‘공적 영역/공론의 장’, ‘공중’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64) 푸코는 완전히 다른 목표와 쟁점을 지닌 전복과 혁명의 절차에서도 품행상의 봉기와 반란을 거론하고 있다. 푸코는 규율권력의 특징을 ‘여백’이나 ‘잔여’를 만들어내는 데서 찾으면서 규율이 품행, 신체, 태도 등에 전념하는 어떤 것으로 자기 돌봄과는 매우 다르다고 본다(Foucault, 2016: 173).

첫째, 개인의 ‘향상될 권리’(individual enhancement)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⁶⁶⁾ 개인의 향상은 조금 더 나은 무엇—지적, 사회적, 물질적인 것—을 막연히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비판적 이해에 도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자신감(confidence)을 갖기 위한 기초이며 개인적 수준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차원의 권리는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통합될 권리’(inclusion)이다. 통합되는 것은 복잡한 양상으로서 필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에 분리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되는 것은 공동체성(communitas)⁶⁷⁾의 조건이며 이러한 권리는 사회적 차원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긍정하는 인간적 공동체가 학교에 자리 잡아야 한다.

셋째, 정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participation)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참여는 담론과 논의일 뿐 아니라 실천이며, 이는 산출물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참여권은 사회질서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변동되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는 시민적 실천(civic practice)의 조건이 되며, 이는 정치적 수준에서 작동한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⁶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Berstein, 2000: xx-xxi).

권리	조건	수준
향상(enhancement)	자신감(confidence)	개인적 수준
통합(inclusion)	공동체성(communitas)	사회적 수준
참여(participation)	시민적 담론(civic discourse)	정치적 수준

<정치적 권리, 조건, 수준>(Berstein, 2000: xxi)

번스타인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상호 관련된 권리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호네트의 인정 이론은 사회를 도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적 상황들이 양산해내는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의 훼손과 같은 ‘무시’(disrespect)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다. 번스타인은 세 가지 권리의 모델을 통해 교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면서 모든 학생이 자신들의 권리를 부여받고 향유하고 있는지, 권리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번스타인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의 성공과 실패에 터한 위계질서를 만들어낸다. 수평적 연대(horizontal solidarity)를 이루는데 학교 내부의 위계와 외부의 위계는 위협이

65)세 가지 민주적 교육권은 계급, 인종, 젠더와 연동되어 있다.

66)개인적으로 향상될 권리는 유엔아동권리선언의 ‘발달할 권리’와 같다. 유엔아동권리선언(1989)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선언하고 있다.

67)공동체의 가치는 공동의 목표, 가치, 신념 같은 공통성과 이것을 형성하는 활발한 담론을 사회의 중요한 기반으로 본다. 하지만 공통성보다 차이를, 담론보다 성찰을 더 중시하는 공동체를 강조되기도 하고, 전체주의적 강압성이나 타인에 대한 배타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68)‘공론의 장’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성, 법에 의한 지배를 주장하며 여론의 힘을 모아 공권력에 대항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집단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의 마련은 공식적 제도와 정부 형태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체가 한 장소를 공개한다는 것은 사적 욕구를 공적 필요로 전환시키는 일을 말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합리적 의사소통, 상호비판, 그리고 이상적 담론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Habermas, 1989).

된다.⁶⁹⁾ 학교가 학생의 실패를 선천적 능력이나 문화적 결핍으로 개별화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는 사회계급, 젠더, 인종 측면에서 교육 기회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사회계급이 특권의 분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계급이 규제하는 현실의 한계에 대해서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번스타인은 상징적 통제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가에 대해 아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역설한다(Berstein, 2000: xxiv-xxv).

영국은 보수당에서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로 넘어가면서(1997년) ‘제 3의 길’ 정책이 반영된 크릭 보고서⁷⁰⁾를 발표하였다. 크릭 보고서는 시민성 교육이 시민성과 시민사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시민성을 위한 교육임을 강조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단지 ‘신민(subject)’으로서가 아니라 ‘시민(citizen)’으로서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은 도덕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이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회이며,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곁에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시민이란 모름지기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주장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흔쾌히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 시민교육은 법과 정의에 대한 교육이며, 민주주의 교육이며, 공동선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지향한다. 시민교육의 결과 시민들은 갖가지 기술로 무장한다. 듣는 기술, 토론하는 기술, 주장하는 기술, 그리고 나아가서 더 현명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기술로 무장하는 것이다(영국시민교육자문위원회, 1998: 135-136). 크릭 보고서(1998)는 효과적인 시민성교육의 세 기둥으로 사회적·도덕적 책임,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정치적 문해력을 강조하였다.

첫째, 사회적·도덕적 책임이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으로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 인격, 정직, 성실, 자제력, 근면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학습자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신뢰, 교실 안과 밖에서, 권위 있는 사람을 향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사회적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적 개인주의로 인해 상실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참여이다. 지역공동체를 강조하고 학생들이 자원봉사 또는 봉사학습을 통해 시민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중시한다. 참여하는 시민성으로서 지역사회 참여, 공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관계성, 공동의 이해, 신뢰와 집단적 헌신, 그리고 특정의 공동체 문제나 기회를 넘어서려고 한다. 학습자들은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를 통한 학습을 포함하여 생활에 참여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투표를 저하에 대한 대책, 박탈된 공동체의 갱생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를 포함하여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실천으로서 이웃과 시민사회의 작은 결사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⁷¹⁾

69)번스타인은 진보교육/혁신교육(progressive education/pedagogy)이 지식의 전달/교수 및 교육과정의 약한 분류화와 구획화(weak framing)을 중시하는 ‘비가시적 교육학’을 지향한다고 말한다. 진보교육은 과학적 발견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수·학습 과정을 중시한다. 진보교육의 ‘활동’(activity) 또는 ‘실천’(practice)으로의 관점 전환은 원래 정치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근본적이고 해방적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회적/교육적 위계와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Young & Muller, 2016: 98).

70)1997년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 3의 길’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정치적 문해력’은 독일의 보이테스바흐의 논쟁성 재현의 원칙과 흡사하다.

셋째, 정치적 문해력⁷²⁾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적 불의의 해소, 구조적 비판, 자선과 자원봉사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을 통한 체제의 변화 등을 시도한다. 학습자들에게 시민을 위한 지식은 물론이고 기법을 통해 공적 생활에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국가적으로 스스로 효능적으로 살도록 민주주의 제도, 이슈, 문제, 실천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적 개념, 절차적 기술, 행위를 통한 학습, 정치적 참여 등 지식, 기술 그리고 가치를 통해 공적 생활을 하는데 효과적인 정치적 소양으로서 관용, 공정성, 진리 존중, 이유 있는 논변, 차이 존중 등을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다.⁷³⁾

크릭 보고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역할을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또는 공동체 차원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촉진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와 칸은 이와 유사하게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로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그리고 정의를 지향하는 시민을 강조한다(Westheimer & Kahne, 2014). 첫째,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시민성(personal citizenship)으로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 인격, 정직, 성실, 자제력, 근면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둘째는 참여하는 시민성(participatory citizenship)으로서 지역사회 참여, 공적 문제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관계성, 공동의 이해, 신뢰와 집단적 헌신, 그리고 특정의 공동체 문제나 기회를 넘어서려고 한다. 셋째는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성(justice-oriented citizenship)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적 불의의 해소, 구조적 비판, 자선과 자원봉사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을 통한 체제의 변화 등을 시도한다(Westheimer & Kahne, 2004: 237-269).

71) '공동체'라는 용어는 하나의 '공동체'는 하나의 제도와 연계되어 있고(학교 공동체 등), 같은 문화적 혹은 언어 집단에 속해 있으며(소말리아 공동체 등), 유사한 일을 공유하고 있으며(어부 공동체 등),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난민 공동체 등), 이념이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보존 공동체 등), 유사한 흥미를 갖고 있으며(독서 공동체 등), 삶의 양식을 공유하며(게이 공동체 등), 정부를 공유하고 있다(스코틀랜드 공동체 등)(Thomson, 2011: 305).

72) 크릭의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 도출됐다. 폴리스를 하나의 단위로 축소시키는 플라톤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프레이리의 '의식화'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강조하면서 부정의를 영속화하는 조심스러운 기도를 하는 실용적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의 본질에 있어 '정치적 문해력'이 서로 다른 이익집단의 화해를 중시하는 데 비해, '의식화'는 권력의 모든 인간관계, 인간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억압의 거부를 중시한다. 정치교육의 정당화에 있어 정치적 문해력은 정치를 사회적 조직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면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의식화는 교육이 불가피하게 정치적이이라며 교육자는 해방과 순치 사이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한다(McCowan, 2009: 46-6).

73) '사회적·도덕적 책임'(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신뢰하며, 교실 안과 밖에서, 권위 있는 사람을 향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사회적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적 개인주의로 인해 상실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참여'(community involvement)는 아이들은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를 통한 학습을 포함하여 생활에 참여하고 이웃과 사회의 관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투표율 저하에 대한 대책, 박탈된 공동체의 갱생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를 포함하여 참여민주주의의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의 민주적 실천으로서 이웃과 시민사회의 작은 결사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은 아이들에게 시민을 위한 지식은 물론이고 기법을 통해 공적 생활에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국가적으로 스스로 효능적으로 살도록 민주주의 제도, 이슈, 문제, 실천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정치적 개념, 절차적 기술, 행위를 통한 학습, 정치적 참여 등 지식, 기술 그리고 가치를 통해 공적 생활을 하는데 효과적인 정치적 소양으로서 관용, 공정성, 진리 존중, 이유 있는 논변, 차이 존중 등을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인성적 성격(윤리)이 강하다. 우리의 인성교육과 같은 PSHE(개인·사회·건강 교육)와 SMSC(영성·도덕성·사회성·문화성 발달)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참여'는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지역사회참여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 '정치적 문해력'은 시민적 성격(정치성)이 강하다. '지역사회참여'는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결합할 때 소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적 문해력'과 결합할 때 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일랜드 대학의 비에스타 교수(Biesta, 2019)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그리고 정치적 시민성이 결합되는 민주적 시민성을 요청한다. 첫째, ‘도덕적 시민성’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개별적 시민성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서 존경심 관용 정직 성실 자제력 근면 등과 같은 덕성과 자질을 가져야 한다. 쓰레기 줍기, 재활용, 법 준수, 세금 납부 및 빛 갚기 등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급식소나 노인센터 등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이타심을 발휘하는 등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시민성’은 공공적 삶과 지역공동체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를 결속시키고 통합하며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시민성이다. 시민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의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지위나 자격으로서의 시민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해 적극적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며, 상실된 공동체 갱생 프로젝트와 지역사회의 작은 결사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가까운 이웃과 함께 작은 모임 또는 동아리를 만들어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는 관계성도 갖게 하는 것이다.⁷⁴⁾

셋째, 정치적 시민성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 불의의 해소, 구조적 비판, 사회운동을 통한 체제의 변화 등을 시도하는 시민성이다. 정치적 시민성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도덕적 시민성과 달리, 사람들이 왜 굶는지 등 복지 시스템을 탐구하고 사실·진실에 따라 빈곤 원인을 밝히며 캠페인을 벌이거나 대책을 강구하며,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의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는 도덕적 시민성과 정치적 시민성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시민성과 정치적 시민성의 심각한 균열과 불일치를 보인다. 민주주의 뿌리조차 흔들리는 조짐이며 민주주의 위기이다.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정치의식은 높음에도 그것을 타파하려는 개인의 도덕적 노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제도를 타파하는 주체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조리한 제도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개인의 주체적 세계관을 형성해야 한다.

시민성은 크게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그리고 정치적 시민성 등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중적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이라고 칭할 만하다. 실천의 영역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일상의 시민성이다. 캐나다의 학교교육개혁론자 M. Fullan은 Desco의 4C, 즉 협력, 의사소통,

74)교육현장에서의 공동체적 목적으로서 ‘사회정의’라는 교육목적이 중시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Portelli & Menashy, 2010: 369).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사회교육을 옹호하는 비판적 교육자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정의를 위한 공동체 교육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교육목적의 배타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많은 경우 평등이나 혹은 사회정의에 기반을 둔 교육목표들은 경제적 목적에 의해 압도되고 만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적 교육학은 사회정의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교육목적 또는 교육에서의 공동체 목적을 강조한다. 사회정의를 위한 학교교육은 교육을 공동체적 비전과 긴밀하게 연결시킨다. 학교는 그 자체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학생들은 일반 공동체를 변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비판적 교육자들은 ‘혁신적(transformative)’ 교육목적을 사회정의와 연결시킨다. 사회정의의 개념을 확충시킴으로써 다문화적 의미, 정체성, 차별적 권력/특권 등을 포함시키는 일은 정치와 정치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또한 타인들에게 정의와 부정의에 관해 어떻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단순한 지식의 주입을 뛰어넘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장려한다. 교육은 사회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만일 학생들로 하여금 인종적, 성적, 동성애 등 혐오적 가정들에 대해 성찰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은 부정의를 재생산하고 만다는 것이다.

창조성, 비판적 사고 능력⁷⁵⁾을 넘어설 것을 주창하면서 인성과 시민성을 추가한 6C를 요청한다.⁷⁶⁾ 인성 없는 시민성을 주창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성 없는 인성을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풀란의 인성과 시민성의 동시적 요청은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많다. 일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 간에 다중적 시민성이 드러나지만, 맥락과 상황 조건에 따라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개인 사이의 소통과 조직 속의 소통이 지향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위한 연대는 다를 것이다. 사람은 민주적 역량과 권리와 의무 및 덕목, 곧 ‘시티즌십(시민성/시민다움)’을 갖추어야 비로소 시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시민성은 일상의 균열로부터 시작된다. 민주적 시민성은 일상적 관심과 대화, 참여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75)사람보다는 일/사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비판적 사고’는 합리적·직선적 사고를 선호하며, 그리고 협조적이며 협력적이기 보다는 공격적이고 대립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향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기에 ‘공감적 사고’를 요청하기도 한다. 공감적 사고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며 그것은 자기평가를 포함한다.

76)풀란은 『학교교육은 왜 실패하는가: 교육변화의 새로운 의미와 성공 원리』에서 21세기 학습 역량으로 6C를 제창하고 있다. • 협력(collaboration: 팀워크) 능력: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일하는 능력, 대인관계기술과 협업능력을 통해 시너지 내기, 팀 내의 역할관계와 도전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함께하기, 타인으로부터 배우고 타인의 학습에 기여하기. •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명확한 메시지 전달): 다양한 상대에게 맞는 여러 스타일, 방식, 디지털 등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 창의력(creativity: 모험가적인 해결책): 사회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업가적 시선 갖추기, 새로운 학습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올바른 질문 던지기, 리더십 발휘를 통해 학습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엮기. • 비판적 사고 능력(critical thinking: 정보 찾기와 평가): 정보와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그 속의 패턴과 연결점 보기, 의미 있는 지식 구성과 실제 사회에 적용하기. • 인성(character: 책임감과 신뢰): 의지, 끈기, 인내, 회복탄력성 등 핵심적 특성을 구비하고 심층학습법을 배우는 것, 학습과 삶의 통합적 접근 능력. • 시민성(citizenship: 차이의 인정과 공동선에 대한 기여): 세계시민답게 사고하기,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짐, 모호하고 복잡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관심과 능력의 구비를 통해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www.michaelfullan.ca)

II.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

1.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

1) 한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

① 일상

촛불항쟁의 가장 큰 과제는 적폐청산이었다. 적폐는 국정원, 재벌, 언론, 검찰, 사법부, 군, 사학 재단, 종교계, 사립유치원 등 너무 광범위해서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곳곳에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또아리를 튼 적폐는 공정한 물을 줌먹는다.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허무감을 갖게 만든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거판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상과 이념, 새로운 주장, 새로운 학설, 새로운 시도는 기득권의 벽에 막혀 소리도 질러 보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적폐청산의 노정이 험난한 까닭은 정작 다른 곳에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적폐청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일상이다. 일상은 관성이다. 관성은 보수다. 따라서 일상은 보수다. 그런데 일상은 시민들 속에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일상은 시민을 보수로 만든다. 일상은 아무리 날카로운 비판, 신념, 도덕성이라도 호물호물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일상에 들면 타협, 녹슬게 마련이다. 더 힘든 것은 일상의 마력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무의식 속에 깊이 틀어박힌다.

이처럼 일상은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기반이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보통 일상의 작은 실천을 쉽게 여기곤 한다. 언제 어디서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작은 실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대한 사건, 과오는 깊이 기억 된다. 성찰 또는 각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은 사건은 놓치기 쉽고 기억하기도 어렵다. 성찰의 대상도 되지 못할 때가 많다. 일상이야말로 변화를 잡아먹는 무서운 적이다.

그런 점에서 생활속 민주주의는 일상과의 싸움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일상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주주의는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2019 검찰은 오히려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시민들은 그렇게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한다.

② 시민 주체 역량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민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백 년 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운동, 1948년 4.3항쟁,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항쟁,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항쟁은 엇치락뒤치락 하면서 들쭉거리다 다시 일어나는 민중의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각은 단지 교육의 힘이 아니라 항쟁, 혁명 등 숭한 피를 흘리면서 얻은 자기깨침(자각)이었다.

87체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지 제도만이 아니라 시민역량을 얼마나 축적해왔는가를 보아야 한다.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6월항쟁은 시민의 자각이 다다른 극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시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6월항쟁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눈으로 평가해야 한다. 6월항쟁은 분명히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항쟁 이후 87체제는 과정으로서 과연 시민의 성장에 과연 얼마나 탄탄하게 기초를 다졌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만 민의 자기깨침은 혁명이나 항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깨침은 첫째, 누구나 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기반이 된다. 둘째,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일상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연대한다는 것을 뜻한다.

깨침 역량은 민주주의 역량의 바로미터이다.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 시민의 한계는 곧 민주주의의 한계로 드러난다. 그런데 시민은 거기 그냥 존재(being)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becoming) 존재이다. 그냥 존재하는 시민은 상당히 불안정한 존재이다. 작은 파장이나 충격, 유혹에도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새롭게 형성되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굳건한 기반이 된다. 민주 시민교육의 초점은 흔들리는 시민이다.

③ 양극화

민주주의는 갈등을 먹고 산다. 의회는 계층, 세대, 지역 간 자원배분을 놓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갈등조정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등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원리, 조정하는 기술, 대화의 기술이 따라줘야 한다. 여기서 기술은 단지 스킬의 문제가 아니다.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대의와 원칙, 품격을 잃지 않는 태도, 공공성의 원칙,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의 근원에 충실하려는 태도는 정치의 가능자가 된다.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냉소주의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줄어들게 된다. 정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산된다. 시민들의 정치불신은 왜곡된 이데올로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특정 정당이 과대표 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그나마 자원배분 역할을 하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악순환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극화-탈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심지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메시아에 대한 유혹을 불러들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치불신은 캠페인이나 '계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치효능감, 나아가 민주주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즉,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는 말이 만고의 진리인 까닭은 여기에 있다.

④ 소통

한국은 연고사회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혈연, 지연, 학연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실감하곤 한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이루어진 연고집단은 정치, 행정, 경제 등 곳곳에 또아

리를 들고 이익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 한다. 그러한 독점은 자원배분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적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그래서 연고주의는 한국사회가 아직도 전근대사회라는 혐의를 받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은 한편으론 단절사회이기도 하다. 1인 가구, 나홀로족이 급증하고 있으며 고독사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BLI)를 보면 한국의 공동체지수는 바닥수준이다. 한국은 관계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SNS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결과잉은 오히려 가짜뉴스, 증오의 확산 등 소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연결과잉과 관계결핍 중간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다. 여기서 방황은 두 얼굴을 의미한다. 연결의 힘은 역동적 얼굴로 나타난다. 촛불은 대표적인 예이다. 신자유주의가 파놓은 골이 지구를 극우로 몰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민주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긍정의 힘 때문이다.

반면에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미래가 불안하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다 보니 각자도생, 순응, 무관심이 만연하게 된다. 연대보다는 정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소통과 배려, 협력의 가치가 사라진다. 결국 정치적 허무주의가 싹튼다. 탈정치가 확산되면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신드롬이 생겨난다.

따라서 상반된 두 얼굴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과제다. 연결과잉 속에 결핍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결핍과 과잉이 아닌 내실 있는 소통으로 연결해야 한다.

⑤ 인구변화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가 됐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일본은 이미 2005년 초고령사회가 됐고 2018년에는 75세 이상 인구가 65~74세 인구보다 많은 중고령사회가 됐다. 문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30년 뒤 지역의 생활·산업 기반이 붕괴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위험지역’이 2019년 10월 기준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43%인 97곳에 달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겹친 까닭이다.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는 속도는 일자리, 생산성, 복지, 국가재정, 연금체계, 의료체계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분단과 냉전이테올로기에 묶여 있는 사회이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성장속도를 경험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을 둘러싼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 정치를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한다면 한국사회를 휩싸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상당부분 그곳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사회는 그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어려서 전쟁을 겪고 6,70년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그들의 소외감은 쉽게 자원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연합이다. 유년시절 또는 청년시절에 각인된 경험은 그들의 세계관을 매우 강렬하게 지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벗어나기도 매우 어렵다. 더구나 그들을 끌어안고 갈만한 사회적 여건도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오히려 그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있을 뿐

이다.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권위와 권력에 있다고 믿는 그들로서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 될수록 자신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2000년대 중도개혁정권이 들어선 이후라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자신들은 분단이테올로지, 냉전이테올로기와 함께 청산대상이라는 모멸감을 느꼈을 법하다.

그러한 사회적 무시가 낳은 모멸감은 정치적 저항을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모멸감은 비슷한 속성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확산된다. 그들이 유튜브가 전해주는 걸리지 않는 정보에 쉽게 호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은 잠재되었다가 특정한 계기에 의해 집단적 저항으로 분출되곤 한다. 집단적 저항은 모멸감의 생성, 확산, 그리고 행위를 통한 분출의 과정을 따라 발생한다(김진욱, 허재영, ‘인정을 위한 저항 : 태극기 집회의 감정 동학’). 한국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목할 지점이다.

2)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촛불은 적폐 때문에 마음이 부서진 자들의 목소리이자 몸짓이었다. 마음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독한 역설의 힘이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금 적폐청산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자들은 끊임없이 억지, 거짓, 왜곡을 확대재생산 하고 있다. 이렇게 적폐청산이 더딘 것은 그만큼 적폐청산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뜻이 된다. 한 마디로 정치권력은 바꾸었으나 사회는 바꾸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왜 그럴까? 현장 활동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한국사회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변화를 이룩한 것은 맞죠. 87년도 6월 항쟁, 노동자 투쟁 과정 속에서 근본적 단계를 만들어 냈고, 사회구조도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배형태는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헌병에 의한 무단통치에서 약간의 자율권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얼굴과 모양새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당이 집권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자본과 외세라고 합니다. 자본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분리된 둘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서 한국 사회 근본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삶 자체를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재조직하는 것, 교육까지 포함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이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자율적 결정권이 많이 주어진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게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자유를 줬는데 구조적으로 형식적 자유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 그 안에 사람들을 빠뜨리는 것이죠. 빠뜨려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의 문제다. 이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재앙으로 봅니다..”(노동)

한국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길게는 수백 년, 짧게는 분단 이후 한국사회 내부에 또 아리를 틀어온 기득권 구조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지배구조는 수백만의 촛불항쟁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인가. 왜 그럴까.

과거 군부독재 정권이 물리력 행사를 통하여 강제와 억압, 통제를 일삼았다면 소위 문민정부 이

후로 한국의 지배층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소위 진지전이란 것이다. 여기서는 가시적인 물리력보다는 언론, 홍보, 문화, 교육, 종교를 활용한 설득과 대중의 자발적 동의가 주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그람시가 말하는 헤게모니이다.

동의라고 하지만 찬반투표와 같은 의식적 행위가 아니다. 아무도 동의한다고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국 동의하고 있는 무의식에 가깝다. 어쩌면 자신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알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 말이 여기에 어울린다.

여기서 시민들은 두 얼굴을 지니게 된다. 첫째, 설득과 회유, 포섭의 대상으로서의 시민이다. 이 대목에서 제도 민주주의는 진전이 아니라 한계요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1987년 이후 자본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이 대중에 대하여 어떤 지적 도덕적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둘째,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시민이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으로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내고, 대안을 세우고, 결정하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민성의 핵심이다.

그러한 헤게모니의 관점에서 보자면 설득과 회유의 대상으로서의 시민과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민은 상호모순이다. 즉, 양자는 긴장관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속은 비어있다. 그렇게 비어있는 민주주의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시민성은 단지 매너나 에티켓이 아니라 케케묵은 질서에 순응하거나 포섭되는 것을 거부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렇게 견제하지 못한 결과 개인은 시장적 개인이 되었다. 그것이 87체제의 한계이다.

과거 군부독재 시대에는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주는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했다. 시민사회가 취약하면 개인과 가족은 엄동설한의 벌거숭이처럼 된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한국현대사가 그랬다. 시민사회의 취약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 간의 완충지대를 제거해 개인이 국가에 정면으로 노출되거나 대립하는 양상을 초래한다. 개인과 국가가 충돌하면 언제나 국가가 승리하게 돼있다. 과거 개발독재는 국가와 가족 사이에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가족이기주의를 최대한 부추기면서 자원을 동원하는 체제였다.

87체제에서는 군부독재가 물러간 자리를 시장권력이 대신 차지했다. 개인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이르러 자본 앞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이미 1990년대 이후 소위 지식정보화사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어닥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와 맞물려서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훨씬 더 사사화(私事化)된다. 과거에는 폭력에 의해 사사화가 강요되었다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사사화가 강요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배타적 이익추구, 승자독식은 양극화로 귀결된다.

시장적 개인은 자본의 포섭으로부터 버티기 어렵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미래불안 속에서 시장적 개인은 각자도생 할 뿐이다. 인간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불안이 가중될수록 연대보다는 개인적인 사투에 몰입하게 된다. 또는 불안을 피하려 안락과 말초적인 자극을 탐닉하게 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무기력해진다. 결국 무관심과 방관이 팽배하게 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

는다. 더 위험한 것은 희생양을 만드는 혐오가 싹튼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촛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시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새로운 사회운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시민적 기반, 자기비전, 자생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① 책으로만 배운 민주주의의 한계

보통 시민교육의 3 요소는 지식(사실에 대한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 가치 및 태도(자기 이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배려와 민주적 가치 등), 기술(판단력, 대화 및 토론의 기술, 비판적 사고, 타협과 조정 능력 등)을 가리킨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바로 경험학습이다. 경험학습은 경험하는 단계→서로 다른 관점에서 경험을 해석하고 반성하는 단계→관찰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와 개념을 통합하는 단계→새로운 도전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새롭게 파생되는 이론이나 학습을 활용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되게 힘들게 획득했는데 그게 체화되지 않았다는 느낌, 책으로만 민주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책으로만 배웠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풀뿌리활동)

새로운 세계를 지식이나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수록 낭만적, 급진적, 도식적, 추상적, 관념적, 비현실적이기 쉽다. 과거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기층 민중운동에 투신했지만 그들의 일상적 삶과 맞닿아 있지는 못했다. 사회운동가들에게 기층민중은 ‘혁명’을 위한 하나의 계급이었고 세력일 뿐이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온기와 소중함을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념의 열기는 탄압과 험악한 상황을 견뎌내는 지주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② 삶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검증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87체제의 또 하나의 한계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기술을 일상에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령,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술,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논쟁하는 법, 중재, 협상, 갈등을 조정하는 법 등이다.

“그나마 다행인거는 그래도 큰 일 있을 때는 다 같이 한 번씩 나옵니다. 사람들이 큰 이슈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참을 수 없어서 그러겠지만, 근데 자신의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고 그게 결국은 나를 돌보는 일인데, 그런 배웠던 중요한 원칙이나 제도들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해보거나 검증해보거나 확인하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풀뿌리활동)

여전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념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시민이 내 삶과 생활에서 민

주주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 ‘혁신정책’ 등의 새로운 정책 기조는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 발굴과 해결에 시민들을 초대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견 개진으로 머무를 뿐 내 삶에서 실질적 변화를 경험하거나 개인의 관심으로 돌아오지 않기에 민주주의는 나의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③ 문제해결 능력이 위축된 비민주적 환경

인간은 어떤 상황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구경꾼이 되거나 순응하게 된다. 시민이 된다는 문제해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을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쉽게도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문제해결의 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시민의식을 갖추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덕목이든 모든 습득하고 체험화 할 수 있는 과정, 그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래문화까지도 그래요. 예전에는 가난한 집 아이, 부자집 아이가 서로 어울리면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가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문제해결 능력도 없어요. 관계 맺는 능력과 방식도 상당히 떨어져요 학교폭력은 더욱 가혹해져가는 거죠.”(청소년)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덕목을 충분히 터득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목표지향적 드라이브와 무관하지 않다. 즉, 한국교육은 과정에서 찬찬히 뜯어보고, 만져보고, 깊이 생각하고, 삭히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주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명문대라는 깃발을 향해, ‘산업보국’을 위해 돌진하는 훈련병이었다. 교육도 한국경제의 성장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④ 사회엘리트들의 빈약한 민주적 감수성

다양한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집중된 권위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 인격, 입장,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다. 민주주의도 엘리트들만의 힘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렵다. 민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잘 쓰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권력엘리트들의 민주적 감수성이 낮은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그것은 공정성,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는 사회 제도와 규칙,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엘리트들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가진 자들, 국회의원들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멀었어요. 국정감사에 리얼돌을 가지고 나오는(기가 막히다는 표정)... 성매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산업으로 키우자하는 그런 멍청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데 무슨 평등이 이루어져요.. 장관 후보자를 뽑는데... 그 사람이 여성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 교수더라구요. 여성이 결혼을 안 한 비혼이라고 해서 ‘당신 가서 출산의무부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나는 너무 멀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멀었다고 생각해요.”(성평등교육)

근대사회가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졌다면 21세기 사회는 접속과 분리가 자유로운 탈중심의 사회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도 대중(mass)이 아니라 다중(multitude)이 된다. 대중이 서로간의 차

이가 없는 무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다중은 서로간의 차이를 지닌 채 어울리는 다채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 대중이 매스미디어(mass-media)에 접속한다면 다중은 멀티미디어(multi-media)에 접속한다. 매스미디어가 일방향이라면 멀티미디어는 쌍방향이다. 대중은 대중매체의 정보 전달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대중은 꼼짝없이 소비자, 중심(권력)에 의해서 장악된 수동적인 백성으로 진락한다. 중심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종당할 수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는 다르다. 멀티미디어에서 다중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 대중이 조직되기를 기다리는 흩어진 백성이라면 다중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사회운영 시스템도 바뀐다. 낡은 엘리트주의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

⑤ 소통 단절

21세기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병렬컴퓨터의 시대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민(백성)이 지닌 숫자와 다양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다양한 숫자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병렬컴퓨터처럼 연결되어야 한다. 병렬컴퓨터에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소통에도 일정한 규칙과 기법이 있다.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관계 맺기에 필요한 삶의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

“지금 좀 더 심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의 아이들은 6명이든 2명이든 모이면 전부다 휴대폰 가지고 있는데 서로 대화하는 것을 거의 못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핸드폰) 없이는 대화가 안돼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상처받지 말고, 상처주지 말자. 상처주면 나도 상처주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무 자르는 듯이 자르는 느낌이 있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해요.”(인권)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이 한마디. 이게 모든 조직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에요. 주춧기간이나 기업, NGO도 똑같이 새겨들어야 해요. 그게 참여자들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토론교육)

민주주의에서 소통은 중요한 덕목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받고 그 이유는 일방적이고 주입식 교육 때문이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개인이 소통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이다. 소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는데 토론에 참여해야 하거나, 나의 문제가 아닌데 의견을 내야하는 상황에서는 입을 다물게 된다.

⑥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구조

근대가 중앙은 생각하고 지역은 행동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시대이다. 정부와 시장의 힘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자발적 시민 결사체가 중요해진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나눠야 한다. 분권은 탈중앙, 탈집중을 뜻한다. 분권의 핵심은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이다. 분권은 자기결정과 자주관리라는 철학적 기초 위에 서있다.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 조직과 집단의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사고, 자기혁신을 통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아직도 국민개념에 너무 많이 묶여있고, 중앙정부에 묶여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방자치의 주도권이 없어요.”(다문화)

시민은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간다. 따라서 개인의 삶은 지역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역주민이나 시민의 개념보다는 국가의 국민, 그리고 중앙 정치과 행정의 관점이 지배적이라 시민이 주변과 자신을 돌아보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상위의 위계구조를 바라고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우고 있다.

⑦ 무한경쟁의 좁은 문에서 막힌 민주주의

신자유주의는 고도의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다. 경제적 합리성은 개인의 고유성과 권리에 기초한다. 더 나아가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고립된 개인에 맞추려 한다. 경제적 합리성은 개인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한다. “경쟁은 생산들에게 합리성을 강요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원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경제적 합리성은 그야말로 한 부분의 합리성일 뿐이다. 경제적 합리성으로 삶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부분의 합리성이 전체의 합리성이 될 수는 없다. 한 부분의 합리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에서는 환산제일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뭐든지 계산하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도 많다. 배려, 관용, 서로 존중, 공정성, 책임과 권리는 환산할 수 없다. 시민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환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가치를 홀대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다. 공존, 공생의 가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배타적 이익 추구하고 승리제일주의만이 최고의 선인 사회가 된다.

“(어른들도 자기 것만 하고, 다른 사람들 것에 관심을 안 갖는 원인은) 경쟁 체제때문이라고 봐요. 교육이 원인이라고 봐요. 빵이 하나 밖에 없으니 열 명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까지 교육이 막다른 골목까지 치닫지 않아도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모색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 정부도 그런 노력은 안하고 있어서. 과감히 흔들어서 균열을 내고 그걸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상태를 흔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금이 갔는데 거기를 메꾸려고 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큰 맘 먹고 공이라면 내 던져 깨트려서 다시 조립을 하면. 좀 어떻게 될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 사회가 안 한다고 생각해요.”(성평등교육)

“우리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명문대 입학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입시였는데 지금은 명문대 입시고, 예전에는 인서울이었는데 지금은 인서울도 아닙니다. 그만큼 청년실업도 심각하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그래서 명문대 가라 이렇게 규정되는 순간 아이들은 시민의식이든지 시민성이든지 들어볼 기회도 없고 갓출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동네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면서 자기들 문화를 형성했는데 지금은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시간이 없어요.”(청소년)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펀더멘털은 다져지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공정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역설적이게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사회의 지배구조가 깨져가고 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졌거나 계급적인 상황들이 이완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착취구조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계급의 단절들이 고착화돼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것과 이것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기저들, 그 중 가장 큰 것이 분단과 국가 폭력, 군대에 의한 국가 폭력, 물질적 착취,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의식까지 지배하는,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하게 하는,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속에서 공정성, 평등에 대한 요구들이 얼마나 많이 커졌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와 경험들이 축적된 거죠.”(노동)

그러나 이러한 인식, 깨침의 변화만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펀더멘털을 설명하기는 부족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질서를 위해 피땀을 흘리면서도 즐기치게 맥을 이어왔던 골간세력,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시민의 힘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기존 운동단위들이 잘 조직되고 훈련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정서를 정확히 보는 능력이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메워주는 근본 밑바닥, 전체에게 깔린 요구와 의식,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들의 성장이 놀라울 정도였다... 누가 뭐라고 래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부 집단들이 조직적 힘으로 곳곳을 변화시켰던 경험, 지금 사람들에게는 다 100% 마음에 수용되지는 않지만, 그 때 표현되었던 자기의 가치, 우리가 누구나 안고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무수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노동)

3)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지향

① 시민성은 문제해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이자 역량이다

민주주의는 향유자가 아니라 주체가 될 때 지킬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내고, 대안을 세우고, 결정하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문제의식을 열심히 낼 줄 안다. 현장의 상황을 보자.

“과거청산이 안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과연 일제강점기 이후, 그때부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아이들한테. 과연 우리는 정의롭게 역사? 내지는 사실, 인물을 바라볼 때 과연 정의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할까. 내지는 우리는 과연 정의롭게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 하나부터 정의롭게 살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무겁진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때서부터 지금의 나도 제대로 그 정의실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아요.”(인권)

그러나 과거청산이 안돼있다는 것은 문제일 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문제해결의 주체가 없는 문제의식은 공허하다. 시민성은 문제해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이자 역량이다.

② 개혁은 자원배분의 원리를 바꾸는 것이다

적폐청산이 더디다는 것은 권력은 바뀌었으나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촛불혁명의 가장 큰 과제는 역진 불가능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은 새로운 질서를 원했다. 새로운 질서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도록 국가 운영 시스템을 다시 짜는 것을 뜻한다. 재벌, 군, 경찰, 국정원, 검찰, 사법부가 망가지면 국가적 자원배분도 왜곡된다. 따라서 자원배분을 바로 잡는 것이 적폐청산의 핵심이다.

그런데 자원배분은 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차원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짜는 것이다. 친자본, 친대기업, 친수도권, 친개발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친노동자, 친시민, 친중소기업, 친지방, 친환경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러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바로 정치다(David Easton).

가령, 헌법재판소의 여성 30% 비율은 국가자원 배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예산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느냐 지방정부와 나누느냐,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예산을 친대기업에 쓰느냐 친중소기업에 쓰느냐, 건설경기 부양에 쓰느냐 교육에 쓰느냐, 무기 살 돈을 돌려서 복지, 문화예술 지원에 쓰느냐, 수도권과 지역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한 가치 배분을 놓고 계급, 계층, 세대, 지역, 영역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때로는 싸우는 곳이 바로 국회이다.

그러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는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적폐청산의 진정한 효과는 경제를 밑에서부터 좀먹어 무너뜨릴 수 있는 권력형 부패의 싹을 현 단계에서 잘라내는 것,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통치자-관료적 기능집단-시민’이라는 삼각관계에 기초한다.⁷⁷⁾ 그런데 한국 시민사회는 통치권력(대통령)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나 태도에 비판의 화살을 집중할 뿐 국가 전반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는 제대로 짚어 내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거대한 관료시스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향, 전략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권은 바뀌어도 관료조직은 바뀌지 않는다.⁷⁸⁾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기서 정치의 주인은 시민이다.

민주주의란 자원을 민주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이 드러난다. 재벌중심 경제의 가장 큰 해악은 자원배분을 교란한다는 것이다. 학력(學歷)중심 사회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곳에 집중해서 학력(學力)중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펴주어야 한다. 독재란 자원배분을 독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는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한 대표적인 예이다.

77) "국가란 통치자와 피통치자 모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공적 권력이자 제도적 실체이다." (최장집, 2011) 그러나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시민들로 하여금 통치자와 국가를 동일시하게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퍼뜨리려 한다.

78) 심지어 보수정권도 관료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가 어렵다. 2014년 2월 24일 한겨레신문이 박근혜정부 탄생 1주년을 맞이해 대선공신 30명을 설문, 면접 조사한 결과 15명이 박근혜정부의 최고 파워집단은 관료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정부 출범 초부터 관료의 힘이 너무 셧다. 정권교체를 하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관료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정책 입안부터 추진까지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둘째, 시민들의 에너지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원은 권위의 힘을 빌어서 배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비권위에 의한 배분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문제의식, 정의감, 참여의지, 인권, 사회적 신뢰, 연결망, 갈등조정 능력, 생명존중, 상상력, 공감과 연대 등은 분명히 사회를 움직이는 자원이지만 비권위적 배분을 필요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면 개인에게도 자원 배분의 원리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돈, 감정, 건강, 재능, 지식, 열정, 시간, 욕망 등 삶의 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삶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즉, 삶의 설계이다. 가령, 개인이 돈을 버는 데 하루 몇 시간을 투자하느냐, 퇴근해서 가사노동, 운동, 돌봄, 자원봉사, 학습, 문화생활, 지역사회에 시간과 열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활의 가치가 달라진다. 한 개인의 생애사는 시간과 돈,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생활속 민주주의는 단지 시민성의 개념이나 원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설계로 확인,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민의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은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익 추구, 권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민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디테일한 문제에서 딱 부딪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외에 노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연말에 일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근무수당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걸 가지고 나눠야 합니다. 당연히 나는 관리자인가 그냥 이미 그런 거 생각 안하고 돈 안받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은 일반 직원들한테도 시간외수당 문제를 그렇게 지시할 순 없어요... 얼마 안되는 시간외 수당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나눠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기업과 다르고, 어쨌든 좀 더 이 일에 대해서 미션과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실상 고귀한 노동을 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한 편으로는 이윤배반적이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하나. 내가 혹시 잘못되었는가? 나도 자기검열을 하기도 하는데, 마음 속에는 직원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외 8~9시까지 1~2시간 더 일한다고 그거 안 주면 휴가로 대체해달래요... 이 친구들도 나쁜 친구가 아니고, 나름 다 착하고 일을 하자고 하면 잘 따라오고 나름 고마운데, 딱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섭섭하죠.”(인권)

여기서 두 가지 과제가 생겨난다. 첫째, 임금노동과 사회적 미션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미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적 미션은 환산될 수 없다. 그렇다고 사회적 미션이 없으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황폐한 사회가 된다. 자발적 시민참여는 임금노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노동이 할 수 없는 노동(work)이다. 가령, 사회적 신뢰 향상은 임금노동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참여도 가치를 생산하지만 임금이 아니라 명예와 공익으로 보상받는다.

둘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는 자발적 합의를 뜻한다. 사회적 자원배분 시스템 개편, 생활구조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개인은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나 혼자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설사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 일부 청년들의 헌신성을 인건비 절약 수단으로 악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열정페이’라고 부른다.

③ 일상의 정치 회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민주주의와 삶의 원리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삶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즉, 생활속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활속 민주주의가 사회운영 시스템과 맞물려 작동되지 못하면 에티켓이나 매너 수준에 머물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생활속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못하면 공허한 논리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생활속 민주주의와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매개하는 중간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정치이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상의 정치가 일상화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정치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일상의 정치는 국가적 자원배분과 개인의 생활자원 배분을 하나의 맥락 위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활정치의 핵심이다.

생활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 혼자서 자원배분을 감당하기 어렵다. 가령,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 건설, 여가, 먹거리, 에너지 등 자원배분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혼자서 하기 어렵다. 거버넌스는 둘째, 포섭되지 않으려면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생활정치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활질서를 흔드는 효과가 있다. 우선 자신을 흔들어야 포섭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국민들의 1인 1표가 잘 정착되어야 해요. 진짜 민주화되려면 진짜 대통령, 국회 선거할 때 1일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투표하는 날 하루만 1인 1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정치교육)

정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가 참여해서 구조를 바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된 거죠. 주인과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데 주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노동)

위에서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신뢰, 문제의식, 연결망, 시민참여 등 사회적 자원 배분 방식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생활정치의 핵심이다. 가치 생산자인 노동자들은 또 하나의 가치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④ 삶의 방식으로서의 시민성

시민성은 삶에 대한 태도이자 가치이다. 태도와 가치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오래 지속된다. 그것은 시민성이 삶의 방식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삶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다. 어떤 노동을 하는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 노동의 대가를 얼마나 받는가, 노동 외 휴식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는 삶의 방식 거의 전부를 규정한다. 따라서 노동을 빼놓고 시민성을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규범에 머물 수밖에 없다.

노동은 생식과 아울러 인류역사를 잇게 한 두 축이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태어

난다. 그렇지만 자연은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제대로, 충분하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매달리지 않고 자연을 인간의 생활에 알맞도록 바꾸어 놓아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 존재이면서도 그저 자연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노동)으로 자연의 일부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낸다. 여기서 노동의 창조성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 노동하는 인간)이며, 인간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이다. 노동은 삶의 의미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은 ‘생활비를 버는 것’, ‘임금을 받는 것’으로서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노동 즉, 임금노동이 된다. 즉 고용은 ‘노동을 구조적으로 자본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고’, 자본의 최종 목표가 이윤이 듯, 임금노동자의 최종목표는 그가 생산해낸 물건이 아닌 ‘임금’이다. 노동과 자본 모두 궁극적인 목적인 ‘돈벌기’를 위한 공모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강제된다. 앙드레 고르는 이것을 타율노동이라 부른다.

타율노동 체제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소비할 것을 생산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지 않는다. 어떤 생산조직도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필요나 희망에 맞추어 생산하지 않고, 그럴 능력도 갖추지 못한다. 도시의 거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어떤 도시도 생활필수품을 자신의 지역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고, 주변의 지역공동체들과 생산활동을 교환하며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노동으로부터 소외가 일어난다. 특히 한국사회의 노동이 그렇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노동은 ‘노가다’이다.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OECD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다.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임금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자발적으로 장시간노동을 선택한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소득빈곤 뿐만 아니라 시간빈곤에 시달린다. 게다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들의 외침은 단지 취업이 아니라 노동다운 노동,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이다.

그래서 앙드레 고르는 ‘가능한 한 최대의’ 필요를 위해 ‘가능한 한 최소의’ 노동을 투여하는 자활노동을 제시한다. 자활노동은 필요노동이지만 타율노동이 아니다. 자활노동은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바람직한지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한다. 자활노동을 움직이는 기제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자기충족성이다. 자활노동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적 개인주의나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미시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것을 뜻한다. 즉,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소비·생산·협업의 방식을 사회적으로 실험하는 일이다.

한나 아렌트는 ‘동물은 노동하고, 인간은 제작한다(Animal laborans, Homo faber)’라고 말했다. 아니말 라보란스는 생물학적 충족을 위해서 노동하기 때문에 ‘어떻게?’만 질문한다. 호모 파베르는 공동체와 도덕, 의미에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노동을 노동답게 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바로 ‘왜?’라는 질문에 속에 인간다움에 대한 희구, 인권, 삶의 의미, 시민성이 담겨있다.

• 노동에 기반한 시민성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자기실현이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방관한 상태에서는 시민

성 실현,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노동자, 시민사회,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노동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삶의 방식을 규정한다. 현장 노동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민주노총도 사회제도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영역을 만나게 되죠...그런데 이게 운동이라는 형태로 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공공성, 노동운동의 문제를 자기 이해관계로만, 이익으로만 굴복시켜서는 안됩니다.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사회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단기이익과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눈 앞의 물질적인 이익에만 묶었을 때 노동운동은 자기 생명을 잃고 맙니다. 당장은 이익을 얻는 거 같지만, 오히려 자신의 이해마저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노동운동이 겪는 가장 큰 잘못이라면 시민사회에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 속에서 바라볼 때 살게 될 수 있다.’는 관점이 빠져있어요... 가령, 요양서비스가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 안에 비리도 생기고 인권침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돌봄의 영역을 예전에는 가족이라 개념으로 감당했다면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어떻게 감당할거냐. 그것을 공공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민간위탁방식의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단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노동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관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의 사회서비스도 노동을 통해서 실현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표현이 되어야,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철학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적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 이러한 철학적 기초가 작동해야 한다고 봅니다.”(노동)

바로 이 지점이다. 노동자는 시민에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은 삶의 조건이자 삶의 방식이다. 그에 비하면 시민성은 삶에 대한 태도이다. 이렇게 양자가 결이 다르다 보니 서로 엇박자를 낼 때가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선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시민성이 태도와 가치를 말하면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경우 임금노동과 사회적 미션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면 그런 혼란을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인권으로서의 임금을 실현하고 사회적 미션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민주주의다. 물론 그러한 합의로 가기 위한 소통이 중요하다.

노동자와 시민의 소통이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이상적인 면이 없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너무 이상화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시민의 공간을 지역사회로 좁히는 것도 편향이다. 시민성의 공간은 곳곳에 편재한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다.

“예전 민주노동당 초기에 ‘노동조합 간부들이 지역 주민들과 소모임을 만들라.’는 지침을 만든 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가장 잘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도시적입니다. 조합원들 중에는 일상적으로 그런 의미 삶의 관계가 형성된 조합원들 있어요. 동네에서 계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꿈 자기 활동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삶과 활동을 다 표현해내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노동)

현장의 말처럼 시민성을 발현하는 범위는 무한대이다. 조금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양자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지만 사회적 관계도 맺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는 노동만큼이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노동다운 노동을 위해서는 노동소외 극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 더구나 AI시대의 노동은 융합적, 협업적 성격을 띤다. 바로 그 지점에서 노동과 시민성이 만난다.

• 시민성에 기반한 노동

노동자들은 노동의 댓가를 받는 임금노동자이지만 자기 삶의 조건을 해결해가는 시민이기도 하다. 가령, 직장내 갑질은 노동자에 대한 억압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격적 침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성의 문제도 결합되어 있다. 즉,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노동자와 시민은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과 인격은 분리되어 있다. 자본은 노동력을 살 뿐 노동까지 지배할 수 없다. 그런데 자본은 노동자의 인격까지 지배하려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는 우선 노동자 자기 안에서 우선 일어나야 한다. 노동자의 시민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의 삶과 시민성을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삶에 대한 태도로 본다면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시민성은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가능하다. 삶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는 공간이 따로 없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는 투사야. 집에서는 폭군이야. 애들한테는 폭군이야. 저는 무심한 아빠라 변명을 하자면, 그런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정체성이 다르게 표현되는 삶...”(노동)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로서의 얼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 선거구민, 소비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얼굴을 지닌 노동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동운동의 양상은 물론, 한국사회의 비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시민들의 삶의 방식, 시민성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시민들이 노동, 노동조합,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선, 신뢰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⑤ 민주주의는 민에게 열린 공간만큼 성장한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민주시민교육은 민을 대상화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동원 또는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관은 민을 활용하려 든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과 시민이 만나는 공간이다. 시민은 시민과 만나서 마음을 열고 성

장해간다.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주는 만큼 민주주의는 성장한다.

“시민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결국엔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경험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자칫 하면 좋은 선의로 했겠으나 결국 시민들을 대상화 시키거나 또는 행정의 조력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고 더 논의하고 싶은데, 회계날짜가 돌아오니까 또는 총선시기, 무슨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딱 이때까지 이거하고 이때까지 이거하고 이때까진 이거 해야 돼, 기간을 정하죠. 우리가 마치 무슨 공무원인냥... 그래서 짜여진 관 안에서 밖에 못하는 거예요. 재량권이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풀뿌리활동)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권한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 또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모습도 있어요.”(풀뿌리활동)

인간은 선택의 폭이 좁으면 흥미를 잃게 마련이다. 흥미를 잃어버리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요 구경꾼이 될 것이다. 그만큼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된다.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권한을 대폭 위임(empowerment)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권한위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속에서 주민들은 성장할 것이다.

2. 민주적 시민성의 덕목들

이 연구는 앞서 논의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현장인 시민의 삶에 기반한 민주적 시민성의 덕목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3명의 연구자가 청소년, 성평등교육, 자원봉사, 정치교육, 노동, 인권교육, 풀뿌리 민주주의, 토론, 다문화 등 10개 영역에서 일하는 활동가 및 민주시민교육 강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이의 답변이 제한을 덜 받으면서도 심층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 방식을 택했다.

시민성의 덕목은 인터뷰 참여자에게 한 질문 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소양으로서 일상에서 실현 가능한 것 세 가지만 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들의 인터뷰 전사자료를 분석해서 도출한 것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인터뷰 자료 전체를 검토하는 단계** : 자료 전체의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10명의 인터뷰 전사자료를 연구자 모두가 읽음
-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는 단계** : 개별적인 자료를 하나씩 다시 검토하면서 시민성 덕목과 직접 관련된 진술, 문제의식들을 추출해냄
- 의미형성 단계** : 각각의 유의미한 진술들을 토대로 그 의미를 발견해 냄
- 주제묶음(theme cluster) 정리 단계** : 앞 단계 작업을 한 차례 더 반복하면서 그것을 통해 드러난 의미들을 주제묶음(theme cluster)으로 정리함. 그 결과로 경청, 성찰, 타자 존중, 비판적 사고, 참여/실천, 공동체성의 6개의 시민성 덕목⁷⁹⁾을 도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식에서 덕

79) 덕은 사전적(네이버)으로 표현하면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덕목은 그러한 인격적 능력의 요소가 된다. 덕목은 시민성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시민성,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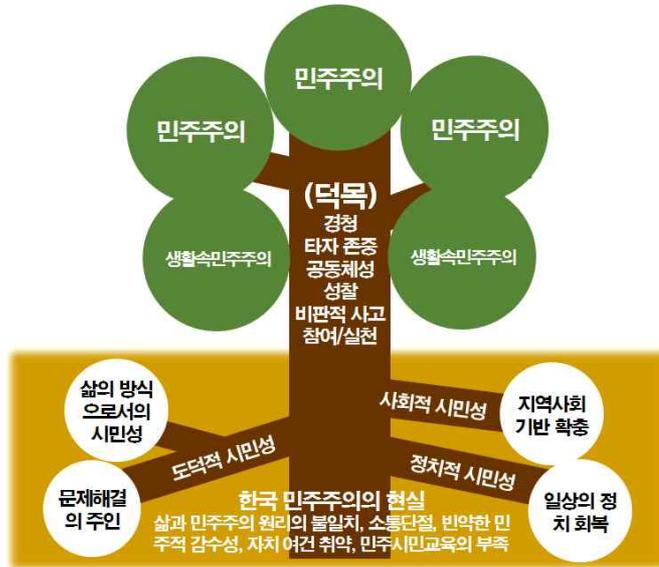
목이 어떻게 추출되었는지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문제의식	추출된 덕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을 가로막는 위계질서 •토론 없는 생활현장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약자들에게 민주적이지 않은 사회 •사회엘리트들의 빈약한 민주적 감수성 	타자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 부족 •사람 또는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반성적 사고의 부족 	자기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교육 없는 일상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긴 청소년 •문제해결 능력이 위축된 비민주적 환경 	비판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으로만 배운 민주주의의 한계 •삶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검증하는 장치 부족 	참여/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의 붕괴 •개인적인 이해에 국한된 권리의식 	공동체성

이렇게 도출한 민주적 시민성의 6개 덕목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심화되었다. 포커스 그룹 연구 참여자들에게 우리가 도출한 6개의 덕목 각각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며 아래 포괄적 기술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과 6가지 덕목은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 체계도



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을 실현해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말한다.

1) 경청

① 듣고 묻고 이해하는 인내 과정으로서의 경청

상대의 이야기와 입장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와 이로 인한 몰이해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예단,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밀고 나가게 되면 그만큼 의사결정의 힘이 떨어지고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보다는 듣기,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듣기는 인간이 나 이외의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 중 가장 원초적인 것 일뿐만 아니라 타자와 본질적 관계로 돌입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제대로, 끝까지 잘 들으면 이해하게 되고,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이해할 수 있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타자 존중의 구체적 실천행위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라고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보다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다를 때 인내심을 갖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해요...(중략)...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무조건 주장하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색깔이나... 그런 걸 좀 지양해야 되고. 공동의 이익과 목적의 공공선, 가치 추구라는 전제하에 먼저 듣고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가야하지 않을까요?... (중략)...어떤 목적에 의해서 발제가 되고 의제가 있으면 다 다른 얘기들을 해요. 물론 나도 의견이 있죠. 그런데 내 의견을 얘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듣고 내 의견을 거기에 합쳐서 더 좋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가장 좋은 의견을 내고 싶으면, 들어야 되다는 거죠.”(정치교육).

위의 말처럼 경청은 상대의 의견을 듣고, 다른 의견이라 해도 인내심을 갖고 다른 견해를 포용할 줄 민주시민의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한 기다림의 결과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모두가 충분히 말하고, 듣고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청은 단순히 잘 듣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으며, 내가 들은 것에 대해 잘 묻고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다시 묻는 행동을 반복하여 이해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해요. 저 사람은 무얼 하고 싶어 할까를 잘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때 경청은 우리가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게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또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중략)...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FGI2).

이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렇기에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만든 정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철학이기에 이러한 절차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상대

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것, 견해가 다르다면 일단 편부터 가르치는 극단적인 편 가르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상대를 규정하는 것,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빨리 결정하려는 것은 경청의 장애물이다.

경청이 나의 의견이나 입장을 억누르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의견이 후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오해되어서도 안된다. 누구나 어떤 사안에 대한 견해, 삶에 대한 철학, 시대에 관한 사상을 갖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 소속감, 일체감, 연대감을 갖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견해, 가치, 사상을 무시하고 한 방향으로의 정렬을 요청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동체는 같은 지향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이해, 견해, 가치, 사상이 무시될 때 우리는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같음을 추구하지만. 같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름이라든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습이 되면 같음은 강압이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의식 속에 개인의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나친 개인주의는 가로막아야 되지만, 개인의 안위라던가, 개인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해요, 약이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 구분이 지나치게 이분화 되어 있어서 가치가 너무 좌우로 갈려 있어서, 너 오른쪽이지 하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습관이 오랫동안 돼있어요”(FGI4)

즉, 경청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이지만 과도한 겸양으로 인해 개인의 의견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입장과 생각이 존중받아야 함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조급함과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서의 경청

경청은 자칫 개인적, 도덕적 덕목으로 치부되어 사적이고 일상적인 관계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규범 정도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 개인이 갖추거나 갖추지 못한 역량으로 치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청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청이 사회적인 특성이 있다함은 친구, 가족 등 사적인 모임을 넘어서서 보다 공적인 관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정치적 특성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위, 아래를 나누는 질서나 권력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경청의 과정이 결정의 원리로 작동되도록 해야 하고, 공동체마다 경청을 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토론하고 경청하는 시간이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결정되고 빨리 하면, 책임이 그 만큼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지켜올 정도로 토론하거든요.”(FGI2)

“경청은 개인적인 교육에 국한될 때 인성교육화 됩니다. 경청은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경청과 성찰, 자타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지. 개인을 놓고 경청해야 된다고, 성찰해야 된다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망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習)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우리가 조금 더 잘 듣기 위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건지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니다. 사회적으로 경청과 타자존중과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편적으로 재단해서 스탠다드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그 공동체들이 민주주의 학습의 경험의 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FG11)

경청의 덕목이 사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망으로 확대될 때, 시민들은 토론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주체가 된다. 공적인 의제에 관해 발언하고 결정에 참여했으니 나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그 결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경청의 사회성을 살리려면 조금 더 잘 듣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청의 시민성은 정치적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맺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상·하질서나 권력관계 안에서 경청이 작동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경청이나 성찰, 타자 존중이 어떤 방식으로 강조되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또는 인성교육에서 경청이 중요해, 성찰이 중요해, 타자 존중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강요하는 것...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좀 더 지위가 높거나 또는 경험이 더 많다고 해서 그와 반대인 사람에게 경청해야 돼. 타자를 존중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FG1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경청이 억압의 기제가 될 수도 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약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경청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은 단순히 잘 듣는, 예의바른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덕목이 아니라 개인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관계질서, 힘의 관계 안에서 작동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하며, 이때 상호간에 민주적 관계가 보장되어야 진정한 경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태고 적부터 인류는 몸짓, 눈빛, 언어를 통해 소통했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소통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생물학적 생존의 문제이자 존속을 위한 흔적이었다. ICT 기술이 결합된 지금에는 각종 미디어와 도구를 통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수발신하며 나를 주장하고, 타인과 만나고, 정보를 획득한다. 여기에다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와 의견, 공동의 결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경청은 민주주의로 모두가 살기 위한 방법적 원리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타자 존중

① 타자와 함께 살아가기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여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 민주주의 사회 역시 시민들이 모여 만드는 사회이다. 다수의 타자가 만나 사회 운영 제도일 뿐 아니라 생활양식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 맺기는 필수불가결하며 그 과정에서 갈등과 긴장이 발생하기도 하고, 합의와 평화의 경험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모든 인간은 각각 다른 욕망을 지기고 태어나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인류는 생태계 속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었다. 갈등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체주의요, 독재다. 따라서 다수가 민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아닌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존중은 공동체 성원간의 관계를 만드는 첫 단추로 모든 존중은 상호적이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그냥 존중, 배려 이정도 많이 느낌만이 아니라, 세계 인권선언에 나타나있는 그런 정도 워딩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료시민에 대해서... 그게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게 다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진짜 존엄하다는 말, 그게 안되니까 성소수자를 따로 떼놓고 이 사람들을 인간 같이 보지 않고, 직급이 낮다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 그냥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이 정도 보다는 정말 침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존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그 정도의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있으면 다른 거 어떤 메뉴얼 같은 덕목,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되게 감성적일 수도 있고, 문화적일 수도 있고, 제도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이긴 한데, 어떠한 이유든지 자기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서로 꼬이게 돼요...”(자원봉사).

그러나 존중은 시혜적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인간이자, 인권적 존재로서 그 존엄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배경, 조건의 사람이든 모두 존중받아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

② 존중을 가로막는 편견과 배제

나와 다른 배경, 경험, 외모, 인종, 식견, 가치, 지위, 계층에 대한 편견은 존중의 장애물이다. 여성,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이등시민이다. 이들은 권리와 권한 행사에서 제한적이다. 물론 모두 평등한 참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참정권이 유일한 권리가 아니며, 참정권마저도 접근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모두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살펴야 한다.

현장활동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의 활동은 딸만 여섯을 낳았다는 이유로 할머니로부터 구박 받은 엄마를 떠올리며 시작되었다. 존중받지 못한 엄마를 바라보며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이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받은 차별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타인이 당하는 차별 경험에 대한 이해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를 낮게 보는 거, 자기보다 돈이 없다고, 지위가 낮다고, 자기보다 학벌이 낮다고 낮춰보는 거,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들을 폭행했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고객이 서비스하는 사람들에게 성추행하고, 폭언을 하고, 고객들이 식당에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하찮게 여기는 거죠. 서비스 하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자기에게 친절히 하지 않았다고 갑질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평등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함부로 대할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을 나누는 것 같아요. 존중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근래에 알았어요. 양성평등 교육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참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성도 똑같은 사람이어서 존중해야 하는데 여성을 비인간화하고 있어요.”(성평등교육).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편협한 평등 의식은 상상 이상 거칠게 다가왔다. 불평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나의 면죄부’를 주장

했고, 타인의 불평등을 공감하기 전에 나의 불편함을 인정해 달라 호소했다.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을 꼭 이야기해야 해요. 올드한 중년의 사람들은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며 항의해요. 자신들도 힘들었다는 거죠. 여성들만 힘든 거 아니고 나도 밖에 나가서 죽어라 일했다는 거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차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차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차별했다고 말하냐’면서 항의해요. 남자들도 사회에서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통념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죠. 왜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그러냐는 거예요. 간혹 성 차별을 못 받아들이는 여성들도 있어요. 자기는 귀하게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죠. 딸로서, 외동딸로서, 있는 집 딸로서 교육에서 배제를 안 당해봤다는 여성들이구요. 또 하나는 아들을 키우는 부류의 부모님이예요.”(성평등교육).

불평등은 오랜 시간을 거쳐 사회적 제도와 관습으로 우리의 문화와 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애쓰지 않으면 알아차리기도 힘들지만, 맞서 싸워서 스스로 벗어나기도 힘들다. 또한 문제를 밝히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불편한 감정과 어찌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외면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평등을 안고 타자에 대한 존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성평등의 실현은 모든 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성불평등은 다시 남성들에게 피드백 된다.

“성평등이 어떤 의미이나? 평등해야 남성도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남성이라고 돈 많이 벌 수 없고, 남성이라고 힘이 썰 수 없고, 남성이라고 울지 않고, 늘 씩씩할 수 없고, 남성이라고 항상 축구를 잘할 수도 없고. 남자도 똑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남성에게 특권이 주어진 이 사회에서는 남성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요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성평등교육)

2016년 미국 전국 시 경연대회에서 14살의 중학생 Royce Mann이 ‘백인 소년의 특권 (White boy’s privilege)’란 제목의 시로 최고상을 받았다.

“여자들이여 미안해요. 흑인들이여 미안해요. 아시아 미국인들이여 미안해요. 선주민들이여,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찾아온 이주민들이여 미안해요. 중산층 가정의 백인 소년으로 태어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미안해요. 당신들이 사다리 바닥에서 출발할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다리 위에 있었어요. 나는 지금 당신과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럴 기회가 온다면 그럴까요? 나는 그렇지 못 할 거예요. 백인 소년들은 말하지요. 이제 여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군! 흑인생명을 보호하라는 목소리는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나 나는 그들이 과장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우리는 여자들처럼 행동해야 해요. 강해지고 변화를 이끄는 여자들처럼...”

우리는 누구나 특권적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역으로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장애 중심의 사회에서 누리는 특권이다. 공공화장실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사는 특권이다. 애인과 손을 잡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성애 사회에서 사는 특권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권을 알아차리는 것, 더구나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특권을 가진 존재 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기 힘들다. 더구나 내가 가진 특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더욱 힘들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화’이다. 차별을 넘어 대상화 된다는 것은 주체로 통합되지 못하고 밖에 머문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는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특권이 된다. 밖에 머물게 되면 인격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인으로 살기 어렵다. 특히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상화가 그런 경우를 잘 보여준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대상화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다문화가 대상화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는 굉장히 좋은 뜻인데, 다문화니까 지구본을 주고, 학교 예산, 교재를 줍니다... 다문화라는 뜻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서 불리는 다문화를 외국에 가서 영어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설명이 부연설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통은 서로 다양한 문화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보통 춤, 노래 문화를 지칭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의식주나 생활방식 가치나 신념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가 다양하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다문화가 대상화 되어가지고 이주민, 혹은 이주민과 결혼한 사람, 특히 다문화는 이전에는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결혼 이주 여성들 가족만 다문화 가족으로 했다가 좀 더 해석을 넓게 하자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 가정, 그 아이를 까지, 그 아이를 지칭하는 것이 다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다문화인가를 봤을 때, 이미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대상화가 돼버린 용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용어를 정하면 될까? 저희는 뭐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게 용어가 변한다고 달라질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이들을 한 부모 가정이야, 장애인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다문화)

다른 존재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존재에 대한 편견은 이주민, 북한이주민, 난민 등에 대한 배제로 이어져 다른 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편협한 태도로 이어진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차별은 쉽게 내뱉어지거나 무시되고 있어 우리가 모든 이에 대한 존엄의 태도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틀 안에서 규정 짓지 말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테두리를 긋는 것은 테두리 밖의 존재를 만들고, 이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다.

“시민을 개념상의 시민으로 보지 말고 구체적인 이슈, 현안과 연결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시민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냥 시민이 어디 있어, 이러 저러한 이해 관계에 시민이 있는 겁니다.”(토론교육)

말하자면 방 안에 정물화처럼 놓여있는 화분이 아니라 들판에서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다. 완전태인 시민은 없다. 시민은 수많은 관계, 다양한 입장과 이해, 그가 속한 사회제도와 질서,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형성되어간다.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현실태 속에서 시민을 보는 것은 존재를 존중하기 위한 우리의 시민적 노력으로 이뤄가야 한다.

③ 관계를 맺으며 배우는 타자존중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농경시대의 사람들이 농업 생산 수단의 토대인 토지와 마을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현대 도시 공동체에서의 삶은 직업, 취미, 교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더 넓은 관계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물리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며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혹자는 이를 들어 연결과잉의 시대라 평하기도 하고, 관계의 풍요 속에 관계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연결된 지점은 많으나 관계를 맺었다고 할 만한 깊이는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욕구가 개인적 차원의 연결에서 멈출 뿐 사회적이고 공공적 관계 맺기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연결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연결되는 과정들이 결국 사회적인 관계망, 사회적인 지향점, 사회적인 공공의 관점,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되기보다는 개인의 관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FG1)

위의 문제제기처럼 관계에 대한 고찰은 관계의 욕구가 인간이 타고난 자질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차원에서 학습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왜곡된 입시제도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배제된 채 개인의 성적에 올인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청소년 문제가 그러하다. 그들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 훈련될 공간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성장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느닷없이 관계 맺기의 역량을 갖춘 성숙한 시민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소년들은 시민의식을 갖추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덕목이든 뭐든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 그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도 습득하는 거잖아요.”(청소년).

관계 맺기는 단지 ‘사교 :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귀기’가 아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감과 배려를 터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에서는 관계를 지식으로 배우기에 삶의 언어로서 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계 맺기는 기계적 투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 감성이 매개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개인 권리에 대한 자각과 함께 감수성을 발휘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형성될 수 있다. 최근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등의 감수성이 민주적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권리 자각에 대한 문제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도덕적 자각이든, 타자에 대한 존중 내지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이거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문제에 들어가거나, 젠더 감수성 등 여러 부분에서 감성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FG1).

이데올로기이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어야 차가운 이론에서 온기가 도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감수성은 감성의 영역이기에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획득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감수성은 사회 안에서 충실한 관계 맺기, 그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존중'은 한 사람의 시민을 그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존중받을 때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타자에게도 이러한 경험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소속감과 유대감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며 공동체에서 종종 생기는 분열을 극복하게 한다. 성별, 나이, 재산, 학력, 학벌, 인종, 기호, 역사... 등 여러 가지 잣대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시키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 시민성에 해당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3)성찰(省察/reflection)

성찰은 돌아봄, 다시 봄이다. 나를 돌아보는 행위, 다시 보는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 사건, 상황을 두텁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의 판단과 행동, 이유를 반성한다. 자기 행동의 돌아봄을 통한 깨우침, 성찰은 시민으로서의 자기점검이다. 시민들 각자가 서로의 행동 양식을 비난하기보다 오류 가능성을 성찰할 때, 민주주의 제도는 그 효력을 십분 발휘하게 된다.

① 성찰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미션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어느 체제든 완전한 체제는 없다.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민은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욕망끼리 부딪히다 보면 소리가 나고 갈등이 일게 마련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도 직선으로 가기 어렵다. 민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상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돌아볼 때, 목적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와 자기 성찰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와도 연결이 되어있어요.”(청소년)

이는 특히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 시민성에 대한 과잉된 강조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궤도를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이 방향을 잃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 그에 앞서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자기를 찾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덜 일으키면서도 다른 사람도 잘 돕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에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옹도 그랬잖아요. 오전 인생과 오후 인생으로 나눠보면 오전은 쌓는 것이고, 오후는 갖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그런 것이죠. 오후 인생, 그리고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목적성과 자기 미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공동체성 회복이나 일상민주주의, 이런 배운 가치들을 실현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디 현장을 찾아가고, 그런 걸 해보니까 결국 그게 저 자신에게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 목적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하려고 하는가, 뭘 애써서 하려고 하면 그게 힘이 들지만, 내가 어떤 큰 방향성 속에서, 당연히 내가 움직이는 걸로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수월하더라고요.”(갈등조정)

성찰이 꼭 잘못을 찾아 반성하는 과정만은 아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자기점검의 과정이다. 시민성의 차원에서 성찰은 우리 사회의 지향과 역사에 대한 사회적 점검이다.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정의와 가치에 대해 검토한 것처럼 우리 사회 역시 성찰의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

성찰이 결여되어 있거나 게을리 한다는 것은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왜 게을리 할까? 인간의 본성은 더 달콤한 것이 있으면 회피하려 한다. 가령, 한번 경제성장의 달콤한 맛을 보면 성찰이 쉽지 않다. 그 결과, 성장지상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추구해야 할 절대가치로 굳어져 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다 허용될 수 있다는 맹목적 인식과 도구적 가치관이 확산된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해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한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한 일방통행의 위험성은 노동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노동현장의 고민을 들어보자.

“성찰, ‘원래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게 뭐지?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는 거야? 그걸 위해서 나는 뭐했어? 나는 이 안에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대표 하기 위해서, 대장 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표현하고 싶어서 눈 감은 건 없어?’ 이런 거겠죠...(중략)...내가 주인이 되어야 전체적인, 계급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바라보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시야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은, 똑같은 동어반복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의 역사, 자기가 겪은 짧은 길든 평가와 돌아봄 속에서 나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노동).

이처럼 민주주의에 있어서 성찰은 첫째, 도로교통표지판이다. 교통표지판은 현재 위치와 방향을 알려준다. 성찰은 민주주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둘째, 성찰은 백미러의 역할을 한다. 백미러를 보지 않는 운전자는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민주주의는 백미러를 잘 봐야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 셋째, 성찰은 붉은 신호등이다. 붉은 신호등은 장애물이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한 경고이다. 민주주의는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고를 받아들이야 한다.

② 사회적 성찰을 위한 숙의와 토론

인간만이 성찰할 수 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며, 우리가 함께 처한 객관적 상황, 현실, 실재에 가까워진다. 우리의 실천은 성찰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성찰하지 않는 행동은 맹목적 행동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이슈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숙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의 숙의가 바로 집단적 성찰이 될 수 있다. 집단의 구성원, 조직의 회원들은 법, 습성, 강압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 숙의하고 토론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직운영에 있어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너무 빨리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역으로 드러내는 경우를 보자.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할 때까지 토론을 해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결정 할 때에. 보통 1년이 걸리거든요. 되게 느리게 가요...(중략)... 논의 과정이 굉장히 길게 해서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누구도 책임 없이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좀 오래 걸쳐서 진행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확실적인 사회에서는 토론하고 결정하는 이런 기간이 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FGI2).

최근 한국사회도 곳곳에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실험하고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 이슈에 대해 충분한 숙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공공적 숙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이성적, 객관적,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집단적 성찰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숙의하는 데는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흠뻑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빠르고 효과적 결정의 방식을 넘어 숙의를 실험하는 것은 지금 우리사회에는 여유로우면서도 진지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4) 비판적 사고

① 진실을 보려는 애쓰는 적극적 태도로써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치적 시민성에 꼭 필요한 덕목이다. 왜곡된 근·현대사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비판적 개인이 시민 사회의 주체로 설 기회가 없었다. 일제 강점기, 분단 그리고 전체주의적 군부독재로 인해 시민들은 선악이 분명한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 살아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취해냈고 마침내 민주적인 정권을 창출해냈다. 그럼에도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흑백논리와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반목과 질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획일화된 사회잖아요. 전체주의적인 군부독재가 문제였어요. 거기에 단순히 군부독재뿐만 아니라 적이 북에 있다는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획일화된 문화가 자리 잡혔어요. 교복, 단체복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 유행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획일화된 정치·사회 역사와 그 문화가 문제인 거죠. 다름과 차이가 인정되면서 자기 개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 거죠.”(청소년)

“폐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는데 폐친이 정부와 현재 정책에 대해서 전부 다 꼬아서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정부를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사안을 아, 저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분이 그냥 태극기부대라고 통칭하는 돈 받고 나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내가 그것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저기에도 어떠한 주장과 맥락이 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 나 스스로 느껴져

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양쪽 그룹 다 보고 싶은 거만 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자원봉사)

비판적 사고는 사회현상을 접했을 때 개인에게 전달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찾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찾고자 노력하는 적극적 태도이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쉼 없이 살아갈 때는 당연히 이해와 요구가 상충하게 되고 각종 갈등과 사회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비판적 사고는 이러한 사회문제와 이슈를 볼 때 여러 집단과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가려낼 줄 알며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의 사회적·역사적 뿌리를 찾아낼 줄 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할 때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히 학교는 질문하는 것,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금기시해왔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찾으려는 활동에 이데올로기의 딱지를 붙여왔다. 비판적 사고를 위한 정치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② 토의와 토론을 통해 길러지는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토의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일한 이슈,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 선 시민들이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토의·토론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정작 논의의 장은 형식적, 의례적으로 진행되고 이것을 들어 정치와 행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면피하는 관행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국가 기구에서부터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해요. 시민성, 민주주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30분인가 1시간 회의하고 2시간 동안 밥 먹는 관행은 없어져야 해요. 그러고서 회의 수당 받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의사를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민주주의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해요. 어쨌든 거기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결과물을 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청소년)

토의와 토론은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이 일상적인 장에서 펼쳐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나 마을공동체 운동은 협동과 참여의 정신으로 사회적·경제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그 현상으로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 실험은 일상의 공적인 조직에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훈련하는 좋은 마당이다. 조직에서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하는 방식이 훈련되지 않은 채 과격하게만 비판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려는 것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의 할 때는 다 팻말이 있어요. 당신의 한 마디가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비판하고 사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일들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자는 게 저희가 하는 방식입니다.”(FGI2)

신규 아이টে을 결정하는데도,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조합의 가치와 방향, 현재의 상황을 검토해 찬찬히 결정해나간다. 그것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모두의 동의와 인정을 얻어 함께 책임을 지는 과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조직이 탄탄하게 운영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직원 모두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

개인은 공적 담론의 장에 참여해 공공정책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을 통해 시민이 되어간다. 비판적 사고는 독일 정치교육이 추구하는 3가지 능력(정치적 판단능력, 정치적 행동능력, 정치적 활용능력)과 맞닿아있다.

첫째,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사실과 가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이다.

둘째,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적절하게 자기주장을 하며 합의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능력이다.

셋째,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와 같은 시사적인 정치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룰 줄 알며 자신만의 정치심화 학습을 조직할 수 있는 방법론적 활용능력이다.

③ 정치적 문해력을 키우는 비판적 사고

가짜뉴스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 더욱 심각한 것은 뉴미디어의 발달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이자 유통자가 되어 정보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검증도 없고 책임도 없이 전파를 타고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교묘하게 사실을 조작하고, 자극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이러한 가짜정보를 분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중략)...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양쪽 그룹 다 보고 싶은 거만 보려고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자꾸 가짜뉴스들이 판치니까 더 이상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 확인하려해? 아 그러네? 하고 바로 보고 말지. 맞네 하고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게 있어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건 의지문제라는 것이 들기는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을 해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귀찮은 게 문제잖아요...(중략)...이게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면 되는데 그걸 안 거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선동에 휘둘리는 거죠.”(자원봉사)

가짜뉴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속에서 연결점을 찾아내어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정보과잉,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정치문해력을 키우는 것이다.

“팩트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문해력을 키워 주어야 해요. 우리의 정치 구조가 왜 그러냐고 할 때 시민정치의 토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정치라고 하는 구조가 시민과 분리되어 있어요...(중략)...시민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는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

고없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팩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갈까,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틀 안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문해력을 키워내야 한다고 봅니다.”(FG1).

또한 극단적으로 양분된 상황을 단지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배태된 좌우이데올로기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미를 가진 비판, 즉 감성을 담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비판적 사고가 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필요해요. 비판적 사고는 지적인 성찰, 지적인 과정도 필요하지만 감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판적인 지식에는 냉철한 비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비판적 사고의 틀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문제제기를 잘하는 것, 그 다음에는 구조적인 해결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리가 약합니다. 또 하나는 비판이라는 것만 크게 키우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중략)...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남북 간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성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대립은 거의 맹목적 신앙화, 신념화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잘못 되어 있고, 무비판적으로 판단을 잘못 한 거다 딱 잘라서 단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FG1).

비판적인 사고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이해관계의 연결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하며 거기에 더하여 다른 입장, 다른 견해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까지 요구된다. 결코 쉽지 않은 시민의 덕성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비판하는 시민이 꼭 필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그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거죠. 비판적인 개인으로 설 수 없다면 공동체성도 없는 거죠. 자기 개성을 지키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매사에 스스로 선택해 가는 삶을 살아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게 되겠죠.”(청소년)

국가나 지역사회의 공공정책 문제에 대한 공적 담론에 참여하여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사고는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개인, 시민이 없다면 공동체도 가능하지 않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시민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격적 주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는 사회적 주체로, 사회변화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 힘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실천을 하도록 하는 정치적 주체로 만든다.

5) 참여/실천

① 자각하면서 시민이 되어간다

촛불항쟁,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국가적,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참여하고 발언한 경험은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광장과 온라인에서

정치에 대해 토론했고, 촛불을 들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뜨거웠던 열기는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는 모습을 감추었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은 남의 일이 되어 갔다. 다양한 의제를 들고 사회변화를 추동했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주춤한 상태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시민사회, 생활현장 할 것 없이 시민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광장에 섰던 시민들이 막상 생활로 돌아갔을 때 시민으로서 목소리 낼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자리는 누군가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가 시민임을 자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내용들이 더 적어졌어요.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오지 않아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1인 단체들이 많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그 단체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복되거나 1인 단체들인 것처럼 와가지고 마치 민의를 대표하여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해요.”(FGI2)

“시대에 따라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민성이 일상생활보다는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시민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시민임을 계속 말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열려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의 장이 많이 열리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아직 일부인 것 같습니다.”(FGI3).

자각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이 되어간다면, 시민들의 자각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다가올 때 자각을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자신과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그 사안과 관련한 자신의 위치, 즉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각각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눈을 떠야 하며 이러한 권리 확대가 집단적 활동, 공동체적 활동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사람은 자기 문제로 다가올 때에 주체들이 자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자기를 확인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다 따지기 때문에 그 때 분명히 자기 포지션이나 자기 주체성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FGI2).

“각 개인이건, 사회구조이건 간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 필요성이 확인될 때에 일상적인 자각의 계기가 되는 거죠...(중략)...그런데 이 자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 나의 생각과 내용이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층들이 더 유연했었는데, 지금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의 현재의 조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중략)...권리를 느끼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단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 관계망이나 연결망을 통해서 이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죠. 이 권리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권한이라고 봐요. 시민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상당 부분 만들어가고 쟁취해 갔지, 누군가 던져 준 사례는 없어요...(중략)...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집단적 활동, 공동체적 활동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 권리를 확대하려는 작은 노력들을 확장하면서, 결국 이게 사회로 연결이 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FGI1).

둘째, 개인의 자각과 자각 이후의 권리 인식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각이 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다면 이는 능력 유무에 따라 권리 획득의 유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일부에게 한정되어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 신장이 사회적 논의로 이어져 모두를 위한 사회적 권리 신장의 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가 기반이 된 지향점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내가 고정화되었구나 라는 인식, 그리고 나의 권한, 권리가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걸 그냥 아카데미 같은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모임활동과 학습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 안에 녹여져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FG11).

이런 노력이 구체적인 생활현장으로 이어진 모습이 지역공동체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사회와 만나 참여로 이어지려면 강의실을 넘어서 생활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천 연계의 활동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② 권리와 책임을 가진 참여/실천

민주주의는 합의에 입각한 체제이다. 합의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합의와 책임의 불일치는 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목격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대의를 외치면서도 생활 속 민주주의에서는 빈약하고, 지나치게 많은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시민은 권리를 행사함과 더불어 책임을 진다.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리의식과 주장은 공허하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 시민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에게 그만큼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이고 따라서 나의 권리가 무엇이고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합의해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이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단체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절차와 형식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충분히 합의한 내용은 자신이 책임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힘이라고 봐요”(FG12)

“민주주의라고 하면 거창하게 정치, 경제, 사회변화만 말하죠. 소위 8, 90년대를 거쳐 온 사람들도 정치적 구호로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자기 가정, 생활양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속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리가 멀더라고요. 권위적인 느낌도 들어요. 종이컵 안 쓰기 운동하듯이 뭔가 실천운동을 하나씩 해 나가야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되면, 책임의식과 동반되지 않으면서 권리만 외치는 역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청소년)

민주주의는 사회운영의 원리, 제도입과 동시에 시민주체의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 내는 일상의

문화, 관습, 생활양식이다. 시민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각종 조직, 공동체에 참여해서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결정하며, 실천하고, 평가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체로 성장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게 된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현하는 거죠. 사실 권리, 권한은 자기가 주장하거나 발휘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만 강요당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뭔지 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시민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학습의 요소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풀뿌리활동)

③ 참여/실천의 구체적인 길, 논의와 결정

참여와 실천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은 각종 사안에 개입해 논의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결정과 집행의 경험은 당위적 필요가 아닌 실제적 필요를 알아차리게 하고 개인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참여나 실천이라는 부분이 개인에게 맡겨지지 않는 거죠. 개인이 이런 것을 자각해서 참여와 실천을 가속화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에는 필요해, 라고 당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와 실천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의사결정의 권한이죠. 의사결정의 권한과 집행의 과정, 이것을 시민들이 갖고 직접적으로 해보도록 하는 거죠”(FG11).

논의와 결정에 시민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지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드러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드러내는 게 그냥 욕구배출용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드러냄을 보고 이걸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하거나 말 하는 것 없이 예전처럼 말을 줄이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민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FG11).

참여적 시민은 논의하고 결정에 참여한다. 정부, 지자체, 마을조직 등 각 분야, 각급 조직에서 스스로 의제를 내오고 논의하며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참여와 실천이다. 이러한 직접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주체적인 개인,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민주시민은 축적된 민주적 삶의 산물로, 개인적·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실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운영할 때 대부분 학교당국의 정책을 전달만 해요. 학부모회라는 조직이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거기서 토론할 수 있는 능력, 결과물을 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해요. 토론을 통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 가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들과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해요.”(청소

년).

민주주의는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 시민에 의해 완성되어 간다. 시민은 자신의 이익과 공동체의 과제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제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사안, 의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에게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만이 진정한 참여라 할 수 있다. 결정권이 있어야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무게를 질 수 있다.

“투표하는 행위 자체만 시민이 아니고, 직장 안에서, 지역 안에서의 문제들을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FGI3).

“개인은 이제 당신도 충분히 성장한 개인이니 당신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이 균형을 맞추어서 사고하고, 의견을 제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시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숙된 개인이기 때문에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이익이든 공동체 과제가든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의제를 제안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약 없이 대화하고, 자기의지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행위나 권리. 이게 생활 속 민주주의예요.”(토론교육)

“결정적인 것은 참여와 실천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든 시민이든 범위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결정권을 스스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노동).

참여는 어떤 사안을 관조적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여하는 것, 그 곳 공동체에 속한 시민들과 관계 맺는 것이다. 실천은 관계 혹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고 행동하는 것이다. 관계를 맺어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면벽수도와 다르다. 혼자만 해서는 숙성되지 않고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참여와 실천이야말로 시민성 덕목인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재료이며 공동체성을 채우는 내용이다.

“나의 그 깨달음이나 내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에 대한 상호작용이나 나를 자극하는 요소는 결국 또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동안 관심 없었는데 왜 그런가는 결국 외부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내가 얻은 정보를 통해서 소화된 것들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행동이나 참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풀뿌리활동)

결국 실천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학습욕구도 생기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주변에 관심과 마음을 두게 된다. 그리고 나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6) 공동체성

① 함께 살아가기

시대와 사회에 따라 형태와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아왔고, 그래서 생존하고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공동체의 안정적 영위를 위해 규율과 규범을 만들었으며 이는 꽤 훌륭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현재의 규칙이 모든 곳, 모든 시간에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통적·권위적인 규율과 관습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여 사회 안정을 바랐으나 21세기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이것이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성을 벗어나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구가하는 현 시대는 공동체성의 의미와 방법을 다시 묻는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날아 갈수록 우리의 삶은 파편화되고 원자화 되어 가고 있다. 모두들 무한한 욕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어디론가를 향해 달리고 있으나 결핍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근저와 공동체에 대한 희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난 수 백 년 동안 혈연공동체, 지연공동체는 해체되었으나 21세기 들어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온라인 공동체는 대표적인 예이다.

공동체의 본질은 '상호작용과 연대'이다. 공동체는 해체됐으나 본질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은 현대사회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양식과 정신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

“공동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양상들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풀뿌리 안에서 조율이 안 되고, 규칙이나 합의가 안 만들어지고, 그 미세한 문제들이 넘비문제나 큰 사회문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봤어요. 결국에는 그 공동체성이 박약해진데다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일상의 민주주의는 전혀 안 챙긴 거죠...(중략)...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게 사실은 구의회 바로 아래,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갈등조정).

지역사회는 시민 삶의 터전이고 일상이 전개되는 곳인데 이곳에서의 민주주의 없이 도시와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가 가능할리 없다. 그렇다면 공동체성이 흔들리는 원인은 뭘까? 가장 큰 배경은 사회 경제적 환란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시대상황으로는 IMF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가 나를 지켜 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험구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중략)...저는 사람은 누구나 연결성,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회구조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FGI3)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도생을 도모하기 시작한다. 바야흐로 아노미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공동체성이 흔들리면서 시민들이 느끼게 된 상실감, 황폐함은 역으로 우리가 공동체성을 왜 회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 공동체적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과 연대의식은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공동체성은 공동체의 밖에 있는 타자와 우리를 구별하고, 배제하며 배타적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연고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지연, 학연, 직연은 배타성을 띠기 쉽다. 자기들의 이익공동체, 이너씨클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자와 약자들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어느 층위, 조건에 속하느냐에 따라 대접을 받는다.

“이주민들을 나눠서 관리의 대상과 배제의 대상으로 보죠. 비자(Visa) 유형별로 많이 나눕니다.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화시키고 적응시키려는 주체로 보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관리의 주체로 좀 보고, 일단은 비자가 없다면, 한국 사회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다문화)

이들은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한국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는 환영받는다. 적극적 통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니라, 함께 살지만 ‘구별’되어 결국에는 ‘배제’되고 만다. 공동체의 회복이 과거로의 회귀나 구별 짓기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②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의지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네트워크 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고 교류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연결’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회에 필요한 시민성은 인간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연결이 개인과 개인,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 확장되고 있고 나의 일은 모두의 일이며 사회의 일은 나의 일이란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 큰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중략)...가정에서 그 다음 단위, 나에서 그 다음 단위, 또 지역 단위에서도 그 지역을 넘어서는 맥락, 국가단위를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의 이슈나 맥락만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환경문제를 가지고 애들이 막 고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 비해서 더 많아졌을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전 지구적 문제에 접속이 가능한, 그것이 훨씬 더 용이한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자원봉사)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나 변화에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 주변에서 아주 가깝게는 내 이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중략)...혼자 사는 게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립된 삶 인거죠. 주인으로 잘 살려면 내가 필요한 것들도 알고, 남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연결성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경험하고 학습하고 계속 실천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시민성이라고 생각합니다.”(풀뿌리활동).

생활환경과 정보의 획득은 무한해졌음에도 우리의 인식은 아직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눈앞에 떨어진 사안에 전전공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 주변, 이웃을 알아가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③ 다름에 대한 이해, 협력, 화해로 구체화되는 공동체성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 물리적 이웃, 또는 공동의 이익(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민족적)과

관련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공동체성은 더불어 살고자 하는 가치이자 행동양식이다. 공동체성은 생활현장에서 협력, 다름에 대한 이해, 화해역량으로 구체화된다. 타인은 서로 반목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할 존재이다. 각 개인의 욕구, 필요성, 감정은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 다름/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공동체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원자화된 개인이 사물, 사건, 사람에 갖는 다층적, 다면적 연결성과 구조를 읽어내기가 쉽지는 않다. 인간은 정보화사회에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었지만 더불어 살기 더 어려워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각자가 처한 곳에서 시야를 확대해 멀리 보고, 숨은 맥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서로 보호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도 상호통합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죽일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될 대상이라고 서로를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되려면 평화, 공존, 다름에 대한 이해, 누가 중간에서 결판내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풀어내고 묶어내고, 연결하고 하는 화해역량, 그게 없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갈등조정)

“욕구나 필요성, 감정은 사실은 잘못하거나 틀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것을 표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협력해서 합의지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일 텐데, 이것을 자꾸 서로 배척만 하면 원하는 걸 아무것도 양쪽 다 못 얻게 되잖아요.”(풀뿌리활동).

다름을 포용할 모르는 메마른 가슴은 다양한 욕망을 가진 시민들을 끌어안기에는 너무 좁다. 자신만이 정답이라는 완벽주의, 지나친 도덕적 순결주의는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침이 된다. 공동체성의 힘은 집단지성에서 나온다.

④ 관계와 과정을 통해 다시 만들어 가는 공동체성

시민들의 연대를 끊임없이 와해시키고 고립시키는 통치전략이나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더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시민들이 공동체성을 가로막는 사회 장애물을 넘어서서 공동체성을 구현해갈 방법은 무엇인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는 당연히 있겠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사회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지점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느껴보는 선택의 지점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중략)...공동체 이론이 구체화되는 장이 필요합니다. 그 장은 다양한 활동 현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이 맞서서 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시스템과 내용들이 필요해요”(FG11).

“어떤 구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현되고 학습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뭐 하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FG13)

결국, 공동체성은 ‘관계’ 안에서 발현되고 학습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관계를 맺고 함께 실천할 때 시민임을 자각하게 된다. 공동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슈나 국가적 아젠더 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생활 속에서 시민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시민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한정된 인원들만이 참여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스웨덴 모델은 공교육과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이 생활 속에서 자기가 시민임을 자각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문제, 우리 문제를 결정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FGI3)

이렇게 본다면 시민성이란 시민과 시민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참여와 실천의 과정 속에서 학습하며, 나의 생활과 지역, 세계시민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공동체성을 깨우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강의실에 갇혀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⑤ 개인의 실천에 갖든 공동체성

공동체성의 가치는 우리 생활의 아주 작은 실천에서 도덕적, 사회적 시민성으로 드러난다. 가령 일회용품이라는 작은 단위의 사안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개인의 시민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실천의 동기는 가족, 학교, 직장, 마을 등 우리가 직접적으로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좀 더 큰 공동체의 일반적, 보편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민성의 핵심적인 부분은 공공성,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 속에서 실천적인 것으로는 공감과 배려와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쓰는 건 나에게서는 편리하지만 이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줄이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지와 인식이 없으면 편리한대로 플라스틱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시민성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개개인의 행동이죠.”(청소년)

“얼마 전 의료생활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돈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시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시민이 농약이 덜 검출된 약재를 써서 건강을 다 같이 챙기자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딱히 없는 시민을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보편적인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이라면 농약이 없는 약재를 먹을 수 있어야하고, 아프면 누구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성평등교육)

최근 한국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프로젝트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해결해가는 과정, 경험을 통해 공동체를 구현해 가자는 것이다.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시민의 영향력을 확장해 함께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갖든 ‘공동체성’이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형태가 변화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공동체성을 아예 상실한 것은 아니다. 공동체성은 인간의 본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 한 명의 역량 강화가 모여서 집단의 역량 강화가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영향력을 공동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마을공동체 활동이 개인을 넘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최소치의 모양을 함께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뭔가 함

을 낼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게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는 형식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결되어서 사회적 영향력, 그러니까 시민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봐요”(FG11)

공동체성은 더불어 살기 위한 가치이며 실천이다. 공동체성의 가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개인적 행위(인격적 주체성)로,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일원이 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실천 행위(사회적 주체성)로, 사회 불의의 해소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동(정치적 주체성)으로 나타난다.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시민성을 갖춘 시민에게 우리 사회의 모든 면면과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

3. 민주적 시민성의 실현을 위한 과제



1) 시민과 시민의 만남과 소통을 촉진하기

① 시민으로서 서로 마주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시민성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 간의 만남이 중요하다. 시민성이 오롯이 개인의 수련과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의 마주함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으로 관계 맺기와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이 서로 같이 뭔가를 해나갈 공동체를 키우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강의하러 갔던 전문가들이 다 빠져도, 주민들이 서로 가까워져야 해요. 서로를 알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걸 안 만들어주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마을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중략)...그런 null-curriculum(영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갈등조정)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소모임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소수가 좀 모여있으면 의사결정 하기도 쉽고 뭘 하나 해보더라도 조금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의사결정 하는데도 느리고, 물론 과급력은 있겠으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풀뿌리활동)

이러한 만남의 결과는 시민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의나 사업 등의 이벤트가 사라져도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기획자가 의도하지 못한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때 만남은 거대 주제와 많은 수를 의도하기보다 시민들의 생활 현장과 방식에 맞게 서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방인을 맞이하고 환대하기 위해 의도적인 만남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애국당 지지자들하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2달 동안 토론을 했대요. 사전 인터뷰에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빨이고 고집이 세고... 애국당은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2달을 준비해서 해보니 다른 건 있는데 얘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래저래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평가르기가 명확해서 선입견이 딱 차있고 대화하려 하지 않고 딱지 붙이기 바쁘고 그런 실험을 언론사에서 했다는 것을 보면서 신선했어요.”(청소년)

“이주민들이 동원되어 대상자로 가기보다는 좀 느리지만, 한국말도 서툴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는 접촉면을 자꾸 넓혀가고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다문화)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나 짧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들이 만나고 서로를 경험하는 장은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 교육, 마을축제,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시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기회를 늘여가고, 그곳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타인 소통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사회 대다수 수의 시민들이 타인과 의견을 나누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말로 천냥 빚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대화로 풀어가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점점들이 많거든요. 특히 학교폭력 문제는 대화로 풀면 50% 이상은 풀려요. 풀리는데 대화로 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화 할 줄 몰라요.”(인권)

“사회적 의제,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네 쓰레기장 같은 의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저는 발언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들을 모든 회의에 도입해야 합니다. 모임 속에서 몇 사람이 얘기해서 다들 사람들 의견과 비슷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합니다.”(정치교육).

따라서 시민들의 만남을 위해 마주할 기회를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만남과 대화는 개별적 과제가 아니라 만남이 대화의 장을 만들고, 대화가 만남을 풍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민으로서 일상 속 작은 경험과 실천

① 일상과 분리되지 않은 시민으로서의 경험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생활인이며, 시민의 삶도 생활과 공간을 분리되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생활에서 시민으로서 공공적 삶을 살 기회를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고, 또한 일상을 시민적 삶으로 해석하고 실천할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 시민적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될 때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작은 무엇이라도 해 볼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인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돼요. 기존의 평생교육이든 사회강좌를 보면 지식전달의 평생학습들이 많아요. 그밖에 여가활동, 노래교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상에서 시민성을 습득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이 없어요.”(청소년)

“저는 지역에서 할 때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교육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항상 실습 프로그램을 넣어요. 자원봉사자 교육을 했으면 자원봉사 한번 같이 저희 집수리 자원봉사에 같이 가시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학부모들 교육을 하고 나면 동네 아이들하고 만나서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한 번씩 실습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관심이 더 생기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학습을 좀 하고 학습한 덕분에 내 활동의 의미를 더 느끼거나 활동을 확장시키는 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이 학습을 부르고 학습이 다시 활동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풀뿌리활동)

학습은 시민성을 갖추는데 중요한 도구이지만, 시민성은 학습 특히 지식 전달의 방식으로 단숨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학습을 통한 시민의 의식 변화 요구가 빈번하다. 이러한 방식은 일상의 맥락에서 시민을 분리시켜 나의 생활이 아닌 이론이나 전문가의 답을 쫓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원래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개방성, 연결성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 의뢰할 때 무슨 의뢰를 많이 하나면, 이 사람들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지역사회를 좀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자기네 사업을 재검토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림자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살이나 시민활동이 아니라 마을사업을 하게 하고 시민사업을 하게 만드는 거죠.”(풀뿌리활동)

따라서 교육을 통해 시민을 교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하는 민감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시민교육은 정답을 정해놓고 맞추기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를 기반으로 시민 스스로 해결 방법을 알고 찾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목소리 내어 주도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경험도 누리게 될 수 있다.

② 시민 스스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스스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거처럼 전문가가 판단하고 결정하여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시민이 시민성을 경험하고 또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 넓은 참여와 조건 마련, 의제 선정, 의제 명료화, 해결방법 모색, 실천

이라는 일련의 과정 전반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 대한 인정과 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혁신, 주민참여 등의 정책과 사업이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위에서 언급한 단계 단계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기에 어떻게 이 과정이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해당사자에 의한 과제 정의, 과제와 관련한 이슈의 도출. 그것을 해결을 하려는 방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계몽적이잖아요.”(토론교육)

“유명한 카피라이터에게 맡겨서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전이나 공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포함돼있으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배려해야 합니다.”(다문화)

“장애인 활동을 보면서 당사자들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변화하는 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들도 투표권은 없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사자성이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과정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인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다문화)

“밖에 있는 청소년 기관 단체만이라도 ‘청소년이 주인이다.’라고 어른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정구조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 결정을 아이들이 함께 집행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청소년)

시민들 스스로의 실천 경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커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서 결정하고, 결정에 따른 책임을 이해함으로써 사회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과 역량을 다시 가능하고 다음의 과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시민 자신의 정체성, 주체성,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판적 사고 학습을 지원하는 민주시민교육

① 권리로써 민주시민교육, 의무로써 민주시민교육 실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은 민주시민교육 학습 경험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 원인은 입시 중심 학교교육, 취미·교양 위주의 성인교육 등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다. 시민들은 당연한 권리로써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구난방이에요. 학령에 맞게, 아이들로 말하면, 유치원이면 유치원에 맞게 해야 합니다. 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은 유치원에서 다하거든요. 그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것대로 잘만 지켜지면, 별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만큼 유치원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입시와 관련된 교육들이 들어가면서 부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1더하기 1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학교 현장이나 이런데서, 적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인권)

“너무 한쪽에만 몰려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생활 속 민주주의 동아리 아이들은 어찌됐든 자의반, 타의반 이긴 하지만 대부분 자의로 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권배심원 후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많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인권)

“제가 아들한테 ‘너 나중에 철학과 가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진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아이한테, 나중에 미아리에 철학관 차리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사들한테도 민주시민교육을 꼭 해야 합니다...”(인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어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국가가 50명이라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판을 깔아놓았으니 거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옵니까? 모으는 것도 힘들고 맨날 오는 사람만 옵니다. 나랏돈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모사업은 안하기로 했어요. 주민자치회하고 이제 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면 재생산이 되고, 위원들도 바뀌니까... 동네 사람들을 의식화하면 마을에서부터 민주화가 되어야지, 이게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바뀌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정치교육)

따라서 시민성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권리로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삶과 생활의 곳곳에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공간과 시간의 다양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민성을 학습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이자 시민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균열을 내어 비판적 사고⁸⁰⁾를 촉진하기

일상의 일들을 의심하고 균열을 내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시민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익숙한 삶을 다르게 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틈을 내게 되면 과제를 발견하게 되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성 안에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이 훨씬 더 견고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나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은 깰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지 않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아예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일상의 그런 것들에 균열을 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늘 살펴보고 늘 의심하고 늘 토론해야 되는데 안하니까...”(풀뿌리활동)

“나는 너무나 괜찮은 시대를 만나서 감사하게 살았지만 그게 감사한 게 전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눈을 뜨지 않았던 때, 그때는 감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차별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니 먼지와 같은 차별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내가 시작한 거예요.”(성평등교육)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의제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피부로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토론교육)

80)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지 않다. 델피 보고서(Delphi Report)는 비판적 사고를 “해석·분석·평가·추론을 산출하려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고,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증거·개념·방법론·기준·맥락의 측면들을 제대로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려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다”이라고 정의하였다(Facione, 1990). 이 보고서는 비판적 사고가 객관적 근거에 의한 판단의 과정이란 점을 드러냈고, 판단의 대상을 타인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이강범, 2008). 립만(Lipman, 2005: 93, 275)은 비판적 사고를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고로서 기준에 의존하고 자기 수정을 하고 맥락에 민감한 사고”라고 정의하면서, 비판적 사고가 객관적 기준에 의존하여 내리는 좋은 판단이고, 자기 반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사고의 맥락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Lipman, 2005: 272-288)고 했다.

정치교육은 이러한 과정을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일과 연결지어야 한다. 시민들이 비판적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이 문제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적 역량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

“쓰레기 문제든 환경 문제든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에서 이권사업이잖아요. 예산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는 게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 문제를, 봉투 하나 더 만들고 포장 더 하고 과대 포장해서 뺏기 위해서 500원이 1000원이 되고, 양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입니다.”(정치교육)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스스로 의심하는 일이며, 문제의 원인을 찾고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치교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독일의 경우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는 나치 시대 정치선전 도구로 왜곡됐던 시민교육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치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⁸¹⁾하고 있으나 한국사회에서는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에 대한 교육만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를 시민성에서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사악한 문제들(wicked-problem)⁸²⁾ 때문이다. 이전 민주주의 사회의 주요 과제가 제도적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비민주적 행위의 해결이었다면, 우리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문제는 가난, 실업, 재정위기, 환경, 미디어 문제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민주사회의 법체계나 기관 정치의 해법만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정당이나 정파에 따른 관계보다는 생활이나 직업 세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며, 개개인의 생활 욕구와 본능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⁸³⁾. 협상과 흥정, 가치의 경중에 따라 결정이 일어나기보다는 숙의를 거친 가능성의 여부가 선택의 이유가 된다⁸⁴⁾. 즉, 사회과학이나 정치적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삶의 맥락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능동적 참여가 훨씬 중요해졌다.

③ 어떻게 학습을 지원할 것인가

시민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과 시대에 맞는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는 반드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것은 아니지만 시민성 학습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해 캐서린 아이작(Katherine Isaac, 2005)은 시민들이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참여기법에 대해 알아야 하며 방법을 알지 못해 사적이고 개인적 안위에 매달려 있다고 말한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위한 혹

81) 전득주(2000)독일의 정치문화와 정치교육: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학회보, 5, 1-29.

82) Rittel, H., & Webber, M.(1973). Dilemmas in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4, 155-169.

83) 이다현(2018). 비판적 사고 촉진을 시민교육 실천 원리 탐색.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4) Mathews, D.(2009). Ships passing in the nigh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and engagement, 13(3). 5-17.

은 학습을 위한 방법이 변화해야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실행도구에 대한 연구단계로 가야 합니다. 지향점, 가치 이것은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도구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토론교육)

“지금도 비폭력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10, 15년도 더 된 비폭력 대화를 가지고 들어가고 어색하지 않아요. 단지 그건 있어요. 사례나, 교육도구는 바뀌어요. 그런데 요즘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료를 많이 쓰세요. 요즘의 아이들이 시청각이다 뭐다 이런데 예민하다 보니까 많이 쓰시는데, 또 한편으로 저는 애들이 너무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아날로그적인 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대화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거든요. 이 대화도 자꾸 디지털로 만지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되는 것에서는 각각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대에 맞게 교육도구나 교자재는 좀 바뀌되, 기본 베이스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사들도 너무 옛날 것을 자주 응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업데이트 시키야 합니다.”(인권)

4) 시민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행정 개선

① 접근과 참여의 기회 보장을 통한 세력화 지원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존재들을 위해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있어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이라면 누구나에게 참정권의 기회가 열려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특히 피선거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의제를 주장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열려있지만, 이용할 수 없거나 혹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먼저 보장해주는 것, 예를 들면 여성할당제처럼 그 자리에 좀 그런 소수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포용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다문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고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노력을 통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근본적이고 지속적 변화를 위해서는 권력을 가지고 제도와 정책을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력이 없었던 여성들이 권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저 나는 이렇게 살았잖아 하고 맙니다. 주변이 다 그래요. 이렇게 살았잖아, 어떻게 하라고... 권리가 없으면 그걸 가질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저 관행처럼,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성평등교육)

“시민들도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약간 동원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방식 말고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내고, 그게 힘이 모아져야 그런 요구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유지가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맨 날 가서 똑같은 이야기 하다가 왔어, 맨 날 거기까지만 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조차도 개인적 발언으로 머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죠.”(풀뿌리활동)

“저는 반드시 정치세력화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노동자의식은 사람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사

업장 단위에서의 경험을 의미해요.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업장 단위에서 단결하면서 집단적인 의식을 형성하고, 방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아무리 민주노총이 교육하고, 조직적이고 산별노조 형식으로 담고 뭐를 하더라도 안돼요. 정치세력화를 정당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중략)...정치라는 영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생활공간, 가정생활 등 모든 공간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구조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나부터 시작하고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노동)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반드시 정당정치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적인 문제, 시야를 거기까지 넓히고 추동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정당정치는 한 부분일 뿐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는 정치세력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세력화의 공과 실을 개인의 성과로 돌리고는 한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권력화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민(民)이 권력화 되는 것은 정당정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참여와 세력화는 무엇이 선행된다고 할 수 없는 순환적 관계의 것이다.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거꾸로 세력화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② 시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행정과 제도

2000년대 이후 주민자치회, 협치,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당사자로서 민의(民意)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등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행정중심의 혁신,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역량강화 중심으로 각각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20년의 역사를 통해서 협치에 대한 필요성, 예를 들면 그냥 당위적으로 주민들을 파트너로 여겨야 돼라고 생각했던 행정의 입장이나, 행정은 사실 적이 아니고 같이 해야 돼 라고 강사들은 머리로는 말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그런 게 흐름인 것 같고,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생존이나 공존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풀뿌리활동)

“행정적·제도적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활동하게 하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려면 짜여진 판에서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진 것 같지만 좀 더 촘촘하고 교묘하게 판을 짜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시민들이 그걸 다 인식하지 못하셔서 그렇지...”(풀뿌리활동)

“아직도 행정과 주민 사이에 갈등구조가 있어요. 이게 그나마 서로 대등한데는 그런데, 주민들,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오면 굽신굽신합니다. 사실은 우리와 대등한, 주민자치회는 자기 동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태도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풀뿌리활동)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지역적 대표성을 더 키우고 행정과 공고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운영방식에서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만들어진 사업에 주

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열린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주민들이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주민참여 사업과 아닌 사업의 경계가 나뉘지 않고 제도와 행정 전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또 행정의 인식 개선도 함께 갈 필요가 있다.

5) 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주체 발굴

① 주민 요구를 발굴하고 참여 연계하기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와 행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삶의 문제에 맞는 참여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직 행정 현장에서는 동원 방식의 주민참여가 많아 보여주기식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형태도 많아요. 최근에 풀뿌리 공론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주제에 꼭 와야 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인가, 논의를 잘했느냐, 논의된 내용들이 잘 숙의되고 숙성되고 정책에 반영이 됐느냐, 그런 걸 주민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해준 적이 있느냐? 회계연도든 이런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에 주민들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면 좀 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풀뿌리활동)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은 대상화된다. 여기에 문제제기 하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도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의 진정한 주체인가에 대한 고민없이 동원되고 반복된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들이 깊숙이 참여하게 어렵게 만들고 결국 사회의 문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더 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규명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문제라 생각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제와 사람을 동시에 발굴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많은 NGO, 시민사회단체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먼저 선정해놓고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원탁토론을 해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이슈에 맞는 분들을 초대해서 소규모로 가야 해요.”(토론교육)

“마을에 모여있는 구성원의 욕구에 맞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방식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민들도 계속 교육을 요구하거든요.”(갈등조정)

즉, 참여 이전에 주민의 요구에 대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실 현재 행정에서 진행되는 주민요구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1회성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구 사항’ 이상의 필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성 실현에 행정과 제도가 시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숙의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한테 계속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정정도 그걸 통해서 성장하거나 문제의식이 커진 주민들과는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나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지원체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풀뿌리 공론장을 하더라도 일정정도의 결과에 도달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지점들로 논의테이블을 바꿔야 되는데 맨날 그 테이블만 운영하는 거죠.”(풀뿌리활동)

뿐만 아니라 참여와 실천의 정도에 따라 다른 성장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에 따라 다음 과정과 실천 논의를 맞추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방식은 시민토론은 있지만, 숙의의 과정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기초 단계의 참여만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② 실천을 통한 경험과 실천의 사회적 의미 찾기

자원봉사는 시민이 도덕적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여러 방면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로 확장되지 못하고, 좋은 일 한다는 개인적 만족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시혜적 입장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한계이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 배움이 다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할 때도 그냥 활동만 해가지고는 안남더라고요. ‘해뜨는 집’과 같이 집수리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10년 내내 한 달에 한번씩 자기시간 투자해서 오시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얻은 보람이 뭐냐, 이 활동을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시느냐 그렇게 여쭙보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좋은 일도 좀 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많은 맥락이 있을 텐데, 자신의 활동이 가지고 있는 10년의 역사를 개인적 측면으로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풀뿌리활동)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포함한 시민적 참여의 의미에 대한 토론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교육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강사의 해석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열심히 실천하는 것을 넘어 실천에 대해 논의하는 것, 강의실에 갇혀 의미만 탐색하는 것이 아닌 실천과 연계하는 것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실천과 교육 모든 곳에서 시민으로서 나의 삶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해서 더 좋아진 것이 뭐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의미들을 함께 좀 더 전달하고 확인해줄 수 있을만한 교육적 요소가 들어간단든지, 그러면 내 활동이 개인적 보람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확인하면서 오실 텐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만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교육만하면 또 실천으로 잘 안 따라 가더라고요. 지역에서 교육쇼팽하시는 주민들이 되게 많아요.”(풀뿌리활동)

“사회적 문제, 지구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아는 데는 자원봉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이든 생각하고 말하거나 이해하게 할 기회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시민교육일 수도 있는데 그 권리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 삶으로 다가오려면 결국은 자기가 직접 겪어보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면하던지 자기가 어떻게든지 받을 걸치는 것이 필요해요.”(자원봉사)

“의식은 교육한다고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87년 6월항쟁의 경험을 몇 백번 내지 다양한 어떤 형태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느꼈던 내 삶을, 이렇게 살 동력으

로 만드는 걸 어떻게 교육으로 감당하겠어요. 저는 그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박수 한 번을 쳤든, 쇠파이프를 들었든 거기서 주인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교육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뒤집히는 경험을, 내 위치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온전히 그걸 중심으로 살아오고,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쉽지 않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노동)

여기서 풀뿌리활동이든, 자원봉사든, 노동이든 영역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을 발견하게 된다. 즉, 주체가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 맥락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변화하는 동력의 핵심이기도 하다.

“자원봉사센터들을 변화시키면 센터들은 자기 지역에서 시민들을 다르게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자원봉사의 범주와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고, 활동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자기 가치나 자기 역할을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 혹은 인센티브에 목매달지 않고, 그야말로 자원봉사가 주는 의미를 온전히 흡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네트워크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자원봉사)

즉, 현재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프로그램이 실천과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주민조직화와 자원봉사 연계 역시 프로그램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③ 내 삶과 생활을 점검하기

시민성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상화를 경계하는 한 편, 시민 스스로 자기 반성과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내 삶 역시 민주적이고 시민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현장 노동자의 고민을 들어보자.

“저도 여전히 구조를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나를 객관화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하지?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반성하게 됩니다. 노동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집안이나 동네 생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삶을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거든요.”(노동)

시민적 성찰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처방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점검과 학습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갈등조정원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역량을 줄 수도 있다.

“주민 현장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고, 사전에 들어가서 그런 걸 미리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안이 터졌을 때 상당한 예방효과도 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교육에서도 그런 교육이 없고, 또 공동주택은 많이 보급됐는데 같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자기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갈등조정)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나 시민성에 대해 논의 할 때, 좁게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에서 넓게는 사회와 정치적 맥락에서의 시민을 이야기 한다. 여기서 지적하는 내 삶의 맥락이란 개인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이유를 찾고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시민성 논의에서 좀처럼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6)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민성 실천

① 지역사회에 시민성의 토대 쌓기

풀뿌리운동이 활성화 된 이후, 시민운동의 상당 부분은 지역화 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화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성의 실천이 지역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지역이 바로 시민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지역이야말로 시민성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는 실천의 장이다. 둘째, 지원사업이 사라지더라도 시민적 실천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지역의 문화와 운동으로 남아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부터 변화의 토대가 쌓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사람들에게 일상적이어야 돼요. 저는 노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를 만나. 물론 요즘은 일터와 주거가 너무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노동)

“조금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돈과 제도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시 지자체 상황을 비춰보면 이렇게 풍족하게 일할 수 있는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그게 지금 당장은 좋은데, 더 지속되거나 하면,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는, 잘 안되지만 동력을 끄집어내서 그 안에서 그게 발현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들을 다 훼손하거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운동은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건데요. 몇몇 사람들이, 변방에서 시작해서, 몇몇 소수가 깨우치고, 그게 나중에 시대적인 타이밍과 맞아떨어져서, 제도도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티핑포인트가 되었을 때 작은 가치를 추구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해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충분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지지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갈등조정)

노동이 생존을 위한 가치를 생산하는 공간이라면 지역은 생활을 위한 가치를 생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공간과 지역사회는 경계를 넘나들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은 가치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의 역할이다. 단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지 않는 가치를 생산하는 곳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다.

② 시민의식의 변화로서 성과 평가하기

시민성은 이전의 일반적 성과 평가 척도인 시민참여 사업 참여자의 수가 많고 적음이라던지, 사업의 개수 얼마나 늘었는지를 가지고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 없다. 지역에서 시민성을 공고히 하

는 것은 계량화 되기 어렵다. 특히 현대사회의 경제과 일의 구조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기 어렵게 하고, 주민 삶의 장면도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간에 지역의 변화를 측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성 함양을 위한 노력의 성과는 주인 의식을 지원하고 그 결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개인에서 공동체(사회)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의 주민들은 너무 바쁩니다. 저녁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사회적, 구조적 현실까지 있고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전세로 사는 분들도 많고,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는, 운동으로 보면, 주민들을 임파워링(impowering)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갈등조정)

“커뮤니티나 마을활동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행정교육만 시켜요. 예를 들면 예산을 어떻게 써라, 서류는 어떻게 해라 이런 교육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구성원들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런 활동이 다른 커뮤니티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또는 그래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각자에게 해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연결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지원을 해요.”(풀뿌리활동)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절대 진리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경험일지라도 각 개인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의 평가는 시민 스스로 목표와 도달하는 방법, 결과의 공유 전반을 결정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일상의 시민성 자기진 단표

1. 시민성 자기 진단표의 의의

시민의식이나 사회적 태도 조사를 조사하기 위한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회 시민의 민주적 성숙도 등을 확인하기도 하고, 교육성과를 측정하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답변에 따라 시민성을 숫자로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모범적 형태로 가야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 부딪히는 시민성은 하나의 정답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각각 관점 또는 이념에 따라 각양각색의 해석이 내려질 수도 있다. 때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이중적 태도, 언행·지행의 불일치, 동요, 의심, 가치충돌, 모순, 갈등, 혼란, 관성, 해이, 비합리적 신념, 작은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시민성은 이러한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시민성 자기진단표는 그러한 길을 터줘야 한다. 즉, 자기 안에 쟁점과 문제의식을 갖고,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게 맞는 건가?’ ‘왜 그런가?’의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려 하는 것이 바로 ‘주입’이다. 한마디로 시민성 자기진단표는 자기 안의 기존질서에 균열을 일으켜야 한다. → [2. 시민성의 유형과 진단] 참고

그래서 본 연구는 가급적 정답을 시민들에게 맡기려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추상적 방식으로 시민성을 설명하거나 모범적 시민상을 설정하고 얼마나 적합한 시민인지 확인하는 방식을 벗어나고자 한다. 본 진단표는 서울 시민이 실제 생활 세계에서 경험할 법한 일들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기 답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찰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례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3. 시민성 자기진단표] 참고

따라서 이 연구의 시민성 진단표는 그 결과를 수로 계량화하는 방식을 지양하며, 개별 시민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혹은 행동했었던가)?”를 답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권장한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성의 영역을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별 하위 내용을 간단한 문답형으로 제시하되 하위 내용별 상황 질문을 제안하고 있다.

2. 시민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민주주의는 영원한 미완성이다. 마찬가지로 시민성에도 완성형이란 없다. 시민성은 시대적 과제, 그 사회의 문화, 욕망을 거름 삼아 끊임없이 성장, 발전한다. 그런가 하면 시민성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이데올로기에 붙잡혀 있거나, 작은 이익에 흔들리기도 한다. 오랜 관습에 젖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기 어려운 때도 많다.

하지만 흔들림은 다른 뜻을 지니기도 한다. 즉, 개인적으로는 내면에서 새로운 욕구가, 사회적으로

로는 낡은 질서와 규범을 바꾸자는 새로운 요구가 솟구치기도 한다. 시민성은 이처럼 진흙탕 속에서 핀 연꽃과 같다. 교과서적 시민성이 현실에서 맥을 못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들에게는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 필요하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관용도 필요하다. 그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찰, 상호견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지에 대한 솔직하고 겸허한 태도이다.

다음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연번	함정의 유형	내용
1	관점 고착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자신이 본 것을 진리라고 여긴다.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2	이중잣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이중잣대를 지니고 있다. 대의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개인적 사안에서는 다르게 판단한다.
3	이념·가치 충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데올로기, 정치적 신념, 도덕적 관점이 어떤 사건과 계기에 따라 위태로워지고 있다.
4	해이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다.
5	동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걱정된다.
6	언행·지행 불일치	말이 앞서가고 실천이 따라가지 못한다. 말의 크기만큼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해놓고 본다. 그러나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말이었다.
7	양비론의 함정	경중, 가치판단이 결여된 채 양쪽 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 같지만 몰타기다. 결국 양쪽 다 싫다고 외면하게 된다.
8	회피	문제를 객관화 하고 자신의 책임은 최소화 한다. 자신은 도덕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여긴다.
9	자기합리화	그들이 그랬으므로 나도 그랬다는 식으로 피해간다. 행동, 책임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밖에서 찾으려 한다.
10	공감능력 부족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11	현실순응	그건 이상이고 현실은 이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현실 탓을 한다. 비판적 사고가 결여돼있다.
12	아노미	규범이 흔들린다. 공존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 관점의 차이와 범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13	확증편향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 선입견, 편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14	보상심리	내가 좋은 일,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보상받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나 역시 하고 싶지

		않아 진다.
15	인지부조화	태도와 태도, 또는 태도와 행동이 서로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될 때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

이렇게 본다면 시민성은 규범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요 자기점검, 다짐이다. 시민성은 규범이 아니라 규범 흔들기다. 즉, 시민성은 낡은 질서를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다.

3. 시민성과 덕목

II장에서 시민성을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으로 나눈 바 있다. 3가지 시민성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도덕적 시민성

- ①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개별적 시민성
- ②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서 존경심 관용 정직 성실 자제력 근면 등과 같은 덕성과 자질을 가져야 함
- ③ 쓰레기 줍기, 재활용, 법 준수, 세금 납부 및 빚 갚기 등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급식소나 노인센터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장애시설을 방문하여 이타심을 발휘하는 등 작은 실천을 하는 것

2) 사회적 시민성

- ① 공공적 삶과 지역공동체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를 결속시키고 통합하며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시민성
- ② 시민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의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지위나 자격으로서의 시민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해 적극적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며, 상실된 공동체 갱생 프로젝트와 지역사회의 작은 결사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 ③ 가까운 이웃과 함께 작은 모임 또는 동아리를 만들어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는 관계성도 갖게 하는 것

3) 정치적 시민성

- 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 불의의 해소, 구조적 비판, 사회운동을 통한 체제의 변화 등을 시도하는 시민성
- ② 사람들이 왜 굶는지 등 복지 시스템을 탐구하고 사실·진실에 따라 빈곤 원인을 밝히며 캠페인을 벌이거나 대책을 강구함
- ③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의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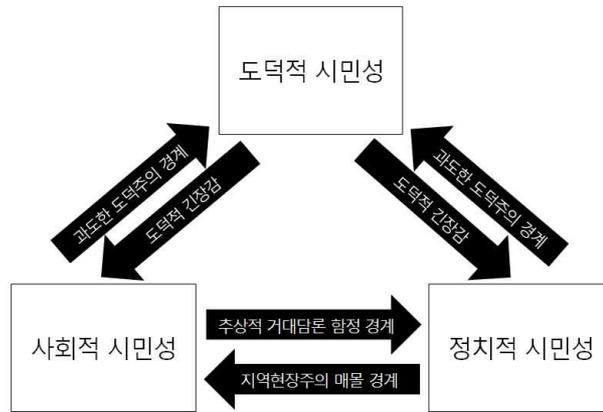
로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실천하는 것

3시민성은 이론적으로 구분되나 상호보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다. 가령, 도덕적 시민성이 받쳐주지 못하는 정치적 시민성은 뿌리 얽은 나무처럼 세파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 시민성이 결여된 도덕적 시민성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도덕적 시민성에서 사회적 시민성이나 정치적 시민성이 빠지면 개인적 에티켓이나 매너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 탈정치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3시민성은 서로 견제·긴장관계이기도 하다. 도덕적 시민성은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에게 도덕적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반대로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은 도덕적 시민성이 과도한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한다. 사회적 시민성은 정치적 시민성의 거대담론이 자칫 현실에서 유리되기 쉬운 추상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한다. 반대로 정치적 시민성은 사회적 시민성이 지나친 지역현장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한다.

이처럼 3시민성은 각각 고유의 색깔은 물론 개인마다 어떤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 편차를 드러낸다. 시민성을 하나의 규범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시민성이 상호보완·견제·긴장관계를 이룰수록 개인은 물론 사회도 건강해진다. 그래야 품격이 높아진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의 관계



그런데 시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덕목이다. III-2에서는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을 <경청, 타자에 대한 존중, 공동체성, 성찰, 비판적 사고, 참여/실천> 등 6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덕목이 현실에서 정확하게 구분되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섞이면서 새로운 덕목으로서 발현된다. 가령, 경청과 타자에 대한 존중, 참여/실천은 얼마든지 섞일 일 수 있다. 오히려 한 덕목이 고립된 영역으로 남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모든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덕목과 덕목은 섞이면서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이 6가지 덕목과 연결되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민성	덕목	의미와 내용
도덕적 시민성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나의 결점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충분히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준다. ●말의 내용은 물론 내면의 동기나 정서를 이해하려고 한다.
	타자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지위, 학적 배경, 외모, 고향, 성, 나이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갖지 않는다. ●작은 실수는 관용으로 대한다. ●상대방의 정체성, 장점, 의지, 취미,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최고라는 권위의식을 내려놓는다. ●나의 지적 권위보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겸손하되 과공(過恭)은 비례(非禮)임을 깨닫는다.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관계를 맺는다. ●사람을 소비대상이나 활용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인으로 대한다.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한다.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려, 사회적 신뢰 등 돈을 살 수 없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나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임을 안다. ●나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에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다. ●나는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본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나 냉정하게 경계한다. ●내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본다. ●나의 문제가 절실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비판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근거, 기준, 결정과정,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본다.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권위나 사회적 지위, 학력이 아니라 인격과 실력을 중심으로 대한다. ●내게 주어진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견지한다. ●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는 본질을 보려고 노력한다.
	참여/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식의 나열을 넘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기 위한 노력한다. ● 갈등이나 대립적 상황에 직면하면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리수거, 재활용, 녹색소비 등을 철저히 실천한다. ● 대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한다. ● 기부, 자원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사회의 규범, 도덕 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시민성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장에 참여한다) ● 회의에서 논의를 독점하는 것을 경계하고 우선 충분히 듣도록 한다. ● 어떤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생각해본다. ●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흐름, 생각, 아이디어, 주장,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타자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 강요하거나 주입하려 하지 않는다. ● 민주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의견은 소중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 ● 성별, 나이, 재산, 학력, 학벌, 인종, 기호, 역사... 등 여러 잣대 없이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려 노력한다. ● 동네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기준, 지식, 경험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조를 맞춰간다.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 호흡, 소통 하려고 노력한다. ● 나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이익이 상충될 때 조정역할을 한다. ● 가족관계, 친구관계, 고향에 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려고 노력한다. ● 공유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등의 공동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본다. ● 내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 ● 나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항상 고민한다. ● 이 사업이 공익성을 표방하면서도 사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 지나친 현장제일주의, 행동제일주의, 맹동주의를 경계한다. ● 어떤 사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나의 오만함이나 폭력성은 없었는지 돌아본다. ●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른 결론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과정을 생략

		<p>하진 않았는지 돌아본다.</p>
	비판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내·외부적 상황과 맥락을 통해 이해하고, 분석하고, 결정하고자 애쓴다. • 지방자치, 주민자치, 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사안의 배경, 원인, 근거, 문제점, 쟁점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판단한다. • 늘 그래왔던 관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을 던진다. •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 문명의 이기,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그것에 그들은 없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근거를 찾아본다. • 내가 부당한 압력이나 비리에 순응,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본다.
	참여/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의 변화가 나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주변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실행에 옮긴다. • 나의 돈, 감정, 건강, 재능, 지식, 열정, 시간, 욕망 등을 삶의 원리에 따라 배분한다. •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동네에서 학습동아리,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정치적 시민성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끝까지 듣고 판단한다. • 나의 정치적 입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다.
	타자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공동체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주권자임을 인식한다. •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람과 논쟁할 때 인신공격을 삼간다.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활동은 인간의 상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활동임을 이해한다. • 나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공존 공생의 파트너로서 인정한다. •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 지구적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논리나 행동을 진영논리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경계한다. • 자신과 반대되는 집단은 물론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나의 관점만이 옳다는 고집, 순혈주의를 경계한다. • 지나친 도덕적 열정이나 정파 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본다. • 토론할 때 내가 흑백논리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단언적이지 않나 자신을 돌아본다.
	비판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살고 있는 사회나 집단에 대해서 불편부당함은 없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진다. • 하나의 정보루트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크로스 체크하거나

		근거 자료를 찾아본다. ● 정치적 사안과 정책이 주창하는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탐구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상이한 관점과 의견을 환영한다. ● 어떤 사건이나 사회현상의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줄 안다
	참여/실천	●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다. ● 정치·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시민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긴다. ● 선거에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정당활동/정책토론/공청회 등에도 참여하여 나의 견해를 피력하고 설득되도록 노력한다. ● 정당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 촛불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며 참여한다. ●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결사체를 형성하여 정치력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실천적 공공영역을 행사할 수 있다.

4. 시민성 자기 진단표

시민성은 누군가 저기에 꽂아놓은 꺾대나 규범이 아니다. 시민들은 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목표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해야 한다. 시민성은 시민 개개인의 자기 성찰, 자극, 상호견제를 통해서 발전한다. 진단표는 시민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진단시약이다. 자기 진단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우선 3가지 시민성과 6가지 덕목을 충분히 숙지한다.
- 2) 진단표의 내용을 읽으면서 자신은 위의 15가지 함정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탐색한다. 자신이 가장 흔들리는 지점, 취약한 지점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 3) 그러나 함정의 유형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함정은 질책이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이 15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핵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에 있다. 성찰 그 자체가 힘이다.
- 4)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서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답은 자신에게 있다.
 - 예) 관점고착 : 자신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이중잣대 :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공감능력 부족 :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 겸손한 마음가짐 / 경청, 그리고 상대방의 눈과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
- 5) 이를 위해 끊임없는 질문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질문은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문이다.
- 6) 동아리, 워크숍 등에서 토론, 질문 주제로 활용한다.

아래 자기진단표는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영역	덕목	내용	함정의 유형
도덕적 시민성	성찰	한 배달청년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순경에게 걸렸다. 청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경찰은 결국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배달청년은 “국회의원들은 채용비리 등 크게 사고를 쳐도 잡아넣지 못하면서 왜 우리 같은 피라미들만 잡냐.”고 소리를 질러댔다.	
	경청	나는, 토의/토론하는 자리에서 논점을 명료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중간에 그의 말을 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잘 듣는 것도 아니다.	
	경청	나는 토의/토론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가 말한 그대로 말할 수 있다.	
	타자 존중 성찰	그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편이다. 그런데 직장에서 젊은 여직원들에게 자주 추근거린다. 상대방이 쏘아붙이면 능글거리는데 태도로 “왜 그래~, 딸 같아서 그래~”라고 얼버무린다.	
	성찰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다 와서 빨간 신호에 걸렸다. 차도 사람도 없지만,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옆에 앉은 아버지가 융통성이 없다고 핀잔주신다. 난 정말 융통성이 없는 걸까?	
	성찰	올해부터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 주거비 대출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 나는 만 35세다. 그리고 아직도 월세를 살고 있다. 억울하다.	
	타자 존중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를 보면 화가 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피곤하면 저기 앉아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타자 존중	카페트가 깔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과자부스러기를 흘렸다. 그러자 선생님이 주의를 주었다. 그 때 어떤 엄마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게 조금 풀어주면 안되겠느냐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자기 집에선 그럴 수 있지만 공유 공간에서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타자 존중	지하철 안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아기엄마가 무척 당황한 표정으로 아기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달래보았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아기엄마가 안쓰러웠지만 울음소리가 귀에 따가운 것도 사실이었다.	
타자 존중	운전중에 앞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었다. 급히 차를 세웠다. 깊은 숨을 몰아 쉰 뒤 쫓아가면서 크랙션을 눌렀다.		

		욕을 퍼부을까 말까...	
	성찰	패스트푸드 점 쓰레기통이 음식물,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어 있다. 분리수거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에 묻히기도 싫어서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털어 넣고 싶다.	
	타자 존중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혼한 가정/한 부모 가정의 자녀다. 아들의 여자 친구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은근 걱정이 된다.	
	타자존중	나는 주차할 때마다 나중에 주차하는 사람이 주차하기 편하도록 배려한다. 그런데 차 문을 열기 어렵게 주차한 사람에게 욕을 해서 싸운 적이 있다.	
	타자존중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직원에게 ‘아줌마...’라고 했더니 ‘저 비혼이에요...’라며 정색을 하는 것이었다. 내 댄에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그랬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다. 내가 잘못된 건가?	
	성찰	그녀는 아이를 4살 때부터 영어학원에 보냈다. 남들한테 뒤질 것 같아서 였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옆집 엄마 때문에 보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옆집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그녀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나도 옆집 엄마 때문에 보냈다.”	
	성찰 타자 존중	나는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마음을 다쳤는지 늘 살핀다.	
	타자 존중	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에는 반말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에는 존댓말을 한다.	
	성찰	나는 잘못된 나의 언행으로 실수를 했을 때, 즉각 과오를 인정한다.	
	타자 존중	나는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종종 호기심을 느낀다.	
	타자 존중	나는 다른 사람의 외모(옷, 머리스타일, 얼굴 등)에 대해 지적질을 하지 않는다	
	타자 존중	내가 아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밴드에 글을 올렸다. 아동 중 한 명이 급하게 수술을 하는데 *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그 혈액형이다. 그 사람들이 내 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헌혈차까지 가야 한다. 저녁 늦은 시간이다. 내 가족, 친인척도 아닌데 헌혈하러 가야하나?	
사회적 시민성	참여/실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지 1년이 됐다. 매월 회의에 참석하려니 어떤 때는 나의 의무도 아닌데 꼭 참석해야 하나 흔들리기도 한다.	

참여/실천	북유럽 국가처럼 복지가 잘 이루어져 노후에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생각하니 아깝기도 하다. 지금도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공동체성 비판적 사고	아파트 단지 옆 큰 공터를 교회가 매입했다고 한다. 교인인지라 왠지 반갑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반대 시위에 참여하자고 한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한 먼지와 소음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 싶지만 이웃에게 미움 받고 싶지 않다.	
성찰 비판적 사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지 5년이 됐다.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나의 정당한 노동의 댓가인데 어떻게 인정받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타자 존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신청했다. 그런데 돌보미 선생님이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한다. 경력도 풍부하고, 평가도 좋은 편이지만 왠지 싫다.	
참여/실천	후원금을 내는 단체에서 총회에 참석하라고 한다. 좋은 일에 보탬이 되고 싶은 건데, 굳이 왜 참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종사자들을 잘 알고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알아서 잘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성찰	‘한국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너무 싫다. 그런데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에서 작은 흠이 발견되었다. 교환·환불 기간이 지나서 바꿔줄 수 없다고 한다. 나도 소리를 한 번 질러볼까?	
성찰	‘아이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싶어 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을 하면, 수시 입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부하직원의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내일 말을 넣어볼까?’	
공동체성 성찰 참여/실천	나는 유니세프에 매월 후원금을 내고 있다. 회보를 받아보고 있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다. 그냥 내가 후원금을 내고 있다는 정도로 내가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동체성 성찰	나는 부동산 보유세 신설,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평등을 위한 방향으로 정부정책에 찬성한다. 그런데 막상 세금, 인상된 보험료가 날아올 생각을 하면 은근히 걱정된다.	
공동체성	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다. 그런데 막상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내 집값이 걱정 되었다.	
경청	나는 회의에서 의견을 잘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준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비효율적인 회의는 참지 못한	

		다. 그러다 보니 가급적 빨리 합의에 도달하려고 재촉하는 편이다.	
	공동체성 비판적 사고	나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따뜻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쟁에서 낙오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실천	나는 세월호 참사 초기에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했다. 아이들과 함께 분향소에도 가기도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멀어졌다. 이제는 그만 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성찰 비판적 사고	그는 해병대 출신이다. 해병대 군복을 즐겨 입는다. 해병대 동기들, 선후배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며 전우들 부탁을 곧잘 들어준다. 그는 의리를 중요시하고 동네일에도 열심히 참여한다. 자부심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 동기나 선후배들에게 부탁해서 해결하려 한다. 그는 그것을 즐기는 것 같다.	
	공동체성 성찰	우리 동네 골목 어귀에는 쓰레기가 자주 쌓인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주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았다. 어떤 한 사람이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계속 버리는 것 같았다.	
	공동체성 타자 존중	내가 사는 동네에 새터민이 이사를 왔다. 힘든 역경을 헤치고 남한으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가 세고 자기주장을 많이 할까봐 가까이 하기 꺼림칙하다.	
	공동체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기구/단체)에 관여해 회의에 참여하거나 후원금을 낸다.	
	타자 존중 성찰	그는 매사에 열심이다. 직장인이지만 지역사회의 각종 회의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다. 그런데 열정이 넘치다 보니 자주 논쟁을 일으킨다. 표현이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다. 자기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참여/실천	연말이 다가오자 정치인들이 불우이웃을 돕는다면서 기관을 방문하고 난리다. “저 위선자들... 또 쇼를 하고 있네”라고 욕하고 있는데 옆 자리 동료가 “대리님, 그럼 저랑 같이 복지원에 봉사 가실래요?”했다. 아... 괜히 입을 열었나?	
	타자 존중 공동체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그런데 말씨가 이북말이었다. 탈북민이었다. 나는 평소에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남북화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에게 탈북민 친구가 있다니 조금	

		꺼림칙했다. 아들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안될 것 같았다.	
	공동체 참여/실천	내가 살고 있는 이웃이나 내가 관여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주변사람들을 조직해 본 경험이 있다.	
	참여/실천 공동체	나는 직장, 동네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칙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 나선 경험이 있다	
	참여/실천 공동체	나는 놀이터의 놀이기구, 길가의 가로등, 경로당의 벽시계 등 동네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직접 나서서 고치거나 고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본 적이 있다.	
	타자 존중	나이, 종교, 성별이 다른 건 다 인정할 수 있다.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다른 사람은 수용이 잘 안 된다.	
	비판적 사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토의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은 후, 애초의 내 의견은 종종 바뀐다.	
	비판적 사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내가 전혀 보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종종 회열을 느낀다.	
정치적 시민성	성찰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갔지만 아이가 학원에 제대로 갔는지 걱정이 됐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단속을 좀 했다. 내 아이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비판적 사고	토론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제안과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불편해진다.	
	참여/실천	징검다리 연휴가 곧 다가온다. 친구들이 땡처리 항공으로 태국에 놀러 가자고 한다. 일정도 가격도 적당하고, 꼭 한 번 가고 싶었다. 그런데 사전 투표를 못했다. 연휴 사이에 총선 거일이 있는데... 눈 딱 감고 가야 하나?	
	비판적 사고 참여/실천	담합으로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직원에게 갑질하는 기업 불매 운동이 한 창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기업의 종사자이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참여/실천	학생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발 자유화나 #미투에 목소리를 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 정책가들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	
	비판적 사고 참여/실천	사람들이 카톡방에 올려준 동영상이나 뉴스 기사가 좀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가짜 뉴스 같은데, 사람들이랑 다투기 싫어 가만히 있어야겠다.	
	비판적 사고	어머니가 나에게 ‘모르는 게 약인데, 너는 왜 매번 뉴스를 보고 속상해하면서 힘들어하니?’라고 하신다. 정말 모르는 게 약인 것 같다. 하지만 모르면 안될 것 같기도 하다.	

참여/실천	이번에 노조를 만든다고 한다. 노조가 생겨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지부 문화부장을 맡으라고 제안이 왔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왠지 미안하다.	
비판적 사고	나는 정기 구독하는 신문이 있고, TV 뉴스도 챙겨서 보는 편이다. 그런데 제목만 본다. 피곤하기도 하고 굳이 내가 참견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자 존중	나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런 놈들은 싹 쓸어서...’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타자 존중	나는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한다. 또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관심도 많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놓고 내 뜻대로 안되면 자주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는 편이다.	
타자 존중	나는 비리, 환경, 양극화, 국제정세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원인과 대책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가르치려 든다. 그러다 보니 의견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다.	
성찰 비판적 사고	그 후보는 진정성은 있어 보이지만 왠지 정치적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나를 잘 살게 해줄 후보는 역시 이름 있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비판적 사고 참여/실천	나는 투표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투표할 때는 꼭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하곤 한다. 그렇지만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비판적 사고 참여/실천	아는 사람이 시의원에 출마하는데 자신의 소속 당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한다. 내가 선호하는 당이 아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참여/실천	TV를 보면 국회는 맨날 싸우기만 한다. 싸우는 게 싫어서 뉴스를 멀리 할 때가 많다. 그냥 나와 내 가족이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비판적 사고 성찰	그는 중소기업 대표이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정작 이익이 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말한다. 그는 이익이 나면 사유화, 손해가 나면 사회화라고 생각한다.	
비판적 사고 성찰	그는 과거 친일파였던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사람이건 돈을 많이 벌었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비판적 사고	그는 정치, 시사 얘기를 자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때가 많다. 그런데도 그는 신문이나 유튜브에서 봤다며 철석같이 믿는 것 같다. 숫자는 통계는 편집, 가공, 조작하기 쉬운데 그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비판적 사고	그는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는 평생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 친척이나 친구들한테도 잘한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그의 정치의식은 딱 중학교 1학년생 수준이다. 정치어법이 매우 단순하다. 그는 정치문맹에 가깝다.	
	비판적 사고	친구가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하자고 웹자보를 보내왔다. 그동안 뉴스와 신문을 보지 않고 살았기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가 없다. 참석하지 않으면 비민주적이라고 찍힐 것 같다. 어찌해야 하나..	
	참여/실천	선거일에 투표하는 일로만 나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살았다.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아는 친구가 시장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게 되었다. 내 이름을 넣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시장후보 웹자보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동안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비밀투표로만 했는데 웹자보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웬지 겁이 난다	
	참여/실천	지금 나라는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 뒤끓고 있다. 양편으로 나뉘어 매주 촛불집회가 열린다. 한참을 관망하다 나도 정치적 행동을 해야겠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직장에 근무하는 친구가 집단서명을 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면 내 이름 옆에 내가 소속된 직장 이름도 같이 나간다. 난 그러면 찍히는 거 아닐까? 난 정식 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인데..	
	타자 존중	나는 나와 정치적 성향이 매우 다른 사람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판적 사고 참여/실천	요즘 시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많이 한다. 내 주변에서도 특을 통해 청원에 서명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온다. 그 때마다 나는 청원에 응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청원 내용에 관한 여러 기사를 숙독 판단한 후 서명한다.	
	비판적 사고 참여/실천	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영역에서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30분 이상 말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그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 정치인들의 비리사건이 터지면 열을 올려 분노를 표현한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안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곤 한다.	
도덕적 시민정×	비판적 사고	그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다. 특히 '빨갱이...'타령이다. 그런데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나이답지 않게 부드럽고	

사회적 시민성 × 정치적 시민성의 만남과 충돌		<p>섬세하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절대로 반말하는 적이 없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할 때도 매우 점잖다. 그는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그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통합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p>	
	<p>공동체성 비판적 사고</p>	<p>구제역, ASF, 조류 독감 사태 때마다 생명을 생매장 하는 조치를 보며 구역질이 난다. 인간은 정말 잔인하다. 따지고 보면 원인은 대량사육과 지나친 육식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것 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농가가 문을 닫고 국민식량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p>	
	<p>공동체성 비판적 사고</p>	<p>왜 통일을 해야 하나? 통일이 평화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예전에는 한민족이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통일이 되어 맞이하게 될 경제 특수가 더 기대될 뿐 반드시 하나의 나라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p>	
	<p>타자 존중 성찰</p>	<p>그는 과거에 꽤 열렬한 운동권이었다. 지금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의식이 꽤 높다.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밝다. 그런데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권위적이다.</p>	
	<p>공동체성 성찰 타자 존중</p>	<p>자원봉사활동을 총 10,000시간 이상 하신 분이 있다. 상을 많이 받아서 구청 로비에 사진도 걸려있다. 상당히 헌신적이고 자부심도 강하다. 지역사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특별히 자랑하거나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 훈계를 하시려 한다.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고집을 놓지 않으시려 한다. 이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p>	
	<p>성찰</p>	<p>그는 동네일에 적극 나서는 편이다. 동네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다. 여유는 없지만 곧잘 베풀면서 산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강보(洑) 건설 공사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반대 시위를 했다. 나는 “왜 남의 동네 와서 그러느냐”고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p>	
	<p>타자 존중 성찰</p>	<p>시민사회 활동가로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많은 것이 변했다. 특히 조직의 사람도 활동가들도 많이 세대 교체되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오랜 운동 지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도통 요즘 젊은 활동가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의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지켜달라고 하며, 어쩔 수 없는 초과근무를 기피하고 당연스레 수당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닌데, 나는 웬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서운하기도 하다.</p>	
	<p>성찰 공동체성</p>	<p>나는 인권단체에서 일한다. 뭔가 사회에 공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어 들어왔다. 그런데 단체 대표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헌신성만 강조한다. 오래 된 활동가들도</p>	

		<p>마찬가지다. 특하면 옛날에 우린 어쩐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인권단체인데 인권이 없다. 요즘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겹다. 매일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p>	
	<p>타자 존중 공동체성</p>	<p>교통법규는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다. 약자 최우선 원칙에 해당한다. 나 역시 보행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가끔 운전을 할 때면 안하무인으로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가 바뀌든 말든 마이 웨이를 가는 사람들을 본다. 이럴 때도 보행자가 우선인가? 최소한의 예의와 규범도 지키지 않는 사람의 권리도 인정을 해야 하나?</p>	
	<p>공동체성 비판적 사고 성찰</p>	<p>권위주의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병폐이다. 나는 자유롭고 개방적 관계와 조직을 꿈꾼다. 하지만 막상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권위로 누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움직이고 동참하게 만들기 힘들다. 관리자 위치의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p>	
	<p>참여/실천 성찰</p>	<p>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일을 보았다. 워낙 관행적으로 내려온 일이지 아마 당사자들은 무감각할 거다. 나는 외부인이라 그게 잘 보인거다. 몇 명이 모인 곳에서는 열을 내며 그 일을 성토했고 다녔다. 그러나 신문 독자투고란에 글을 기고한다든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실천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p>	

V. 결론

1.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틈새 전략

교육의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는 사회적 재생산을 수행하는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그 재생산을 할 때 틈과 모순을 낳기도 하는 저항의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교육체제/학교체제의 재생산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순(contradictions)은 단순히 고충이나 문제점을 넘어 활동체계(주체, 매개, 대상, 공동체 등으로 이루어진) 내에 역사적으로 쌓인 ‘구조적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모순은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이런 모순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탈정치적으로 보이는 학교 혹은 교실이라는 공간은 외부 권력과 통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정치적 장이기도 하다. 교실이라는 장 안에서 거시적 구조가 작동하며, 외부 관계와 담론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균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교실은 상징적 통제가 관철되기도 하고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시-미시 구조의 연관은 교실을 교수활동 재맥락화 장의 일부로서 구조적이고 정치적으로 재조명하도록 한다. 교수-학습의 과정은 그 안에 권력과 통제의 규칙을 담보하면서 때로는 기존 지식과 규범 체제를 유지하고, 또 때로는 대안적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자는 모순을 인식해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주체들의 비판적 사고가 확장될 수 있다. 학교와 수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모순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그렇기에 모순과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모순은 변증법적 전개를 통해 학습자를 성장시키고, 활동체계를 변화시키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를 재생산하려는 제도의 규칙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물질적 이익의 메커니즘들 사이에는 모순, 한계, 틈이 발생되기 마련이다. 새로운 교육질서를 만들어 내는 틈새적 혁신(interstitial transformation)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사회적 힘을 강화시키는 대안적 제도를 창조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Wright, 2012). 교육체제 형성의 과정에서 기존 담론은 더 이상 원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틈새가 생길 수 있다. 학교는 국가에 의해 정당성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위기의 시기가 감지될 때 이용되면서 학교는 지배적 교육의 재상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학교는 제도의 틀 내에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민주의식과 시민성을 배우고 함양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교육 이론의 핵심 과업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루지 않고서는 민주적인 체제를 발전시킬 수 없고,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민주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육 개념을 정연하게 하는 것이다(Carr & Hartnett, 1996: 189). 그리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이 없거나 민주적 체제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동시에 교육체제/거버넌스를 수립하지 않으면 사회의 민주적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민주적 시민성을 재구성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주적 시민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민주적 주체성을 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Biesta, 2014: 9). 민주적 주체성은 인격적 주체

성과 사회적 주체성, 그리고 정치적 주체성의 융합이다(Biesta, 2006: 127-135). 민주적 주체성(democratic subjectivity)을 지닌 민주적 시민(democratic citizen)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민주적 주체성은 민주적 인간에 대한 개체적/인격적 개념(칸트, 피아제, 콜버그 등),⁸⁵⁾ 사회적/공동체적 개념(마가렛 미드, 존 듀이),⁸⁶⁾ 정치적/폴리스적 개념(한나 아렌트)⁸⁷⁾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다(Biesta, 2006: 121, 127-135). 민주적 주체성은 민주적 정치의 행위자로서 민주적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고, 이 선택할 줄 아는 역량을 가진 민주적 실천 행위자(agency)⁸⁸⁾의 출현을 요구한다(Biesta, 2011).

주체는 일종의 자동인형 같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타자, 즉 자기 바깥의 물질적·상징적 존재 조건에 의해 자율적인 존재로서 생산 또는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주체가 자율적 존재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체 생산의 조건과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것, 따라서 주체의 자율성의 조건으로서 타율성을 설명하는 것이 철학적 과제이다(진태원, 2019: 65). 현대 정치의 대표적인 모델로 간주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상적 정치체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지배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주체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아이들이 민주적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속성이 융합된 주체성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주체화를 위한 학습’(learning for subjectification)을 필요로 한다.⁸⁹⁾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성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민성을 ‘배우는’ 것으로의 이동을 강조한

85)민주적 교육에 대한 ‘개체적(individualistic)’ 개념은 합리주의와 개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타인의 지도가 아닌 스스로 이성을 통한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주체성을 제창한다. 타인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를 소중하게 여기는 합리적 주체/자율적 주체를 강조한다. 합리적 자율성을 바탕을 둔 자유주의자들의 주체성 이해가 민주적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들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니체, 프로이트, 그리고 푸코는 주체성의 원천이 주체 자신의 합리적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통제를 넘어서는 권력과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 철학이 욕망 관리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은 민주적인 심장을 갖게 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자기를 제한하는 힘을 키우는 민주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자유만을 중시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제한’(self-restraint)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86)듀이의 주체성 개념은 칸트의 개념을 벗어나 있다. 듀이는 사고와 성찰의 습관을 포함한 사회적 매개체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을 축적된 유기체이며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사회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입문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 있다. 의사소통은 형성되고 변형되고 혁신되면서 재구성되는 실천적 과정이다.

87)아렌트의 정치적 주체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폴리스(polis)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와 같지 않는 타인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상황, 즉 다양성과 차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Biesta, 2006: 135). 공동체는 공동의 정체성을 통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 다원성과 다름으로 존재하는 세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Biesta, 2006: 10-11). 다원성은 서로 다른 개인들을 필요로 한다.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조건으로 한다. 다원성은 모든 정치적 사람의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가능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조건이다. 공동체는 세계에 대한 관점들의 다양성 속에서만 실존한다. 인간이 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작에 반응하는 타인을 필요로 한다. 아렌트의 정치적 주체성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 상호작용의 속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Biesta, 2006: 134).

88)‘agency’는 행동하고 변화를 가져오며—우리가 그의 성취를 외부적 기준에서도 평가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행위자’이다. 아마티아 센은 공동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시장에 참여하는 것부터 정치나 다른 영역에서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의 참여자로서 개인 행위주체의 역할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 ‘agency’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대리하는 사람인 ‘agent’와는 다르다.

다(Biesta, 2011: 15-16). 민주적 실천을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위치에 개인을 투입하는 기존 질서에 적응시키는 사회화(socialization) 차원의 학습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존 질서를 허무는 주체화(subjectification) 차원의 학습을 염두에 두면서 중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Biesta, 2014: 10). 시민의 주체화를 위한 특별한 사회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장은주, 2017: 99).⁹⁰⁾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교육의 학습화’(learnification of education)을 지향하며, 이것은 평생학습으로의 이동을 말해준다(Biesta, 2013). ‘교육의 학습화’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정이고 활동이며, 내용과 방향과 관련하여 텅 비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성 학습(civic learning)은 민주적 정치에서 계속되는 실험의 내재적 차원으로 틀을 잡는다. 시민성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 미래의 시민을 위한 교육이라면, 매일 이루어지는 ‘시민적 학습’은 현재 실재하는 시민의 학습으로 볼 수 있다. 시민적 학습은 교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느 때나 어느 곳이든 계속적으로 시민적 학습은 일어난다. 태어나서 시작하여 학습자생활, 지역사회의 삶, 그리고 일생에 걸쳐 이루어진 평생학습 활동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 그 자체가 시민성을 위한 학교이다. 시민적 학습은 사람들을 길들이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적 주체가 될 수 있는 학습으로 나아간다. 시민적 학습은 기존사회의 순응을 요구하는 사회화/동일시의 차원의 일이 아니다. 시민적 학습은 좋은 행동의 규범, 가치 그리고 기준을 주입함으로써 좋은 시민이 되게 하는 기존 질서의 재생산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시민적 학습은 과거의 재생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시민적 학습은 사람들을 길들이는/순치 교육이 아니라, 민주적 주체가 될 수 있는 학습이다.

물론 주체화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율의 실천은 타율의 습관화를 통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적 시민성 학습의 행위자 중심 접근은 정치적 참여와 집단적 행위를 통해 계발된 정치적 행위로 이해되는 주체성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시민성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시하고 ‘미래의 시민’이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대우하는 민주적 시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민적 학습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의 민주적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주요 목표로 한다. 시민적 학습은 학습자들이 자원으로 교육제도 바깥의 삶에서 겪는 정치적 경험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McCowan & Unterhalter, 2013: 144). 이 말은 곧 민주주의의 실천과 시민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적 학습’은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웃과 그것의 경계/울타리 사이의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고 또한 그것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다(Visscher, 2014: 85). 시민적 학습과 관련하여 이웃의 교육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장은주(2017)는 정치교육⁹¹⁾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인 민주시민으로서의 판단능력+행동

89) 자기 제한 또는 자기 통제(self-control)/절제(temperance)/克己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이다. 자기 제한은 학습되고 내면화되어야 하는 성향으로, 고통스럽게 체득되는 자질이다. 어린 시기에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익혀야 민주시민으로 길러질 수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배우고 어떤 저항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욕망을 공동체적 욕망으로 전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 중심 교육’ ‘학생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세계 이해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90)셴델은 민주적 자치에 필요한 시민들의 인격적 성질, 곧 시민적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노력을 ‘형성적 기획’이라고 하였다(Sandel, 2012).

91)독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한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1952년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을 개원하면서 정착되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글로벌·다문화 사회, 여성정치참여,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흐름, 정보사회, 극우주의, 정치적 무관심 또는 정치혐오 현상 등과 같은 사회변화와 관련지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능력+방법론적 활용능력을 강조한다.⁹²⁾ 이것들은 따로따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 지어 이해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능력들은 시민들이 공중으로서 사회적 행위의 결과가 지닌 공공적 의미를 인식하고, 그 결과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을 토론, 설득, 논쟁 등과 같은 수단들을 통해 제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해준다. 홍윤기는 헌법적, 정치적 주권자로서 권한 강화(empowerment),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인정, 인권, 평화, 좋은 삶의 가치를 중시한다. 조상식은 국가 충성심, 모범적 행동, 사회적 비판/재건/실천을 강조한다. 이병준은 민주시민의 핵심적 역량의 단계로서 1단계는 자율적 행동, 타인과의 상호작용, 도구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역량’, 2단계는 시민사회, 권리, 책임, 신뢰, 평등, 존중을 중시하는 ‘시민성 역량’, 그리고 3단계는 다양성, 참여의식, 세계시민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역량’을 강조한다. 교육부는 2018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로 정의한다. 인천교육청은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태도를 배우고 참여하며 실천하게 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교육부의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원규(2019)는 시민적 가치로서 존중(→주권자), 자율(→동료), 그리고 연대(→동반자)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학생이 주권자⁹³⁾임을 자각하게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민주적 시민성의 구성요소로서 도덕성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함양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생활하며, 사회의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학습을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학습자들이 어떤 유형의 시민권/시민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혁신적이고 사려 깊은 시민들이 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을 통해 비민주적인 의식과 태도, 행위 그리고 관행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 가르쳐야 하며, 민주주의의 ‘무엇을’ 내용으로 삼으며, ‘어떻게’ 가르칠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이들의 시민성은 어디에서 길러지는가? 아이들의 시민성은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싹틀 것이다. 학생들이 학창 시절 민주주의 경험을 하지 못할 때 성인이 되어서도 민주적 삶을 실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른의 ‘민주시민적 결손’을 초래할 것이다. 미성숙한 학생이 순식간에 곧바로 성숙한 시민이 될 수는 없다. 민주 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실천, 때에 따라 고통스러운 싸움을 통해 만들어진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와 교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로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92)오랫동안 ‘정치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로서 첫째, ‘민주시민으로서의 판단능력’은 ‘공공의 사건, 문제, 논쟁 등을 사실과 가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성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공적 사건이 개인의 삶과 사회나 세계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나 의미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둘째,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능력’은 ‘자신의 견해, 확신, 관심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적절하게 내세울 수 있고, 합의과정을 이끌어내며 타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정립하고 관철시키며 정치적 차이와 대결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셋째, ‘민주시민으로서의 방법론적 활용능력’은 경제적·법적·사회적 문제와 같은 시사적인 정치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전문적인 주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룰 줄 알며, 자신만의 정치심화 학습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민주적-정치적 과정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할 줄 아는 능력이다(장은주, 2017: 143-146).

93)공동체가 주권자가 되는 자치적 질서, 즉 참여적 정체를 창출하는데 몰두했던 공화주의는 자유와 참여 간에 근본적 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있다. 지역사회 자체가 시민성을 위한 학교이다.

민주적 학교체제/제도가 마련되는 한계 속에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민주적 실천을 이끌어가는 민주적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민주적 역량을 가진 민주적 주체는 인격적 주체, 사회적 주체, 정치적 주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민주적 주체 형성 형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주적 주체 형성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려면 시민문화를 굳건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타락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제도의 탄생도 가능하다. 민주사회를 튼튼하게 하려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제도적 형태를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주의는 사회와 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학교의 민주적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학교시민의 시민성/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민주적 시민성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시민성, 참여하는 시민성, 정의를 지향하는 시민성 또는 도덕적 시민성, 사회적 시민성, 정치적 시민성을 구성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성을 길러내는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이하 ‘민주시민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교육체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민주적 시민성의 구성요소는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지평

민주적 시민성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본 연구는 도덕적 시민성(도덕모델), 사회적 시민성(사회모델), 정치적 시민성(정치모델)의 집합으로 보았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시민성(모델)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⁹⁴⁾ 통합적 관점에서 3가지의 시민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다음과 같이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의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을 교육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teaching democracy)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으로’(learning democracy)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Biesta, 2011: 15-16). 더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사회화를 넘어 주체화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시민, 즉 민주주의자에 의해 길러진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특징은 사람들을 민주적 관계의 망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참여하게 하는 ‘민주적 교육’(democratic education)⁹⁵⁾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삶의 양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제도의 형태를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공동생활의 형식이며,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Dewey, 1915).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습관, 선택, 신념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집단적 지성이 발휘되는

94)우리사회는 지금 도덕적 시민성과 정치적 시민성의 심각한 균열과 불일치로 인하여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정치의식은 높은데도 그것을 타파하려는 개인의 도덕적 노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95)듀이는 ‘민주적 교육(democratic education)’은 민주주의를 더불어 사는 삶의 양식으로 이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면대면 관계를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행위와 협동적 활동의 관점에서 공론장의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의사소통과 함께 민주적 생활에 필요한 가치에 대한 불가피한 갈등을 탐색하도록 한다.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중용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특징은 공격성과 혐오 등의 마음을 제어하면서 민주적 마음(절제, 극기, 자기 제한 등)의 태도를 체화시키는 ‘마음교육’의 성격도 지녀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은 다름/차이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타인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개인주의와 시장의 대안적 개념으로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관계의 공동체, 장소의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기억의 공동체, 실천의 공동체, 성찰적 공동체, 발달적 공동체, 대화적 공동체, 돌봄 공동체, 책임지는 공동체 등 다양한 중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민주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의 강조는 비합리적이고 억압적 경향도 보이고, 때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체교육은 절제된/순화된 애국심 함양을 요구한다. 공동체 속에서 모든 구성원은 홀로주체성이 아닌 공동체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서로주체성’을 지녀야 한다(김상봉, 2014).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대체로 정치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자유와 평등의 균형 등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좁은 의미에서 청소년과 성인이 사회·정치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정치적 사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이 각 개인들에게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이해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당, 국회, 선거 제도 등과 같은 정치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서 탐구하도록 한다. 정치교육은 좁은 의미의 정치 제도와 과정에 대한 교육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각 개인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키우는 민주주의 교육으로 이해된다(홍은영, 2019: 134-주 3). 정치교육의 과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민주적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정치적 협력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특징은 ‘정치교육’⁹⁶⁾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일 국가에 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민국가 내부의 ‘시민’ 테두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평화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구공동체의 협력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글로벌 공동체의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글로벌한 생활세계에서 필수불가결한 교육으로서 시민성의 개념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특징은 ‘세계시

96)정치교육은 정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정보와 지식 전달에서 이미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the political)에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전유 과정, 다시 말해 정치교육이 사회정치적 이슈에 스스로 대응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홍은영, 2019: 135-136-주 7). 그 이유는 정치와 주체의 밀접한 관계를 유리한 채 정치교육은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주의적 이해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사와 관계하고 공동의 사안에 대한 논의를 뜻한다. 정치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공동의 삶을 형성하고 무엇이 공익인가에 관해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정치교육은 상반되는 입장과 견해가 드러나고 사회변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정치 체제와 국가에서 완결된 것으로 파악하기보다,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상황 속에서 힘의 불균형, 즉 권력의 측면을 항상 고려하고 그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열린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교육'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그리고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국가에 있어서의 중요한 상징을 소개하지만, 학생들이 인간의 가치,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도와준다. 문화적 집단정체성은 다문화 민주사회에서 중요하다. 혁신적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은 학생들이 성찰적, 문화적, 국가적, 지역적 및 세계적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지역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은 '다문화교육'이나 '상호문화교육'의 특성과 동시에 정치경제적 시민권 등을 중심에 두는 '인권교육'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2.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제언

1) 민주시민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사회적 위상에 대한 공론화

한국의 GDP는 세계 11위이다. 한국은 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는 이른바 30-50클럽의 일원이다. 한국의 여권과위는 독일과 나란히 세계 2위이다. 그만큼 한국의 국력과 외교력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극우정치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나마 민주주의가 앞서가는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그런데 한국의 성평등지수, 언론에 대한 신뢰지수, 사회적 신뢰지수는 바닥수준이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허약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국가·사회적 위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제는 GDP로 국가의 위상을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은 민주주의로 행복하고 민주주의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속속들이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자원을 얼마나 배분하고 있는지, 아직도 목표를 쫓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또한 속성상 어느 시기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본성상 다양한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는 항상 미완성이기 마련이다. 그러한 미완성을 단칼에 해결해줄 수 있는 솔루션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솔루션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가 미완성이라 해서 회의,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한다.

2)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정책만의 일이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정책만의 일이 아니고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른들의 성인교육/평생학습이 이어질 때 민주시민교육은 단절되지 않는다.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민주시민교육이 떠안을 수는 없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은 그러한 자원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연동하여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천은 학교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민주주의 원리이어야 한다. 교육내용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학교문화가 민주적이지 않다면, 민주시민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 운영 및 문화가 민주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 안에서만 머물러 학교 밖으로 확산되지 않거나 또한 학교 밖의 교육적 요구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학교교육은 바다가 없는 고립된 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민주주의화는 교육제도만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 건강과 교통정책, 고용과 노동시장, 소득지원과 복지 혜택 등은 어린이와 젊은이의 일상적 삶 및 그들의 삶의 기회 모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교육의 민주주의화는 학교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다.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더 넓은 문화적 자원은 양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양교육과 직업기술교육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교사의 초기교육 및 계속교육은 어린이청소년들의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학교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는 적절한 직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인력 배치,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 변화를 일으키는 고된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와 자원 등 물질적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등 국가 전체의 복지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3) 인간다움과 시민다움이 조화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을 통한,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인간다움과 시민다움의 아름다운 공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적 성숙’을 위한 인성교육과 ‘정치적 성숙’을 위한 시민교육이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발달단계상으로는 인간성(humanity)과 인격성(character)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시민성(citizenship/civility)과 정치성(politics)의 집을 쌓아올려야 한다.⁹⁷⁾ 따라서 인간으로서 정중한 예의와 시민으로서 정치적 예의가 분리되지 않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이 분리되면 온전한 전인교육은 어렵게 된다. 전인교육은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체적 인격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의 기초를 이루는 일차적 토대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도덕적 시민성으로서 인간다움(humanity, humanness)과 정치적 시민성으로서 시민다움(civility, civicness)을 공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필요가 있다. 인간적 성숙과 정치적 성숙의 융합을 피하려면 인문학(문학, 사학, 철학 등)과 사회과학(정치학, 사회학 등)의 통섭을 필요로 한다. 인문학에 토대를 둔 ‘도덕과’와 사회과학에 토대를 둔 ‘사회과’의 통섭이 요구된다.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현실을 척결하려면 학교현장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인간성의 꽃은 피어나지 못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싹조차 자라지 않을 것이다. 민주적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민주

97)인격성은 완전히 사람들의 내면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과 사상의 자유만으로 국한되어 적극적으로 바깥의 사회와 정치에 관여하고 이를 형성하여 변혁하는 행위의 자율로까지 충분히 구체적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 있다. 바깥의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되었든 내면의 자율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 그리고 내면적으로 자율적인 주제로까지 인간을 형성하면 교육의 사명은 완수된다고 하는 ‘도야’ 사상의 발달은 극단적으로 ‘내면으로의 도치’를 정당화하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슈프랑거는 세계의 과제를 외면하는 깊은 내면성은 사회적·정치적 힘이 없는 가능성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김병옥, 1986: 213-214). 인격성과 사회성 그리고 정치성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주의자가 많아야 민주주의 나무는 잘 자란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토양에서 민주적으로 자라야 민주주의 정원은 잘 가꾸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주의는 선거할 때 대표자를 뽑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에릭 리우와 닉 하나우어가 ‘민주주의의 정원’에서 강조하듯 훌륭한 정원은 나쁜 것을 솎아내고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 행동하는 대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민주주의 정원이 되려면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을 겸비하는 공동체의 정원을 나날이 가꾸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전인교육은 청소년의 전인격적 발달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것은 개인적 인격 형성과 사회적 시민성을 동시에 고양하는 일이다. 개인적 차원은 인격 형성의 영역이고, 사회적 차원은 시민성을 형성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한 인간성의 형성을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차츰 성장해가면서 국가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의 형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루소가 강조하듯 먼저 각 개인은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시민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개별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두 교육 간의 경계는 약화시키는 대신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계 지대(borderlands) 혹은 중첩 지대(overlapping areas)를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정창우, 2019). 이러한 중첩 지대에서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적 인성의 함양을 역동적으로/승법적으로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을 필요로 한다. 보수적 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도덕적 책임과 진보적 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문해력을 공존시키는 것은 ‘시민적 인성교육’ 또는 ‘인성적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성교육이 보수의 전유물일 수 없고, 민주시민교육이 진보의 전유물일 수 없다. 우리는 사람도 되어야 하고, 시민도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어른부터, 교육자 자신부터 먼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 어른들이 새로운 사람 및 시민으로 재탄생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전인적/온전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사람은 되었지만 시민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민은 되었지만 사람이 되어있지 않다면 온전한 사람도, 온전한 시민도 아니다. 이제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자 ‘시민’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한다. 우리가 민주적 주체로 성장하려면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성숙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나라가 탄생할 수 있다.

4)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념을 회복해야 한다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념을 회복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기본법⁹⁸⁾의 교육이념에 따라 민주시민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 이념이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한다고 하였지만, 이 이념의 추상성, 포괄성, 모호성, 신화성 등으로 인해 갈등과 대립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무이념·무사상이라는 빈자리를 모든 논쟁을 화합하고자 하는 화쟁(和諍)⁹⁹⁾ 사상이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갈등과 대립

98)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시발점이 된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화쟁 사상으로 보완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원효의 화쟁 사상은 부질없는 논쟁과 다툼을 화해·회통하는 데 있다. 화쟁의 교육이념은 화쟁하는 인간, 화쟁하는 사회, 화쟁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화쟁인은 스스로 화쟁할 수 있는 사람, 화쟁을 통해 다툼과 대립을 해결해나가는 홍익사회다. 화쟁의 교육이념은 다툼을 화해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생각은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화해시킨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마그데부르크 선언’처럼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5)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에게로 돌려주자

시민성은 정치, 청소년, 자원봉사, 평화, 환경, 문화, 풀뿌리, 노동, 여성, 인권, 다문화, 미디어 등 광범위한 영역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민주주의 원리이다. 그러한 다양한 영역과 현장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 내용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문턱을 낮춰주어야 한다. 시민성교육은 시민들이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산자가 될 때 더욱 확산되고 깊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인은 활동가도, 강사도 아니고 시민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 손 안에 있을 때 확장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주의화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중적 민주화가 구현되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현실 및 현실의 민주정부 상태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는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에 의한 통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체제에 속한 시민들에게 비민주적 체제가 허용하지 않고 또 할 수 없는 일정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가능한 어떤 대안적 체제보다도 그 시민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보장해주어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기본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민주적 정부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결정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민주적 정부만이 도덕적 책임감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민주적 정부만이 다른 어떤 가능한 대안보다 인간의 발달을 보다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정치적 평등을 도모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 정부를 지닌 국가들은 비민주적 정부를 지닌 국가들보다 더 번영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 제도는 변화의 프로그램을 통해 절박한 실제적 이슈에 대해 숙의·토론·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체제에서보다 더 잘 제공될 수 있다. 식민화되지 않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으로서 생활세계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구현될 때 민주 시민은 탄생할 수 있다.

6) 제도의 개혁과 함께 민주적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개혁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든 그것이 살아남는데 근간이 되는 시민적 예의로서 ‘마음의 습관’을 내면화해야 한다.

99)和諍은 다툼(諍)을 화합(和)하게 하는 불교사상이다. 화쟁의 교육은 여러 이설을 배우고, 그것을 긍정하고 부정하며, 전개하고 통합하며, 폭넓게 배우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화쟁의 논리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진리의 세계, 우주와 사물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마음의 습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데 결정적 구성요소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마음의 습관을 시민들이 세대를 넘어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민주적 마음의 습관은 시민적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민적 예의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풀고, 정당하고 정통성 있는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며, 법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 토론, 숙의, 타협, 상호 존중, 그리고 권한 공유 등으로 나타난다. 마음의 습관이란 경험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유형으로서 사람들 안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나 수업하는 교사들 모두 민주적 마음을 내면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길들여진 과시즘 문화나 상처받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창출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마음의 습관을 시민들이 세대를 넘어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7) 어른의 민주적 시민성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보다 먼저 어른의 민주적 시민성 형성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민주적 시민성은 어른들(부모, 교사)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 형성에 어른들의 민주적 시민성 형성도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사회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어른들의 주인의식, 곧 주권의식 속에서 형성될 것이다. 지역사회 조직화가 완전히 실현되면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민적 역량을 북돋는 것이기에 도시 전체의 권력 역학이 바뀔 수 있다. 사회 자체가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교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주권의식이 바탕에 형성되어야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얻는다. 학교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회의 태동을 예고하는 지역공동체교육/마을교육공동체의 발흥에 조응하려면 민주적 시민이 탄생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대중을 민주적 주체로 변화시키는 민주시민교육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나 평생학습운동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학교의 민주적 주체 형성 형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주적 주체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시민적 주체 역량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수요소이다.

8)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먼저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구성원인 교직원-학생-학부모에게 권한을 분산시키는 수평적/분산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민주적 학교체제는 과거와는 달리 교육과정 안에서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주입식 교수법이 아니라, 참여와 토론, 활동 등 다양한 쌍방향 교수법과 함께 교육을 받고난 이후 배운 것을 실천하는 참여의 과정, 함께 나누는 봉사의 과정, 자신의 판단을 이행시키는 문화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학교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삶을 위한 각

성과 함께 민주적 시민의식의 함양을 중시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학생은 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문서상으로 머물지 않고 실천을 필요로 한다.

9)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영역으로는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정의교육,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이 커다란 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인 내용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르칠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인식이나 시각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자기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수업은 협력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평가는 서열화 중심의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다. 경쟁과 서열화로 대표되는 결과중심의 평가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예비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지원해야 한다. 예비교사의 시민성 및 민주시민교육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사회·도덕 및 관련 교과(역사, 과학, 실과, 음악, 미술 등)를 포함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비전과 민주적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이 먼저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은 폭력사회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줄이는 역할을 실천해야 한다. 학교는 불가피하게 폭력사회 속에서 폭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화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10) 공중의 탄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

시민성의 공동화(空洞化), 공공성의 쇠퇴, 공중의 대중화 현상이 만연되면 개인적 삶에 매몰된 사람들, 곧 ‘愚衆’으로 변질되므로 이런 대중은 날개의 균중이나 다름없게 된다. 따라서 민주적 ‘公衆(publics)’이 탄생되어야 한다(Dewey, 1927). 민주주의는 제도의 차원을 넘어 민주적 삶의 양식을 내면화한 교양시민인 공중이 출현해야 구현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적 공중을 탄생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단초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나 ‘마그데부르크선언’처럼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제 3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실천 선언을 필요로 한다. 이 실천 선언을 계기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사회에 민주주의 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은 더욱 절실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교육이 기성질서에 순응적인 신민(臣民)형 인간을 양산해온 것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학교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주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촛불 혁명 이후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 과제는 민주적 제도 및 문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제도와 문화를 구현하지 않으면 또 다시 과거의 권위주의 또는 파시즘 체제로 돌

아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더욱 민주적인 시민성 교육 및 학습을 필요로 한다. 에릭 리우와 닉 하나우어가 ‘민주주의의 정원’에서 강조하듯 훌륭한 정원은 나쁜 것을 쫓아내고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고 하였다. 행동하는 대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민주주의 정원이 되려면 민주적 시민성을 구현하는 공동체의 정원을 나날이 가꾸어야 한다. 시민의 광장 민주주의는 가정 민주주의, 직장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로 진화·발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재탄생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옥, 1986. 『칸트 교육사상 연구』. 집문당.
- 김정인, 2015.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책과 함께.
- 김세희, 2019. ‘푸코와 자기 배려의 주체’, 이윤미(외), 『비판적 실천을 위한 교육학』. 서울: 살림터.
- 심성보, 2011.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서울: 살림터.
- 심성보, 2012. ‘공동체로서의 민주적 공동체 만들기’,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연음),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살림터.
- 심성보, 2014.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서울: 살림터.
- 심성보, 2014. ‘더불어 사는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연음),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혁명』. 서울: 살림터.
- 심성보 외, 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북멘토.
- 심성보, 2019. ‘관계의 상실과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의 요청’,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연음),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서울: 살림터.
- 심성보, 2019.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연음),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서울: 살림터.
- 이윤미, 2019. ‘변스타인의 교수기제와 교육에서의 거시-미시 구조’, 이윤미(외), 『비판적 실천을 위한 교육학』. 서울: 살림터.
- 이정우, 2009.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 장은주, 2007. 『생존에서 존엄으로: 비판이론의 민주주의이론적 전개와 우리 현실』. 나남.
- 장은주, 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피어나.
- 장은주, 2019.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연음),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살림터.
- 정창우, 2019.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교육과학사.
- 조나영, 2019. ‘호네프와 상호 인정을 위한 교육’, 이윤미(외), 『비판적 실천을 위한 교육학』. 서울: 살림터.
- 진태원, 2019.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그린비.
- 홍은영, 2019. ‘안네 프랑크 교육기관 사례로 본 독일 학교 밖의 정치교육의 특징과 과제’,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연음),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서울: 살림터.
- Abowitz, K. K. 2013. *Publics for Public schools: Legitimacy, Democracy, and Leadership*. New York: Routledge.
- Apple, M. 강희룡 외 옮김(2014).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서울: 살림터.
- Arthur, J.(2008). Traditional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in Britain and America. L. P.

- Nucci & Narvaea(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N.Y. and London: Routledge.
- Bailin, S. & Siegel, H. 강선보의 옮김, 2009. ‘비판적 사고’, 『현대교육철학의 다양한 흐름』, 학지사.
- Banks, J. 방명애·김혜인 옮김, 2014. ‘다양성, 집단정체성,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의 세계동향』. 시그마프레스.
- Barber, B. 1984. 박재주 옮김, 1992. 『강한 민주주의』. 인간사랑.
- Barber, B. 이선향 옮김, 2006.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일신사.
- Barber, B. 1995. The Future of Civil Society. <http://civnet.org/civitas/barber.html>.
- Bernstein, B.(2000). *Pedagogy, Symbolic Control, and Identity: Theory, Research, Critique*. Oxford: Rowman and Littlefield.
- Biesta, G. 2002. How General Can Bildung Be?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a Modern Educational Ideal.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3). 377-390.
- Biesta, G. 2006. *Beyond Learning: Democratic Education for a Human Future*. Boulder·London: Paradigm.
- Biesta, G. 2010. *Good Education in an Age of Measurement: Ethics, Politics, Democracy*. Boulder: Paradigm.
- Biesta, G. 2011. *Learning Democracy in School and Society: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Sense.
- Biesta, G. 2014. Learning in Public Places: Civic Learn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iesta, G. Bie, M. & D. Wildemeersch (Eds). *Civic Learning,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Public Sphere*. Leuven: Springer.
- Carr, W. & Hartnett, A.(1996). *Education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The Politics of Educational Idea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hamber, S. 김성준 옮김, 2019. 『랑시에르의 교훈』. 그린비.
- Dewey, J. 1916, 이홍우 옮김. 1993.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 Dewey, J. 충남기 옮김, 2010.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 주체의 문제: 듀이의 민주주의론』. 씨아이라.
- Edwards, M. 서유경 옮김, 2018. 『시민사회』. 명인문화사.
- Engster, D. 2017, 김희강·나상원 옮김, 2017. 『돌봄: 정의의 심장』. 박영사.
- Ennis, R. H. 1992. The Degree to which Critical Thinking is Subject sPecific, S. P. Norris(Eds.). *The Generalizability of Critical Thinking*. Teachers Colledge Press.
- Entwistle, H. 1993. 『민주주의와 정치교육』. 목원대학교출판부.
- Elias, J.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옮김, 2014. 『플레이리와 교육』. 살림터.
- Fletcher, C. 1987. The Meanings of 'Community' in Community Education. G. Allen, Bastiani, J.

- I. Martin, K. Richards.(Eds.). *Community Education: an Agenda for Educational Reform*.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Foucault, M. 심세광 외 옮김, 2016. 『비판이란 무엇인가: 지기수양』. 동녘.
- Foucault, M. 심세광 옮김, 2007.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 Foucault, M. 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 옮김, 2017. 『담론과 진실』. 동녘.
- Fraser, N. & Honneth, A. 김원식·문성훈 옮김, 2014. 『분배냐, 인정이냐?』. 사월의책.
- Fraser, E. & Lacey, N. 1993. *The Politics of Community: A Feminist Critique of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Harvester/Wheatsheaf.
- Freire, P. 1970, 남경태 옮김, 2002. 『페다고지』. 그린비.
- Gerrard, J. 2015. Counterpublics, Crisis and Critique: A Feministic Socio-Historical Approach to Researching Policy. N. Kalervo, M. Clarke, & E. B. Petersen (Eds.). *Education Policy and Contemporary Theory: Implications for Research* London & New York: Routledge.
- Giddens, A.2000.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Global Era. N. Pearce, & J. Hallgarten(Eds.). *Tomorrow's Citizens: Critical Debates in Citizenship and Education*. IPPR.
- Giroux, H. 2005. *Schooling and the Struggle for Public Lif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arris, K. 광덕주 외 옮김, 2010. '시민교육', W. Kohli, 『다문화 시대 대화와 소통의 교육철학』. 학지사.
- Held, D. 박찬표 옮김, 2015. 『민주주의의 모델들』. 서울: 후마니타스.
- Honneth, A. 2007. *Disrespect: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Critical Theory*. Polity.
- Honneth, A. 2012: *The I in We: Studies in the Theory of recognition*. Polity.
- Honneth, A. 문성훈·이헌재 옮김, 2014.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 책.
- Huttunen, R. 2009. *Habermas, Honneth and Education*. Lambert.
- Jung, C. 김세영·정명진 옮김, 2016. 『인격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부글.
- Kymlicka, W. 2003. Two Dilemma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Pluralistic Societies. A. Locker, B. Crick & J. Annette(Ed.).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ssues of Theory and Practice*. Hamshire: Ashgate Pub.
- Kymlicka, W. 장동진 외 옮김, 2005.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주의, 시민권이론,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동명사.
- Marshall, T. H. 김윤태 옮김, 2013. 『시민권과 복지국가』. 이학사.
- Martin, I. 1987. Community Education: towards a Theoretical Analysis. G. Allen, Bastiani, J. I. Martin, K. Richards (Eds.). *Community Education: an Agenda for Educational Reform*.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Maynor, J. W.(2003). *Republicanism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 McCowan, T. 2009. *Rethinking Citizenship Education: A Curriculum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ondon: Continuum.

- McCowan, T. 이지현 옮김, 2011. ‘학교는 좋은 시민을 만들 수 있는가’, R. Bailey(편), 『철학이 있는 교육, 교육을 찾는 철학』. 학이당.
- McCowan, T. & Unterhalter, E.(2013). Education, Citizenship and Deliberative Democracy: Sen’s Capability Perspective. R. Hedtke & T. Zimenkova(Eds.). *Education for Civ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 Critical Approach*. New York: Routledge.
- Mouffe, C. 이보경 옮김, 2007.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
- Nodding, N. 심성보 옮김, 2016.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개인적 삶, 직업적 삶, 그리고 시민적 삶을 위한 교육』. 살림터.
- Nodding, N.정창우·김윤정 옮김. 2018. 『논쟁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풀빛.
- Nussbaum, M. 2004.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 Nussbaum, M. 정영목 옮김, 2018. 『인간성 수업-새로운 전인교육을 위한 고전의 변론』. 문학동네.
- Nussbaum, M. 한상연 옮김, 2015. 『역량의 창조』. 돌베개.
- Nussbaum, M. 우석영 옮김, 2016.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궁리.
- Olson, K. 문현아 외 옮김, 2016.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그린비.
- Portelli, J. P. & Menashy, F. 2010. 이지현 옮김. ‘교육의 목적: 개인과 공동체’. R. Bailey & R. Barrow, C. M. Carthy, 『교육철학 2: 가치와 철학』. 서울: 학지사.
- Rancie’re, J. 허경 옮김, 2011.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인간사랑.
- Reid, A, Gill, J. & Sears, A.(Eds.)(2010). *Globalization, the Nation-state, and the Citizen: Dilemmas and Directions for Civics and Citizenship Education*. London: Routledge
- Roberts, P. 2013, *Paulo Freire in the 21st Century: Education, Dialogue, and Transformation*. Boulder: Paradime.
- Sandel, M. 안규남 옮김, 2012. 『민주주의의 불만』. 동녘.
- Sandel, M. 이목 옮김, 2011.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명강의』. 김영사.
- Sant, E., Davies, I., & Shultz, L. 2018.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to Key Concepts and Debates*. London/New York: Bloomsbury.
- Sergionvani, T. 1999. The Story of Community. Retallick, J. Cocklin, B. & Coombe, K. (Eds.). *Learning Communities in Education: Issues, Strategies and Contex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tein, Z.(2016). *Social Justice and Educational Measurement: John Rawls, the History of Testing. and the Futuer of Education*. Oxon: Routledge.
- Taylor, C. 권기돈·허주영 옮김, 2015. 『자아의 원천들』. 새물결.
- Thayer-Bacon, B. 2013. *Democracies Always in the Making: Historical and Current Philosophical Issues for Educ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 Tronto, J. 김희강·나상원 옮김, 2014. 『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 아포리아.
- Ueno, M. 2016. *Democratic Education and the Public Sphere: Towards Dewey's theory of Aesthetic Experi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Unger, R. 이재승 옮김, 2019. 『비판법학운동: 새로운 시대의 과업』. 엘피.
- Villa, D. 2017. *Teachers of the People: Political Education in Rousseau, Hegel, Tocqueville, and Mill*.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lzer, M. 최홍주 옮김, 2009. 『정치철학 에세이』. 모티브북.
- Westheimer, J. & Kahne, J. 2014. Education in Good Citize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7(2). 242-269.
- Wright, O. R. 권화연 옮김, 2012. 『리얼 유토피아』. 들녘.
- Wrigly, T., Thomson, P., & Lingard, B. 2012. *Changing Schools: Alternative Ways to World of Differ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Young, M. A. 허라금 외 옮김, 2018.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이화대출판문화원.
- Young, M. & Muller, J. 2016. *Curriculum, and the Specialization of Knowledge: Studies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Zurn, C. F. 2015. *Axel Honneth*. Polity.
- 전득주(2000)독일의 정치문화와 정치교육: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학회보, 5
- Rittel, H., & Webber, M.(1973). Dilemmas in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4
- 이다현(2018). 비판적 사고 촉진을 시민교육 실천 원리 탐색.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Mathews, D.(2009). Ships passing in the nigh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and engagement*, 13(3)

<부록>

인터뷰 질문지

영역	질문
기본질문	성별, 연배, 활동영역, 연차
민주주의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이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 시민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시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시민성은 무엇인가요? ● 기존 시민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 소양으로서 일장에서 실현 가능한 것 세 가지만 든다면? ● 각각의 이유는? 그 덕목이 한국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시나요? ● 현장에서 시민성 실현이 가장 부딪히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 각각의 덕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본인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 실현을 위해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그러한 덕목을 교육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활동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에서 (각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인가요? ●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에서 쌓아온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 (각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 그러한 난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 활동현장에서는 각 현장에 맞게 질문을 보완함